

2023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및 북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I |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10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13
1.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징	15
2. 북한 체제의 경제적 특징	17
3.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징	20
제3절 북한 체제의 현황	23

II | 북한 정치

제1절 정치체제	28
제2절 통치이념	34
1. 주체사상	35
2. 선군사상	40
3. 김일성-김정일주의	43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46
1. 권력구조	46
2. 노동당	49
3. 중앙 국가기관	71
제4절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82
1. 김정은 체제의 형성	82
2.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84

III | 북한 군사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90
제2절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93
1. 김일성 시기	93
2. 김정일 시기	95
3. 김정은 시기	97
제3절 지휘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102
1. 지휘체계	102
2. 군사력 구성	107
3. 복무 및 계급구조	115
4. 북한 군사력의 특징	120

IV | 북한 외교

제1절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32
1. 북한 외교이념과 정책	132
2. 북한 외교정책 결정구조	134
제2절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136
1. 김일성 시기	136
2. 김정일 시기	140
3. 김정은 시기	144
제3절 북한 외교관계의 전개	149
1. 미국과의 관계	149
2. 일본과의 관계	156
3. 중국과의 관계	160

4. 러시아와의 관계	165
5. 유럽연합(EU)과의 관계	169
6.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173

V | 북한 경제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정책기조	180
1. 경제체제의 특징	180
2. 경제정책의 기조	183
제2절 거시 및 부문별 현황	187
1. 거시경제 현황	187
2. 부문별 현황	194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209
1. 시장화와 대내 경제정책	209
2. 대외 개방정책	218

VI | 북한 사회

제1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226
1. 북한 사회의 특징	226
2. 북한 사회의 변화	230
제2절 주민생활	236
1. 조직생활	237
2. 의식주	239
3. 여가와 명절	244
4. 보건·복지	248

제3절 인권	252
1.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253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259
3.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	262

VII | 북한 문화·예술

제1절 문화·예술	266
1. 문화·예술 정책	266
2. 문화·예술의 실제	271
제2절 언론출판	303
1. 신문·잡지	304
2. 방송	312

VIII | 북한 교육

제1절 교육정책과 제도	316
1. 교육정책	316
2. 교육제도	320
제2절 교육과정과 내용	330
1. 교육과정	330
2. 교육내용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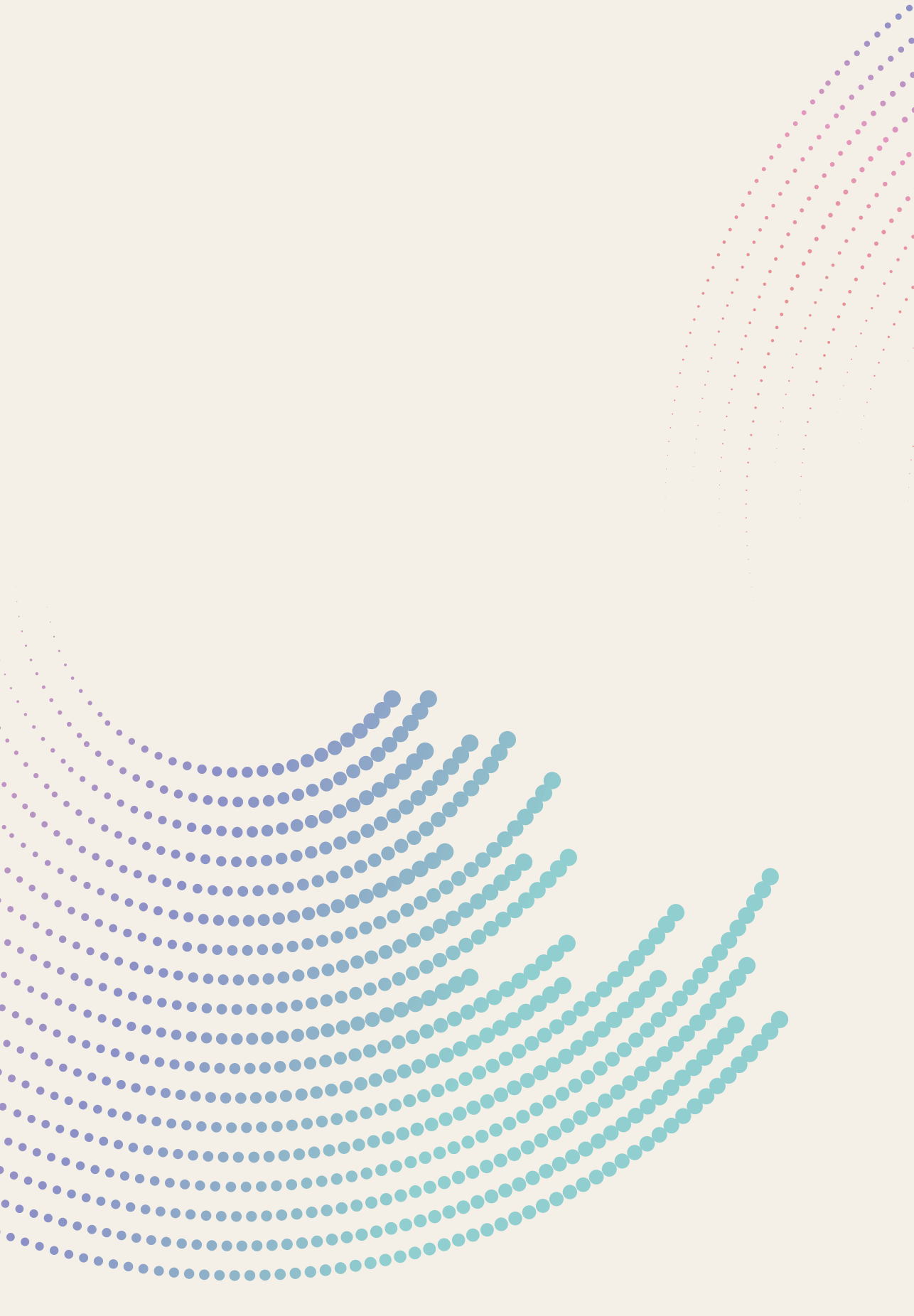
그림

[그림 2-1] 노동당 기구	53
[그림 2-2] 정권기관	80
[그림 3-1]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105
[그림 3-2]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112
[그림 3-3] 북한군 계급장(견장)	119
[그림 3-4] 북한이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125
[그림 5-1]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210
[그림 5-2]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220
[그림 5-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222
[그림 8-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319
[그림 8-2] 북한의 학제	322

표

[표 2-1] 주체사상체계의 형성 과정	38
[표 2-2] 노동당의 형성 과정	49
[표 2-3] 당대회 개최 현황	54
[표 2-4] 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56
[표 3-1] 북한의 4대 군사노선	94
[표 3-2] 남북한 군사력 비교('22.12월 기준)	108
[표 3-3] 남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현황	109
[표 3-4] 남북한 해군의 주요 함정 현황	111
[표 3-5] 남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111

[표 3-6]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115
[표 3-7]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122
[표 4-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51
[표 4-2] 남북 수교 현황('22.12월 기준)	177
[표 5-1] 북한 국민총소득 추이	188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89
[표 5-3] 북한의 주요 산업성장률 추이	191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195
[표 5-5]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201
[표 5-6] 연도별 북한의 대중·전체 수출입 및 무역수지	204
[표 5-7]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206
[표 5-8]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 쌀 가격	212
[표 5-9]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 환율	212
[표 6-1] 북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232
[표 6-2] 북한 주민의 시기별 의류 구입처	240
[표 6-3] 북한 주민의 시기별 주택 마련 방법	242
[표 6-4] 북한 사회의 살림집 형태와 세대 식구 수(2008년)	243
[표 6-5] 북한 사회의 공휴일	247
[표 6-6] 북한 사회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251
[표 6-7]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263
[표 8-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321
[표 8-2] 북한 보통교육의 분류	323
[표 8-3] 북한의 특수교육 기관	325
[표 8-4]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331
[표 8-5]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333
[표 8-6]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335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제3절 북한 체제의 현황

제 1 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남북한은 같은 역사와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하며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같은 민족 공동체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하에서 해방되자마자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냉전적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체로 나뉘어진 70여년 동안, 남북한은 체제 경쟁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해 왔다. 때문에, 북한은 민족적 시각에서는 동포이면서,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이다.

하지만 장기화된 분단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는 다른 정치체제로서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에게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보다는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느끼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

다. 장기적인 국토 분단은 내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처럼 북한이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보관과 대북관을 견지해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미사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은 북한 당국에 의해 소개되는 허구적인 북한사회와, 실제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현실로서의 북한이 있다.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보여 주는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 평화,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 2 절

북한 체제의 특징

북한의 정권과 체제 수립은 해방 이후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 지배체제, 국가소유 제도,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런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 진전 과정에서 주체사상 등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소련의 사회주의와 다른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지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체제 등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수령 중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등 북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틀에 견주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만의 고유한 것으로서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논쟁이 되어 왔다.¹

북한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당·국가체제²인 동시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절대권력 체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런 북한 체제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이 지닌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1 대부분의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는 수령 1인의 절대권력 향유와 세습권력이 지속되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국가 성격을 신정체제, 유일지배체제, 유격대 국가체제, 수령체제,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극장국가 등의 개념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신정체제: 북한 지도자의 절대 권력은 초인적인 것으로서,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김일성교'라는 특이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국가로 규정
- 유일지배체제: 북한은 권력이 최고지도자인 수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하나의 틀로 편제되어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정치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
-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고 그들의 가족과 조선노동당, 빨치산파, 관료, 지식인·전문인, 사무원, 프롤레타리아, 농민이 하향식으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한 사회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
- 유격대 국가체제: 지도자 김일성은 유일한 최고사령관이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이 되는 북한은 공산당, 국가, 사회단체가 일체화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
- 수령체제: 북한은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소련형의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수령체제로 규정
- 극장국가: 북한의 정치권력은 대중적 사회동원과 정치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노래, 연극, 영화, 군중 집회와 대규모 행사 등 다양한 선전양식의 보급을 통해 유지되는 일종의 극장국가로 규정

2 당·국가체제는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 1당 독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을 장악한 1당이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여타의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으며 모든 정책도 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1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징

북한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이며 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이다. 초창기 북한의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러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였고, 이러한 통치이념은 북한식 수령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했으며, 2019년 4월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대체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밝혔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북한 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 최고지도자(수령)가 균립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이다.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해

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당의 '최고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³

북한의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한정된 칭호이다. 2016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2019년 4월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로서의 권한

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이 1986년 제시한 것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논리이다.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국립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사전』, 2021, pp. 406-408.)

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같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어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2 북한 체제의 경제적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로 개념화하고 있다.⁴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에 해당된다. 개인 소유물은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되고 있다.⁵

북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다. 즉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4 『백과전서』(제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530.

5 북한의 개인 소유의 범위는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개인 발(소토지) 경작물, 장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재산 수입 등을 개인 소유의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자체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 경제지표(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 지표 등) 이외에는 해당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장·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방식을 강조하였고 주민들은 장마당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고,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시장과 상점에서의 생필품 구입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제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6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북한 계획경제 체제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방침이며, 북한은 1964년에 계획의 일원화를, 1965년에 계획의 세부화를 도입하였다.(국립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사전』, 2021, pp. 38-41.)

7 ‘평균주의 타파’와 ‘변 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 하에서 시행된 조치로서,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격을 인상하여 농민시장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으며 그 중에서 군인과 중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셋째,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넷째, 경제계획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일정 부분 이관하였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2004년에는 사실상 가족 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⁸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專賣制) 도입 이후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이 조치들이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켜 그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면서, 북한은 2010년 2월 경부터 다시 시장 활동 허용과 외환사용 목인 등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합법적인 공식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북한은 확대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인정하고 시장을 국가 관리 하에 두기 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조치⁹를 단행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2013)를,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2014) 등을 통해 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조치였다. 최근 북한은 2019년 개정 헌법에서

8 2004년 시범 실시한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3~4명으로 축소하여 포전(일정 규모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9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 『조선신보』, 2012.6.28.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¹⁰를 삭제하는 대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¹¹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시장이 일부 허용되는 이원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3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징

북한 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구축된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¹²

이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면으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이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10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 체계, 즉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려는 공업관리 형태이다.

11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그동안 시범 실시되었던 여러 조치들을 종합하여 2014년 5월 30일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5.30담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여 계획과 경영권한을 기관과 공장, 협동 단체에 대폭 이관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되었다(2장 제 33조, “국가는 경제 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12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국립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사전』, 2021, pp. 432-433.)

것을 요구하며, 이런 구성원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의 전일적 통일체’라는 전체주의적인 개념과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세계에 위계서열화된 사회적 관계를 내면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당 조직과 근로단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 간부가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했고, 주민 전체가 만 7세부터 65세까지 참여해야 하는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적 삶의 방식을 내재화시켰다.

학교와 직장에서 일과 후 참여하는 소조 활동은 개인별 장기와 재능을 장려하는 취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체화하고 개인생활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매주 진행되는 정치조직 생활총화를 통해 당 정책 및 집단주의 원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일상화해왔다. 이처럼 집단과 조직을 우선시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당연시하는 인간의 권리인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는

물론 생명권, 평등권, 그리고 이동 및 거주 자유 등이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북한 경제가 일부 시장화되면서 집단우선의 사회적 성격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난을 거치며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립적 생존방식이 늘어나고 시장 확산에 따른 외부사조가 유입되면서 북한 체제에 불신을 표출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체제이탈 및 반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사상교양 및 조직생활 통제를 통해 외부세계 동경이나 체제불신을 차단하려는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교육에 대한 열의나 자유에 대한 관심 등 개인적 열망을 주요 탈북 동기로 밝히는 경우가 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위계서열화된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라는 북한 사회구조의 기반이 아래로부터 균열되고 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제 3 절

북한 체제의 현황

북한의 현재 상황은 건국 이래로 이어져 온 체제의 성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변화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수령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에 기반하여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적 특징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시장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 등 북한 체제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 전환과 중국,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이라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기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12년부터 김정은 시대를 맞이한 북한체제는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경제·핵 병진노선’(2013년)을 제시한 이후 핵 무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체제 공고화를 시도해왔으며 2017년 11월 정부 성명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료 및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노선’을 선언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개정 헌법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명시하였으며 ‘실리보장’ 등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공식화하고,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는 경제회생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개혁함과 동시에, 대외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한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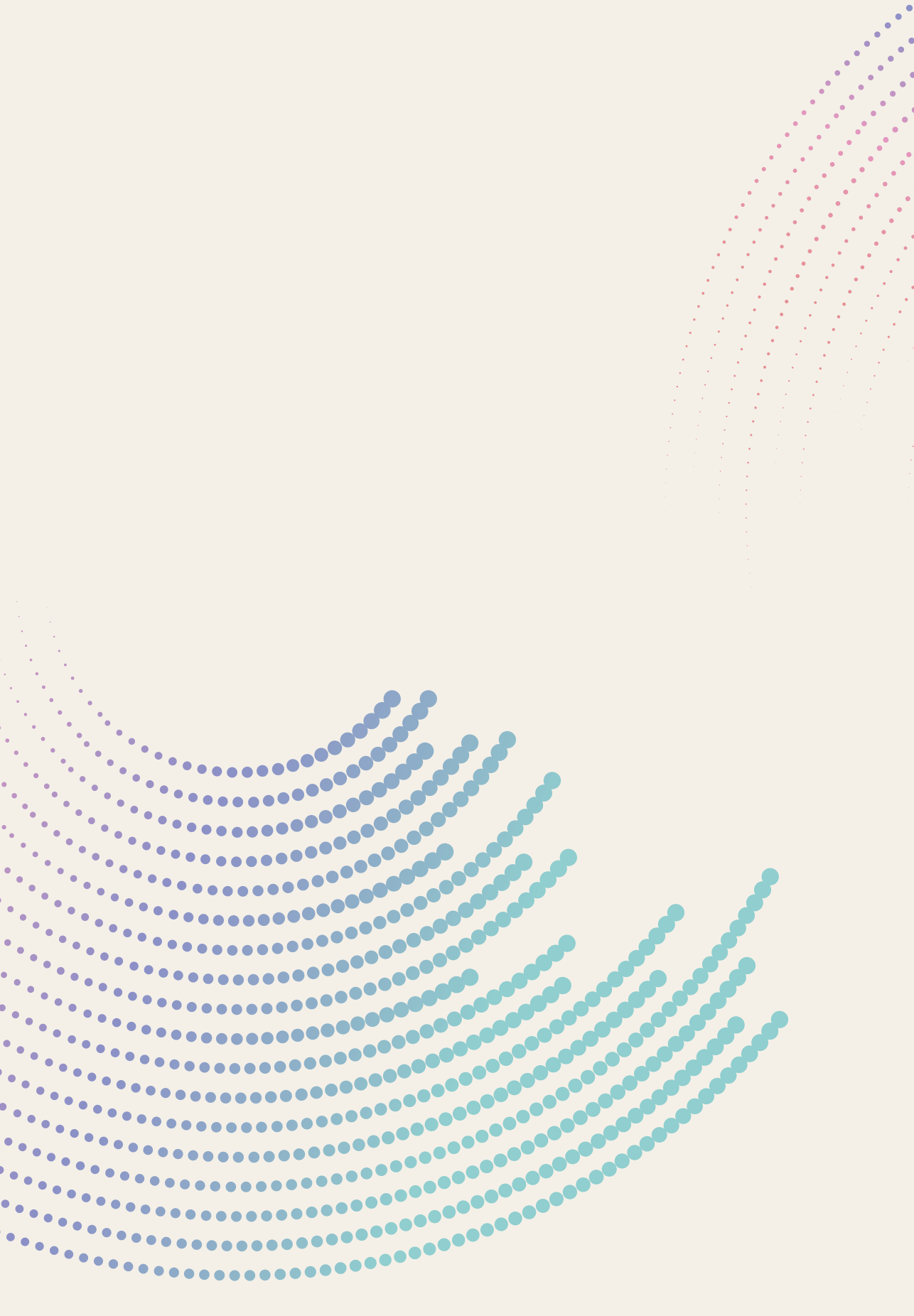
2020년 북한 당국은 ‘자력부강’, ‘자력번영’¹⁴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가중된 위기국면의 ‘정면돌파’를 선언하였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조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전면에 내세웠다.

13 경제·핵 병진노선의 개혁과 관련, 경제회생이라는 목표와 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선전 차원에서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핵무력 건설에 보다 집중한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14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의 본격적인 모색을 내세웠다. 2019년 12월 수일간에 걸쳐 진행된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서 ‘정면돌파전’을 제시했고, 김정은은 연설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북한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자립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장 아래 과학과 교육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건설이라는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022년 9월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핵무기 운용과 통제 및 사용 관련 원칙을 공표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의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발전’을 목표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방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열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김정은은 대북경제제재, 코로나19, 그리고 자연재해를 삼중고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2020년 -4.5%에 이어 2021년에도 -0.1%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빈부격차의 심화 등 대중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 수치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신냉전체제로 접어든 국제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보다 경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북한 정치

제1절 정치체제

제2절 통치이념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제4절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제1절

정치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 항복 이후 북한 체제가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소련군의 북한 지역 점령이 크게 작용했다. 소련군의 주도 하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의’를 거쳐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1946년 2월 공산주의자들은 중앙 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7년 2월에 입법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창립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 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였다. 이후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9월 2일~10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

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최종 채택(9.8.)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9.9.)했다.

6.25전쟁(1950-53년)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전후 복구와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¹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 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비판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복구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와해된 경제·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이 되었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화 또는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

1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주도자들이 도피하거나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권력기반을 단일화하고 공고히 하였다.

로 군중 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군중 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², 그리고 1961년에 제시한 ‘대안의 사업체계’³ 등이 있다.

1960년대 김일성은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다. 이후 북한은 절대권력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유일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 중심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새롭게 설립된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

2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은 1950년대 후반에 제시된 북한의 경제 분야의 기본적 지도방법이다. 상하급 기관과 위아래 사람이 서로 도와 당 노선을 관철하고, 현지 실정에 기초해 해결 방도를 세우고, 정치사업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3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경제관리 운영에 당적 지도를 도입한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을 말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 체계를 뜻한다.

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유일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하였다.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 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또한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 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 체제였다. 군사중심 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 시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한편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등장하였다. 이후 북한 정권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2011.12.29.)에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격상되었고,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12.30.)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를 선언하고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추대되었고 6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에 올랐다. 그리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

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적 권력에 종속되는 독재 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 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현재 제도화된 직위인 노동당 총비서와 국무위원장을 포괄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서는 당이 수령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 체계, 유일영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20세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전제했던 당의 지도적 역할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북한은 수령영도체계는 곧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이며, 당의 영도적 지위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 절대적 권위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당 지배체제’라기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독재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수령의 무오류성에 대한 입장과는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제 2 절

통치이념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은 1950년대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 및 1960년대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제시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종식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

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통해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명시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무력을 통한 통일과 더불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 했다.

1 주체사상

1) 성립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유일사상 체계 확립 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접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논리로서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소련에서 흐루쇼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노동당 내 1인 지배체제 비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이념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주체사상으로 표출되었다.

2) 내용적 변화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체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 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 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영

도 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수뇌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위한 논리로서 만들어졌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 들어서 김정일의 주체사상 해석권 독점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는 등 이론적 체계화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논리로 기본원리가 확장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3) 한계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념적 구호에 치중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시기 이후 실제로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위기로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위치를 갖고 있기는 했으나, 이후 북한은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 구호들을 내세워 체제 안정화 및 생존 논리로 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수립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위기극복 및 체제 생존을 위한 논리로 여러 가지 통치이념을 내세웠으나, 결국 이것들은 1인 독재체제를 강화시켜준 이념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하에서 인민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기보다는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였다.

북한은 2010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을 전면에 내세워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초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체제로 확립되었다. 체제 위기 극복 및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 기구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약화된 당의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은 19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숭배 중심의 정치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의 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 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체제에 매우 위협하다는 인식 하에 김정일 정권은 체제 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 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핵개발로 인한 대외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된 북한의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 논리를 강화하는 내적 요인이었다. 남북한 체제 경쟁과 대결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북한이 군사 부문을 내세워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또 다른 배경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의 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김일성의 빈자리를 채우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대안적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김정일은 체제 고수와 함께 주체사상의 수령 유일체제 정당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을 제시했다.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었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

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웠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상은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체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규범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선군사상이 대두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신설되었던 중앙인민위원회는 1998년 폐지되고, 전시기구였던 국방위원회가 행정기관화되면서 국방위원회는 행정 분야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나라의 전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의 군의 위상과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 등을 고려하여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 시 ‘공산주의’에 관한 용어를 삭제하였다. 반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문화하고, 동시에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유일지배 이념화는 결국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김일성-김정일주의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라고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4월과 2016년 5월, 2021년 1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 앞서 발표한 ‘4.6 담화’⁵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이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 보도(2014.4.24.)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5 2012년 4월 권력승계 시점에 발표한 김정은 명의의 최초의 노작으로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로 발표되었다.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북한 정권으로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적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치논리로 구현하는 실천담론으로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담화(2012.7.26.)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의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 결속과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0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5대 사상교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5대 사상교양’은 2014년 말부터 등장한 용어로 김일성 가계의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일컫는다.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서 5대 교양을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에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조국변영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⁶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6 『노동신문』, 2016.3.10.

이후부터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⁷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당 대회와 기본정신”이며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 표현하였다.⁸ 2017년에도 북한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최고 정화”⁹로 표현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 애국주의’를 체제 구현의 이념으로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19년에 들어와 신년사에서부터 주체사상의 기초 위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¹⁰를 제창해 왔으며, 2020년 자력갱생 기초 아래 집중 부각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¹¹와 함께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통치담론으로 집중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으로 제시하였다.

7 『노동신문』, 2016.5.17.

8 『노동신문』, 2016.5.13.

9 『노동신문』, 2017.10.1.

10 2019년 신년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핵심”으로 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로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 부흥시대”에 걸맞는 “천하제일 강국”을 만들겠다는 담론이다. 『노동신문』, 2019.1.8.

11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3년 1월 29일 김정은의 제4차 조선노동당 당세포비서대회 연설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 김정은 연설). 『노동신문』, 2013.1.30.

제 3 절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 권력구조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제인 당-국가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당-국가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첫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하나의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둘째, 국가와 사회에서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을 인정한다. 셋째,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 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장악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¹²에 기초하

12 북한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원칙 또는 그런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제도’, ‘위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창발성을 결합시키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1980)과 사회주의 헌법(1998)에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여 국가를 조직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공산당의 정책 결정 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정책’으로 불리우며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력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권력 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잇는 세습 후계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체제로 전환되었던 권력구조를 김일성 시대의 당-국가 체제를 기본 구조로 삼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였다. 1980년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처럼,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시킴으로써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에서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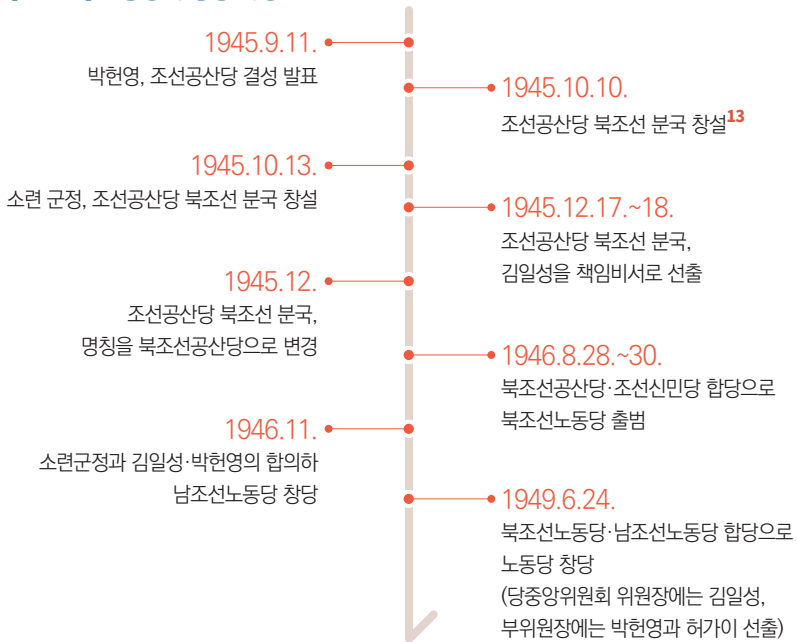
정은 중심의 국가체제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및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시기 1998년 헌법과 2009년 개정헌법에서 규정한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 체제로부터 벗어나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2016년 들어 김정은의 권력 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당직과 국가직 모두가 변화되었다. 먼저 당직 변화로서 제6차 당대회(1980.10.) 이후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2016.5.)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에서 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당 비서 체제로 다시 환원시켰으며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국가직 변화로서 헌법 개정(2016.6.29.)을 통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였다. 2019년에는 다시 헌법을 두 차례 개정(2019.4.11., 8.29.)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1) 위상과 성격

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수령의

[표 2-2] 노동당의 형성 과정



13 조선노동당은 1949년 6월에 창당되었으나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모체가 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1945년 10월 10일에 결성되었다고 해서 이 날을 '당창건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45년 10월 10일은 조선공산당 이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이 기초연설을 한 날이며, 북조선분국이 이 대회에서 채택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에 창설되었다.

당^黨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당 규약 전문 개정 시에는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서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은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내세움으로써¹⁴ 정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도 지침으로 밝히고 있다. 더불어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14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확인하고 ‘선군정치’를 대신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2019년 8월 29일 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관련하여 2021년 1월의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수령의 유일영도 체계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당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 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지배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2) 조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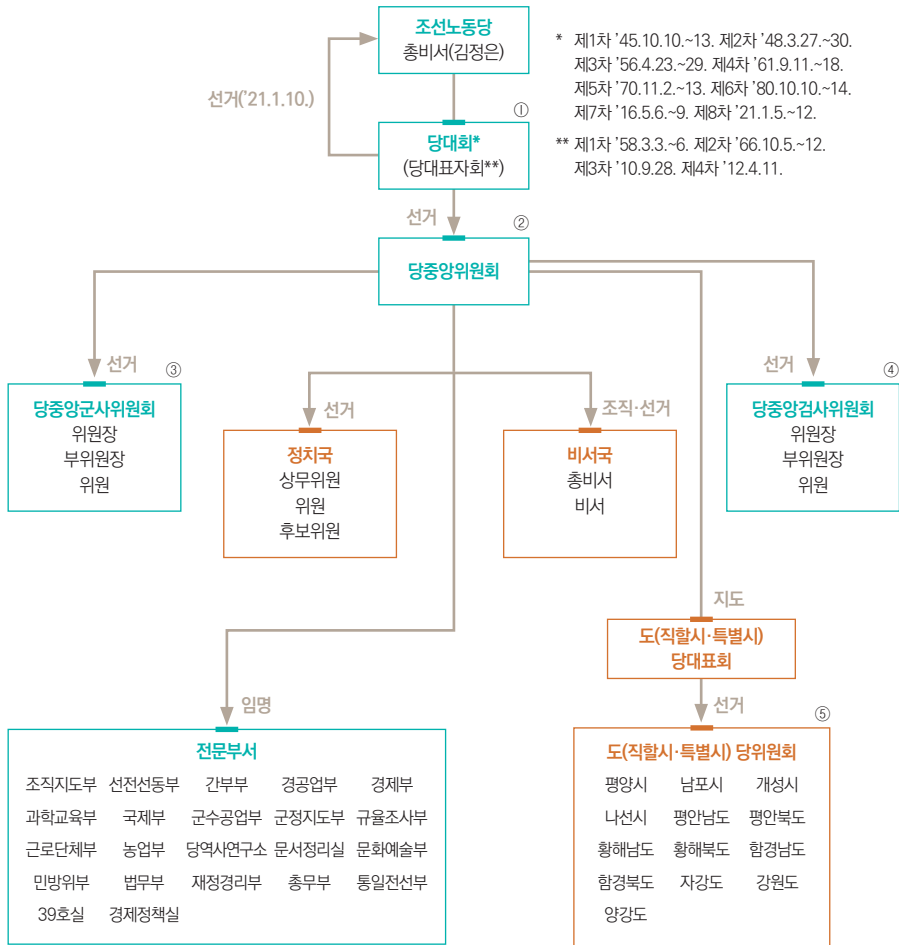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당중앙위원회 산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한다.

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 이념 강조, 당 총비서의 절대적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와 당대표자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이다. 당대회에서

당(黨)



부서배열 순서: 조지지도부·선전선동부·경제정책실 외에는 가나다순

- ① 당대회(5년에 1회)·당대표자회: 당 노선·정책 수립, 강령·규약 채택, 총비서 추대, 각종 당사업 토의
- ② 당중앙위원회: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 당의 재정 관리(전원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
 - 정치국: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
 - 비서국(舊 정무국): 당 내부사업 등을 토의·결정, 집행을 조직·지도
- ③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 당의 군사 노선·정책 수립 및 국방사업 지도
- ④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의 재정관리 사업을 감사, 당조직 규율 감독·조사·심의, 신소청원 처리
- ⑤ 도당대표회: 당의 도조직의 최고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도당위원회가 5년에 한번씩 소집

[그림 2-1] 노동당 기구

※ 통일부, 「북한 권력기구도」, 「북한정보포털」.

는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총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2016년 7차 당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36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북한 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표 2-3] 당대회 개최 현황

제1차	1945.10.10.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창건 선포 • 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채택
제2차	1948.3.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3차	1956.4.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 당규약 개정(맑스 레닌주의를 당활동 최고 지침으로 제시)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15 북한은 2015년 9월에 노동당 창건을 기념하여 발간한 『조선을 이끌어 70년』과 2016.1.23.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1945.10.10.~13.)를 자신들의 제1차 당대회로 밝히고 있다.

제4차	1961.9.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 당규약 개정(당 지도이념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추가)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5차	1970.1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 당규약 개정(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6차	1980.10.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제7차	2016.5.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당규약 개정 • 김정은 당 최고수위(노동당 위원장) 추대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정무국 개편)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8차	2021.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 • 당규약 개정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비서국 개편)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7차 당대회(2016.5.6.~9.)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최고수위의 명칭을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편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당 규약에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명시하고 당원·당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2020.8.19.)를 통해 제7차 당대회 개최 이후 5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소집 결정을 발표하였다. 제8차 당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제8차 당대회 구호로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3대 이념을 제시하였고,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난 타개 관련, ‘신전략’을 지속적



제8차 당대회(2021.1.5.~12.)

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핵무력 고도화, 국방공업 발전 등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롭게 내놓았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상의 경제전략을 단계적인 차원의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규정했다.

[표 2-4] 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제1차	1958.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 당 조직 문제
제2차	1966.1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 당 조직 문제(당중앙위원회 폐지 및 총비서 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201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 김정을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 당규약을 개정(당대표자회에도 당규약 개정권한을 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201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을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회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비서국·당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김일성 시대의 당대표자회는 국제정세를 비롯한 당면한 대내외 정세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김정일·김정은 시기 당대표자회는 주로 권력승계 절차에 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당 시스템의 제도화와 효율성을 위해 당 규약 개정으로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당 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의 지위를 명기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최고 강령·정치방식으로 성문화하였고, ‘국방력’ 담보를 통한 통일과업 실현을 명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으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및 비서들,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며, 비서국을 조직하는 권한과 함께 당규약 수정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기에는 전원회의 자체가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을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3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제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궤 비서 선거 및 정무국^궤 비서국 조직,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7일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극복이 강조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인사가 시행되었다. 2018년 4월 20일에는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았는데,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2019년 4월 10일에 개최된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2020년 ‘5개년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총동원을 지시하고 ‘당-국가 일체화’ 방향에서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4차 전원회의를 가진 지 8개월 만인 12월 28일부터 31일간 북한은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자력갱생, 정치외교 군사적 담보, 당의 통제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고 대북 제재 국면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자주권과 생존권 보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한 당 조직 인사, 내각을 포함한 국가기관 인사 등 총 77명을 새로 선출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하였다.

2020년에는 제7기 제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8월 19일에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언급하여 경제성과 미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8차 당대회를 2021년 1월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는 1월 10일 개최되었고 당중앙위

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는 2월 8~11일에 개최되었고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2021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는 6월 15~18일에 개최되었으며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였다. 그리고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12월 27~31일에 개최되었으며 '21년 집행정형 총화 및 '22년 사업계획,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에 들어와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6월 8~10일에 개최되었고 2022년 상반기 정책집행 성과(건설 및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대외적 안보환경에 대해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하였다. 12월 26~31일에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2022년도 집행 정형 총화 및 2023년도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였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어들었고, 2023년도 건설분야 이외의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대적 투쟁"을 언급하고 신형 ICBM,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적 통제 강화 및 대규모 주민 노력동원 행사도 예고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하에서 정

치국은 사실상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정치국의 위상 변화는 후계 구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3차 당대표자 회(2010.9.28.)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또한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으로 새롭게 조직된 바 있다. 2018년 4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으며 미북대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19년 4월 9일에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예결산 토의 승인,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 결정 등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였다.

김정은 시대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2020년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처방안과 방역사업’에 대한 안건이 주를 이루었다. 북한이 2월 29일 보도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코로나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조치가 토의되었다. 이후 연이은 정치국 회의를 통해 북한은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지속 보강하였다. 이 밖에도 수해복구·태풍방지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제8차 당대회 소집 및 ‘80일 전투’ 진행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이 이루어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제27조).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 임면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였으며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제 28조)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4일에는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당과 국가정책 집행실태를 중간 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 생활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적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6월 29일에는 제2차 정치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국가비상 방역전’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9월 2일에는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가방역대책’ 강화와 식량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2020년 7월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을 포함해 최룡해, 박봉주 3인으로 구성되었으나,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조용원 5인체제로 변경되었다. 6월 29일 제2차 정치국회의 이후 리병철을 소환하고 9월 당 정치국 공보를 통해 박정천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표했다.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돌 행사를 계기로 리병철을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에 호명함으로써 김정은을 포함한 6인체제로의 변경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2022.12.26.~31.)에서 박정천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되면서 다시 5인체제로 변경되었다.

2022년에는 1월 18일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하였고, 5월 12일에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코로나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최대 비상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하였고, 이어 5월 17일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방역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리고 9월 25

일에 개최된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에서는 2022년의 농사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중요 결정서를 채택하였고, 11월 30일에 개최된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에서는 2022년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집행에 대해 분석하고 2023년의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제8기 6차 전원회의(2022.12.26.~31) 도중에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해 전원회의에 제출할 결정서·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23년 경제 중요조치 등을 결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과거 북한에서 당내의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권력기구는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였다. 그러나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수령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 및 제4기 제1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0.12.)에서 신설되었으며, 2016년 제7차 당 대회를 통해서 비서국은 정무국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에 따라 정무국이 다시 비서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2021년 비서국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20년에 정무국 회의는 3차례 개최되었다. 8월 5일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 회의가 개최되어 코로나19 관련 개성시 방역 문제를 다루었고, 8월 25일에 제7기 제5차 정무국 회의에서는 제8차 당대회 관련 실무적 문제(준비위 조직 등)를 다루었다. 9월 5일의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태풍 피해상황 청취 및 복구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2022년 6월 12일 비서국 회의가 개최되어 당내 규율 준수 기풍 수립과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회의에서 ‘총비서 동지(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요한 전략적 당 건설사상이 천명’되었다고 밝힌 것이다(노동신문, 2022.6.13.). 2022년 6월 27일에는 비서국 확대회의가 개최되어 각급 당 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 개선 정비와 정치활동 강화, 당중앙위원회 부서 기구 조정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비서국은 김정은 총비서와 조용원, 리영길, 리병철,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박태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 하는 ‘4대 군사노선’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단위에 각급 군사위원회를 두었다.¹⁶

2010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정책과 관련된 단독 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해 왔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부터는 사실상 당내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는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8.20., 8.27.)에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5월 1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으며, 여기서는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노선’ 관철에 군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였다.

2020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4차례 개최되었다. 5월 23일에 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방위력과 전쟁억제력 강화가 제시되었고, 6월 23일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는 전쟁억제력 강화가 제시된 바가 있다. 한편, 2021년 1월

¹⁶ 국립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사전』, 2021, p. 198.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 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는 정족수를 없애고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제30조)고 하여 유사시에 긴급하게 소수의 인원의 참석만으로도 군사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 규약 개정 이후인 2021년 2월 24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과업을 당조직과 정치기관에 강조했다. 제2차 확대회의는 6월 11일에 개최되었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노동신문(2021.6.12.)이 보도하였다.

2022년 6월 21~23일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 직제를 개편하여 리병철을 부위원장직에 복귀시키면서 부위원장직을 2명으로 증원하였고, 2022년 상반기 군사정치활동 총화, 국가방위력 강화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

노동당에 검사위원회가 창설된 것은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였

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과 경리 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당원의 당규율 위반 책임 추궁 및 도당위원회 제의와 당원의 신소를 심의·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당중앙검열위원회는 별도 기구로 존재하였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 부패 현상 척결을 강조하면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중앙검열위원회를 당중앙검사위원회로 통폐합함에 따라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의 당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검사는 물론 ‘당규율 위반행위들을 감독 조사하고 당규율 문제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는 사업’도 담당하게 되어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인선도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변경하였다. 제8차 당대회 마무리 과정에서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당내 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조사 사업을 전담하는 집행부서인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하였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인선도 정치국 위원 또는 정치국 후보위원급이 맡는 등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당 지방조직

노동당의 지방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위원회는 상하의 당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노동당은 하부 조직체계에 관한 상세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행정지역과 단위를 모체로 구성되는 당 조직체계에 준해 13개의 시·도 당위원회와 200여 개의 시·군 당위원회, 수천 개의 초급 당위원회, 수만 개의 당 세포조직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조선인민군과 당위원회와 각급 성·중앙기관 단위에는 별도의 당위원회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위원회의 조직책임자(당 비서)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정, 군, 사회단체와의 관계

당-정 관계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당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의 당 조직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이 행정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당-군 관계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과 당적 원칙에 따라 군을 통제하는 지위를 가진다. 2021년 1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 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제30조). 군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당을 대표하는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 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한편, 북한군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는 일반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총정치국 지도과, 검열과, 간부과를 통해 북한군을 지도·통제해 왔다. 즉,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 지도과는 총정치국 조직부를 통해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통제해 온 것이다. 그리고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성과 군령을 담당하는 총참모부 관련 업무는 당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에서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당-군 관계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現 국방성)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군 총정치국의 조직이 총참모부와 국방성에서 중대까지 군 지휘체계 내 1:1로 대응하도록 전 군대에 조직되어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에 의한 군 통제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외교·통일·경제 분야로까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군 중심의 과도기적 국가체제에서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였다. 한편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군정지도부를 신설하였고 2021년 1월에 당 규약이 개정하여 총정치국을 당중앙위원회 부서 수준에서 도당위원회 집행부서 수준으로 격하하고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도록 함으로써 인민군 총정치국의 역할과 위상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당-사회단체 관계

노동당은 사회단체 및 조직들도 지도하고 통제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제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舊 ‘김일

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舊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즉 인민대중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대남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당의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관으로 편입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또한 외형상 국가기구이지만,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하에 활동하고 있다.

3 중앙 국가기관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의 중앙기관으로는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국가 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1) 국무위원회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으로, 국방 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이며 총사령관으로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중요 간부의 임명·해임, 외국 주재 외교대표 임명·소환,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과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2019년 8월 개정된 헌법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는 선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내용으로 권한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김덕훈, 그리고 국무위원 조용원, 박정천, 김영철, 전현철, 리선권, 리영길, 김성남, 김여정, 박수일, 리창대, 최선희로 구성되어 있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며, 2019년 선출된 14기 대의원은 총 687명이다. 정기 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2022년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룡해가 맡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Nicoor

만수대의사당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일반조약)¹⁷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김정일을 최고 수위(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로 추대하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시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다.

2013년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3.31.)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헌법 개

17 북한은 2009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의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체계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이었던 조약 비준·폐기권을 분리했다. 국방위원장은 ‘중요조약’의 비준·폐기권을,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폐기권으로 조약의 중요도를 구분했다(『사회주의 헌법(2009)』 제103조 4항). 2016년 6월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위원에게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부여하였다.

정, 법령 신설, 인사 개편 등 총 8개 의안을 토의·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우주개발국 신설, 박봉주 내각 총리 재기용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시켰다. 「금수산 태양궁전법」도 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 회의(2014.4.9.)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이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 안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55%인 376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국무위원장)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최고재판소·검찰소를 중앙재판소·검찰소로 개칭하는 등 조직도 정비하였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989년에 신설하여 1998년에 폐지했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켰다.

2019년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1개 조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71개 조로 개정하였다. 또한 김정은의 군 분야 직책으

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도 사용하였다. 이 같은 국가 대표성에 걸맞게 김정은 시대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14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 2020년 4월에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고, 제3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각의 경제정책 과제에 안건이 논의되었다. 2020년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금연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하고 「기업소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에는 제8차 당대회 직후인 1월 17일에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 임명 등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등 내각사업 보고, 국가예산 집행 결산·예산 등이 토의되고 채택되었다.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는 9월 28~29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시정연설을 하였고, 여러 기관의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였고, 「인민경제계획법」이 수정 보충되었다.

한편 2022년 2월 6~7일에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2022년 국가예산,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등을 제정 및 채택하였다. 9월 7~8일에 개최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이 채택되었다. 10

월 6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위기대응법」, 「수매법」 등이 정령으로 채택되었고, 12월 6일에는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사회급양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17~18일에는 제14기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평양문화어법」을 채택하고 경제분야 예산과 국방비 예산 등을 결정하였다.

3) 내각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넘겨받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북한에서 내각은 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과 보충,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 지도,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노동행정·환경보호·관광·기타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 집행,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

립,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등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樞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하며 5년이다.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총리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에서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내각의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내각의 부문별 위원회로는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성(省)으로는 경공업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노동성, 대외경제성, 외무성, 재정성, 철도성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국가설계총국, 중앙통계국, 국가우주개발국, 국가과학원, 중앙은행 등도 조직되어 있다. 내각사무국과 내각정치국은 내각 기구들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내각 총리는 김덕훈이 맡고 있다.

4) 사법기관

검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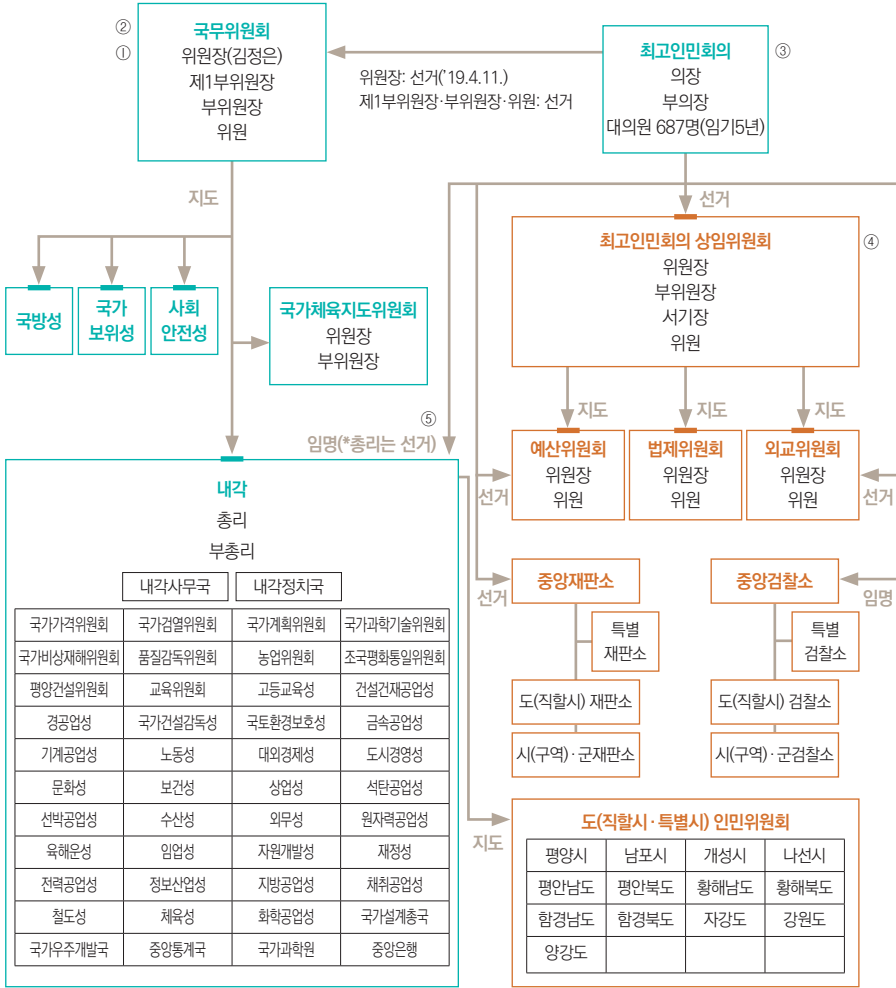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 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법 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 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중앙검찰소 산하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북한 검찰은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중앙집권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담당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재판기관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 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 ① 국무위원장: 국가전반사업지도, 국가의 주요간부 임명·소환, 조약비준·폐기, 비상·전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 ② 국무위원회: 최고정책적지도기관,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
- ③ 최고인민회의: 헌법 및 각종 법률을 제정·수정·보충,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④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별 법안을 수정·보충, 각 기관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때는 상임위원회가 내각을 조직·임명)
- ⑤ 내각: 국가정책 시행, 예산편성 등 수행성 업무 수행

[그림 2-2] 정권기관

※ 통일부, 「북한 권력기구도」, 「북한정보포털」.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現 국가보위성)의 특별 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행위’로 사형이 판결된 후 즉시 집행된 바 있다.

제 4 절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1 김정은 체제의 형성

김정은 체제는 후계과정을 거치면서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독점, 군부 장악 등을 통해 공고화 되었다. 김정은 체제의 구축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 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2010.10.10.)

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고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통제, 내부결속 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공식 추대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국가 최고직위에 추대됨으로써 권력 세습을 완료하였다. 이후 연이어 '공화국 원수'에 추대(2012.7.17.)됨으로써 '김정은 시대'가 개시되었다.

2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당 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지도기구(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와 국가 지도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엘리트들을 세대별로 구분해 본다면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천리마 세대(1950~60년대 천리마운동 세대), 3대혁명 세대(1970년대 중반 3대혁명 소조운동 주도), 고난의 행군 세대(1990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령인 혁명 1세대뿐 아니라 천리마 세대들까지 점차 권력의 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며, 김정일 체제 이후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3대혁명 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당 조직지도부 출신 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50~60대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권력승계 이후 당·정·군 내 40~50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체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와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통한 군권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 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우선 작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2013년 노동신문(2013.12.6.)에서 김정은을 ‘최고 영도자’ 대신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하였고,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모대회(2013.12.17.)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수령 영생위업 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최룡해가 연설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한 1인 지배체제 구축과 체제 안정을 모색하였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6월 29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에 올랐다. 2017년에 김정은은 10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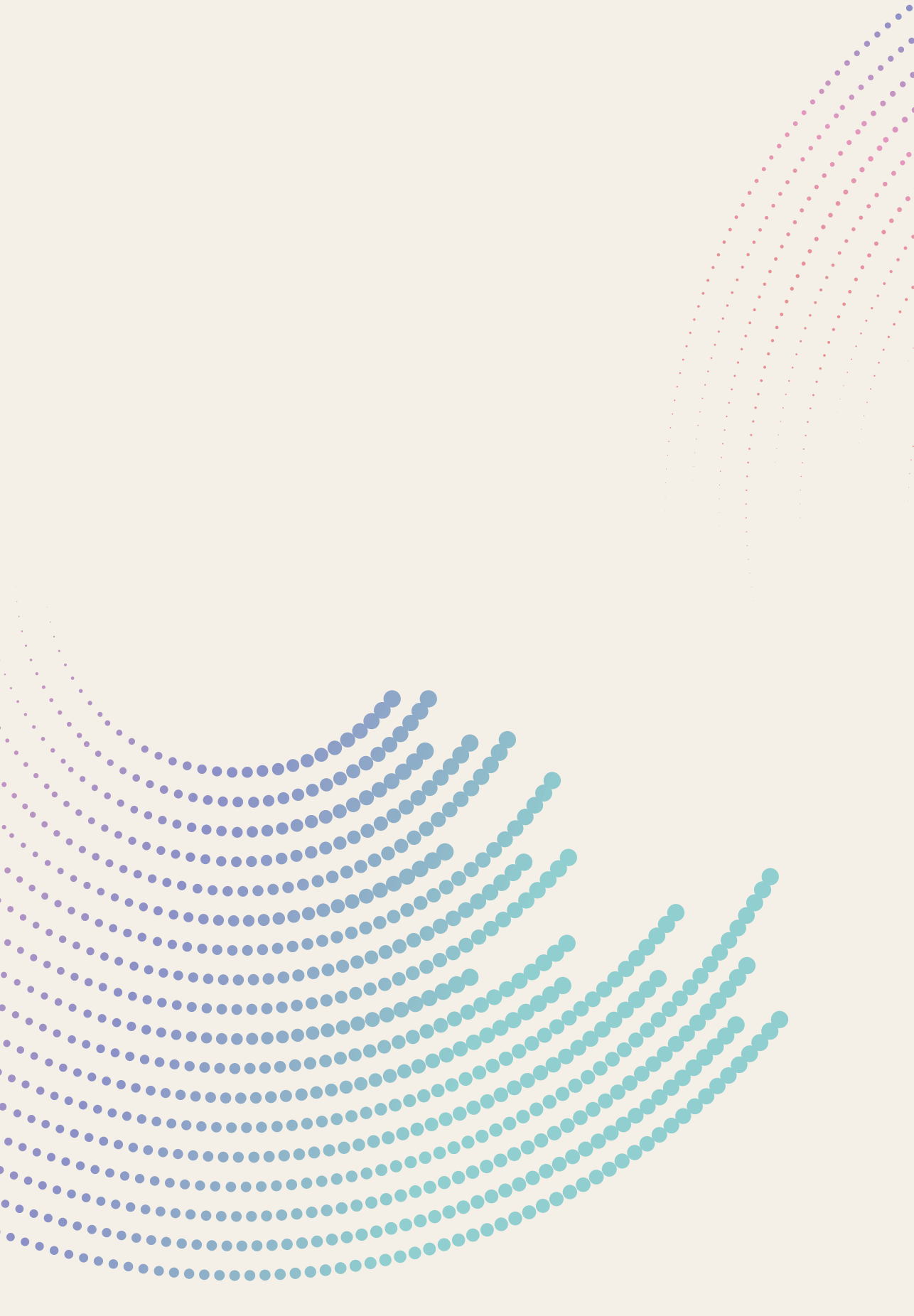
2018년에 들어와 당 회의 기구들을 통해 주요 의사 결정을 실행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4월 9일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였고,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하였다. 5월 17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전략 노선에 대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당-국가체제에 기반한 정책 실행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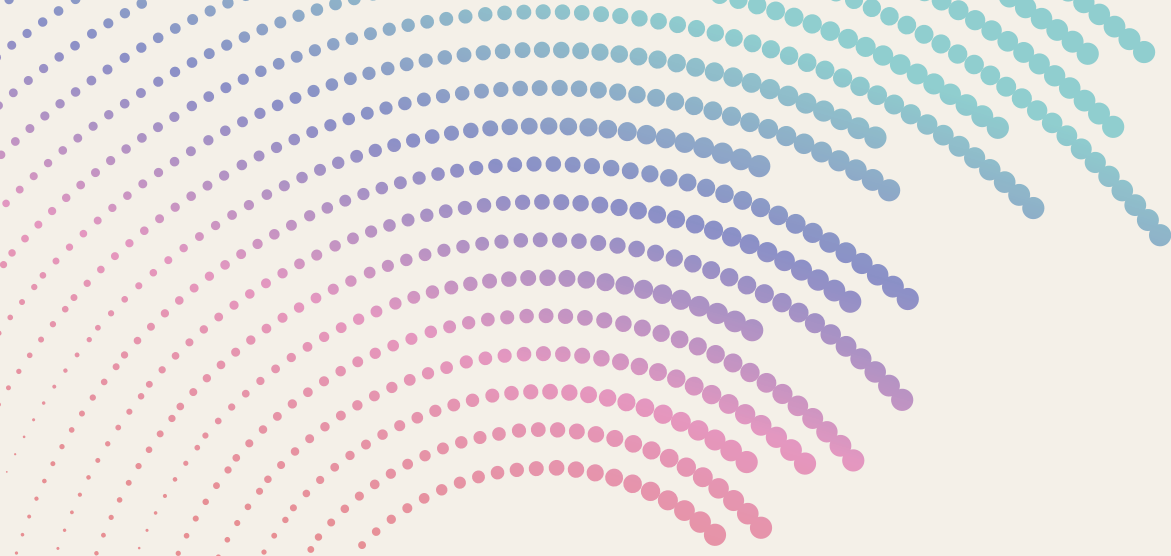
2018년 김정은은 당을 중심으로 정, 군 모든 부문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안착시켰다. 당 조직지도부 등에 대한 인사 배치를 새로이 단행하여 노동당 전체 조직을 통제하고 국가기관의 행정과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등 당 권력구조를 안정화하였다.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現 국방상) 등 군의 핵심 직위를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경제 분야 경력을 가진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9년 4월에는 당과 국가기구의 주요 인사교체를 단행하여 세대교체를 진행하였고 국무위원회의 제1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12월에는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의 영도력 강화를 강조하고 당과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재차 단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2020년 김정은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의 권력 구조뿐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실행 차원에서도 한층 공고화되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

서 흰색 원수복을 입고 참석하였는데, 이는 김정은이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2022년에는 당 전원회의, 당 정치국 회의 등 각급 당회의체를 빈번하게 개최하는 등 당적 지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및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김정은 중심의 체제결속을 강조하였다.





III

북한 군사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제2절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제3절 지휘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제 1 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북한군은 북한 정권 수립 약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창건되었다.¹ 군이 먼저 창건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북한군은 해방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가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군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구이다.

2021년 1월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제47조에서는 기존의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군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영도밑에 진행한다'고 하여,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분명히 하였다.

1 북한은 1978년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 2월 8일에서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1948년 2월 8일로 변경해 재지정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온 1932년 4월 25일은 반일 인민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지정하였다.

군의 정치 참여 및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북한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군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군은 북한의 영토를 보존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 수호의 역할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최고지도자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수반인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당의 영도를 따르는 것은 군의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군의 정치적 역할이다. 6.25 전쟁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자 1998년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일은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의 정치적 역할은 다시 부각되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통일·외교·경제분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셋째, 군의 경제 및 사회적 역할이다.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군이 전면적으로 투입되었으며, 대규모 토목사업 및 국가 재건사업의 중심에는 동원된 군 조직이 있었다. 특히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 군을 동원하여 각종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² 김정은 시

2 김정일 시기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면서 군인 건설자들이 경제건설 전면에 나서 안변 청년발전소와 원산-금강산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김정일은 체육, 과학, 문예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동원을 시도하였다.

기에도 군은 평양 10만 호 주택건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및 삼지연시, 양덕 온천 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태풍 수해복구 건설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군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전문화된 집단으로서 본받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선전되어 왔다. 북한 사회의 주류 계층인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는 필수적인 경력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북한에서 군이 갖는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크다.

제 2 절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1 김일성 시기

김일성 시기의 군사정책은 6.25 전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3년간의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군의 규모와 역량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 발발 직전 약 20만 명 정도였던 북한군의 총 병력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약 30만 명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이후 1955년에는 4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주둔하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철군하면서 물자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장비의 증강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일성 시기 북한의 군사정책은 소위 ‘4대 군사노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등장한 4대 군사노선은 중소분쟁 시기 안보 우려 속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제한된 자원을 중공업 중심의 국방 분야에 투입하는 일종의 국가전략 차원의 군사력 강화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1]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민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로 무장,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4대 군사노선 가운데 ‘전군 현대화’를 제외한 3가지 내용은 1962년 12월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제시된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 현대화’가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다. 4대 군사노선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도 제시됐으며, 1992년 개정 헌법에서 명문화되었다. 김일성은 이처럼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며 병력 증강뿐만 아니라 주요 장비의 독자 개발을 추진했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주요 물자 및 장비의 독자 생산을 위해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1967년을 전후해 내각에 ‘제2기 계공업성’이라는 군수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1972년 무렵에는 제2기계공업성을 내각에서 분리한 뒤 ‘제2경제위원회’로 확대·재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제위원회는 각종 무기 및 물자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舊 제2자연과학원)과 부문별 무기 및 물자의 생산을 담당하는 수 개의 총국, 수백 개의 군수공장을 산하에 두면서 일반경제에 우선하는 군수경제를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주요 지상무기 체계와 잠수정,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건조하는 등 독자적인 군수산업 능력을 성장시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던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 김정일 시기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난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1994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총참모부가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는 기계화군단이 4개에서 2개로 감소하는 대신 기갑사단 1개, 기계화 보병사단 4개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시대 18년 동안 북한에서 전차는 400여 대, 각종 포는 2,600여 문이 각각 증가했으며, 170mm 자주포가 새롭게 생산·배치되고, 구소련의 T-72형 전차를 모방한 천마호의 개량형을 생산·배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북한 해군은 1994년 16개 전대에서 2012년 13개 전대로 부대 수가 감소했지만 26척에 불과했던 잠수함정이 70여 척으로, 상륙함정이 공기부양정 120여 척에서 공기부양정 및 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 척으로 증가했다. 북한 공군의 경우에는 1994년 3개 항공전단사령부였던 것이 2016년에는 5개 비행사단과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증가했지만, 외부로부터의 지

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군 전력을 독자적으로 확충할만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비 증가는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변화는 경제난으로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이었으나,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토대로 군사력 증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재래식 군사력 증강 노력과 함께 김정일 시기에는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시대 미사일 개발에서 거둔 성과, 즉 스커드-B(사거리 300km), 스커드-C(사거리 500km), 노동(사거리 1,000~1,300km) 미사일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우며 중·장거리 미사일로 평가되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6년에는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대포동-2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으며, 2009년에는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스커드 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액체 연료 미사일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고체 연료 미사일(KN-02) 개발을 시작했다.

김정일 정권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개발도 진척시켜 나갔다. 2002년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자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6자회담이 사실상 중단되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과학자를 북한으로 불러들여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우리놈 농축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일 정권은 제1차 핵실험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2~3개월 전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했다.

3 김정은 시기

김정은은 4대 군사노선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4대 전략적 노선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지칭한다. 2015년 신년사에서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언급한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국가방위력을 다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4대 강군화 노선’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이 중 정치사상 및 도덕 강군화를 통한 사상무장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으로 인민무력성(現 국방성)을 방문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개적으로 다각적·입체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전법 강군화 및 다병종 강군화는 김정은 체제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군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2경제’인 군수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방 분야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가장 두드러지는 군사정책은 핵·미사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두 차례에 불과했던 핵실험을 김정은 시기 들어 네 차례나 추가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건설 및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2013.3.) 직후 영변 핵시설의 전면 재가동을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5MWe 원자로(플루토늄 생산)와 우라늄 농축 시설(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6년 4월과 2017년 3월 새로운 대형 액체 엔진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 또한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간 화성-10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2015년부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SLBM 북극성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북극성을 개량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도 시험 발사하였다.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방사포 등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오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신형 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낙하시키기도 했다. 2020년에는 초대형 방사포와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였고, 2021~22년에는 순항 및 탄도미사일, 화성-8형, SLBM,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 5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 발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분단이후 처

음으로 동해 NLL을 넘어 SLBM을 발사하는 등 2022년 한해만 7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재래식 전력 증강도 선별적으로 추진했다. 구형 T-54/55 전차를 선군호와 준마호 등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도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2020년 10월 진행한 열병식에는 총 11종에 달하는 신형 재래식 무기체계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대 군사정책은 네 번의 변화 시점을 맞게 되는데, 첫 번째 시점은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이다. 병진노선의 채택과 함께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동시에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두 번째 시점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이다. 7차 당대회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편하고,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군사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 시점은 2018년 4월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노동당은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면서, 병진노선의 ‘승리’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신전략노선을 발표했다. 네 번째 시점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로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를 완성한 상태에서 ‘더 위력한 핵탄두’ 생산과 ‘첨단핵전술무기’ 개발 등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것임을 밝혔다.³ 2021년 10월 11일에는 처음으로 ‘전람회’라는 형태로 지난 5년간 개발 생산한 신형무기들을 전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하여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2022년 3월 24일에는 4년 4개월만에 ICBM을 시험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 선언한 핵·ICBM 시험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하였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지 10년 만에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⁴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번 법제화로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

3 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대륙간 탄도로켓들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 탄도로켓, 핵무기의 소형경량화·규격화·전술무기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포-15형》 시험발사 등으로 국가핵무력 완성,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었으며, 2020년 당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장에서 공개된 신형 로켓은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을 과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항공로켓중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들도 세계적 수준에서 개발하였으며, 다탄두개발유도 기술과 신형 탄도로켓에 적용할 탄두개발 연구 등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4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2013년 제정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새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로 대체하고, 5개 조건에서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2013년 제정된 법령에서는 핵무기 사용 조건이 ‘핵 보유국이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새 법령은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선제 공격을 선택지로 명문화했다. 핵무기 지휘통제권자인 김정은이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핵 보복 공격에 나선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며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를 9월 9일 정권수립일 74주년에 맞춰 보도했다.

제 3 절

지휘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1 지휘체계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와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등이 있다. 각 기구별 주요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군사기구이다. 2021년 1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제30조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서 개편된 기관으로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이다. 2019년 8월 개정

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제110조)하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제107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무력 총사령관”(제103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군사지휘체계 내부 기구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에서 보듯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군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당의 집행기구인 총정치국,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총참모부, 그리고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북한 군 최고의 직책이다. 최고사령부는 6.25전쟁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단일지도 형식의 비상기구로 신설되었다. 최고사령관은 전시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며, 전시 및 동원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전당·전군·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군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군도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 당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⁵를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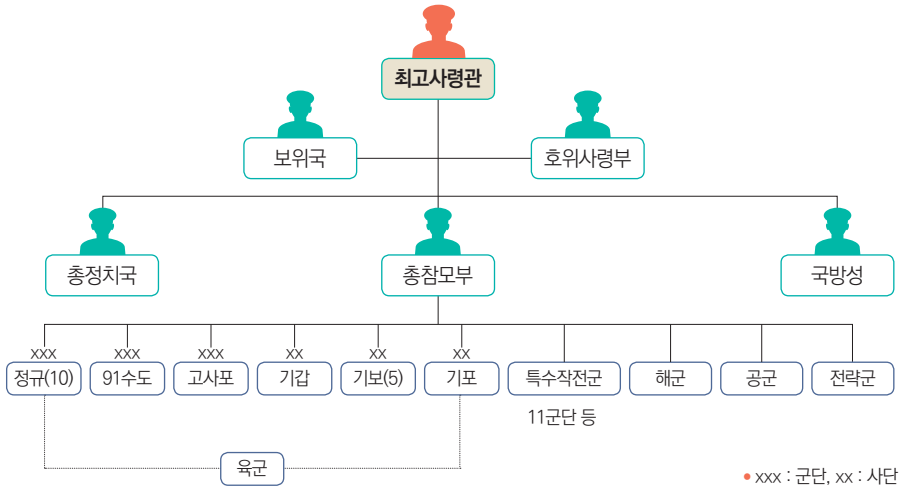
5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직무상 군사부문의 최고 결정·심의기관으로 당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있으며, 군에는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이다. 총정치국은 군당조직 집행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 군정지도부 및 당 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북한은 최근 당 내에 전문부서 중 하나로 군정지도부를 신설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그림 3-1]과 같이 10개의 정규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5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기계화포병사단(이상 육군),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전략군⁶ 등이 있다.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매년 발령되는 당중앙군사위원장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하 부대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6 전략군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켓트사령부에서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육군, 해군, 공군과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그림 3-1]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26.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軍政}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지휘기구도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인사권, 대외업무 지도 등을 맡아 군을 당적으로 지도하며, 국방성은 건설, 후방사업, 군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⁷ 국방성은 현재 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지휘기구도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된 군정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 총정치국이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인사권, 대외업무 지

⁷ 국방성은 1948년 민족보위성으로 출범, 1972년 인민무력부로 개칭된 이후 수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0년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도 등을 맡아 실질적인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국방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지도자를 보호하는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데타 진압, 최고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경계와 관리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최고지도자의 안위를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와 보위국도 직접 관장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22년 현재 김정은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로서 당·정·군의 최고 직책을 겸하며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은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원칙”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및 자위권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투쟁’을 언급하였으며 대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군 최고지도부를 6개월만에 다

시 교체함으로써 대미·대남의 대적관계에 기반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였다.

2 군사력 구성

북한군의 전력을 요약하면 2022년 12월 기준 상비병력은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으로 총 128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군 128만여 명 이외에도 교도대 62만여 명, 노농적위군 572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94만여 명, 호위사령부 등 준군사부대 34만여 명 등 가능한 동원 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른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며 한국을 6위로, 북한을 25위로 각각 평가했다. 미국 민간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 Global Fire Power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의하면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142개국 중 6위, 북한은 30위로 나타났다.⁸

⁸ GFP는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 군대의 규모와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다만 핵무기는 지표에서 제외된다. GFP 홈페이지(www.globalfirepower.com)-'2022 Military Strength Ranking' 참고.

[표 3-2] 남북한 군사력 비교('22.12월 기준)

남한	구분	북한
병력(병사)		
50만여 명	계	128만여 명
36.5만여 명	육군	110만여 명
7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해군	6만여 명
6.5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	전략군	1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12개(해병대 포함)	군단(급)	15개
36개(해병대 포함)	사단	84개
32개(해병대포함)	여단(독립여단)	117개
장비		
2,200여 대(해병대 포함)	전차	4,300여 대
3,100여 대(해병대 포함)	장갑차	2,600여 대
5,600여 문(해병대 포함)	야포	8,800여 문
310여 문	다련장·방사포	5,500여 문
발사대 60여 기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수상함정		
90여 척	전투함정	420여 척
1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1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1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공군		
410여 대	전투임무기	810여 대
70여 대(해군 포함)	감시통제기	30여 대(정찰기)
5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350여 대
190여 대	훈련기	80여 대
700여 대	헬기(육·해·공군)	290여 대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예비병력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334.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타군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1)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5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기계화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육군의 약 70%에 달하는 전력은 평양에서 원산 이남의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기습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육군은 전차 및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은 기계화 및 전차사단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표 3-3] 남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현황

남한	장비 ⁽⁴²⁾	북한
2,200여 대 (해병대 포함)	전차	4,300여 대
3,100여 대 (해병대 포함)	장갑차	2,600여 대
5,600여 문 (해병대 포함)	야포	8,800여 문
310여 문 (해병대 포함)	다련장·방사포	5,500여 문
발사대 60여 기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 (전략군)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27, p. 334.

단하고 최근 수년에 걸쳐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여 전차, 기계화, 미사일부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하였다. 기갑 및 기계화 부대는 6,9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동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다양한 대전차미사일·기동포를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하여 일부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2) 해·공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에서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원해(遠海)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신규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 5개의 비행사단, 1개의 전술수송여단, 2개의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공군력은 전투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50여 대, 헬기 290여 대, 훈련기 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570여 대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최소

[표 3-4] 남북한 해군의 주요 함정 현황

남한	장비(대)	북한
90여 척	 전투함정	420여 척
1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1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10여 척	기뢰전 함정(소해정)	20여 척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28., p. 334.

[표 3-5] 남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남한	장비(대)	북한
410여 대	 전투임무기	810여 대
7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감시통제기	30여 대 (정찰기)
5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50여 대
700여 대	 헬기(육·해·공군)	290여 대
190여 대	훈련기	80여 대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29, p. 334.

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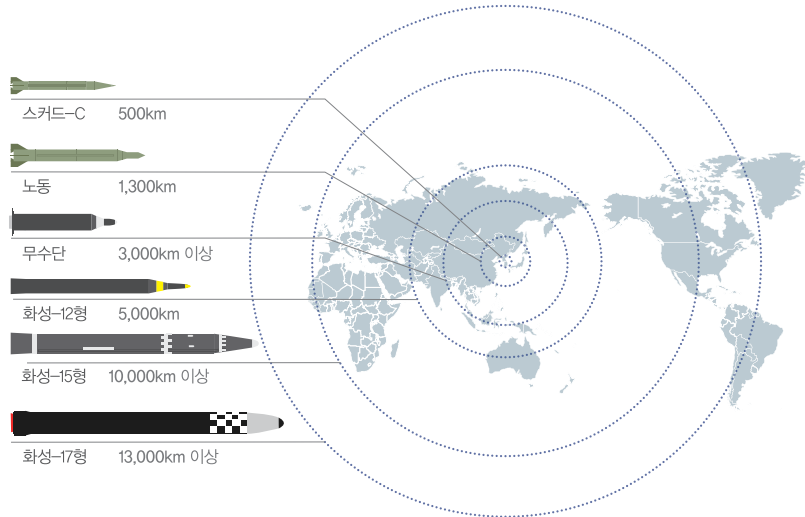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또한 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략군 및 특수작전군

북한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개편하여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종으로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의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영변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



[그림 3-2]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32.

70여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단행한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안했을 때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 단·중·장거리 등 다양한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스커드-B/C 미사일과 신형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남한을 타격하기에 충분하며, 스커드-ER 및 노동 계열 미사일은 일본, 화성-10(무수단)형 및 화성-12형 미사일은 괌을 비롯한 태평양 북서부 지역, 화성-14형 및 화성-15형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을 비롯하여 ‘북극성-4사’으로 표기된 신형 SLBM,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전술미사일을 공개하였으며, 2021년 1월 14일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사’이라고 표기된 신형 SLBM이 공개되었다. 2022년 4월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대형 SLBM이 새롭게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비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비병연대 등 각 군 및 제대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으로 전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중 및 해상·지상 침투훈련과 아군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하여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⁹

4) 예비전력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 여 명을 교도대, 노농적위군(직장 및 지역 단위 조직), 붉은청년근위대(고급중학교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는 전시 단기간 내 전환 가능한 100여 개소 이상의 민수용 공장을 포함하여 약 300여 개소 이상의 군수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사시 신속하게 군수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전시 동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군수 생산 및 비축 시설은 주요 무기 및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국제

9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25.

[표 3-6]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구분	병력	비고
교도대	62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 (17~50세 남자, 17~30세 미혼여자)
노농적위군	572만여 명	지역예비군 성격 (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청년근위대	94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 (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4만여 명	호위사령부, 사회안전성 등
계	762만여 명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32.

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군수산업 육성 및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 복무 및 계급구조

1) 복무

북한은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으로 ‘인민군 복무조례’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는 지원제였으나 사실상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군 복무 연한을 육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육군은 5~6년, 해·공군은 8년, 기술병과 요원은 8~9년간 복무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군 복무기간을 변경하던 북한은 1993년 4월 징병남성 10년, 지원여성 7년으로 군복무기간 10년 복무를 공식화하는 ‘10년 복무연한제’

를 실시하였다.¹⁰ 1996년 군 복무조례를 개정해 남성은 만 30세까지, 지원여성은 만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 실시로 전환하였다.¹¹

2003년 이전까지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 왔다.¹²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였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병영생활 중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 ‘10년 복무연한제’는 입대 시 나이에 상관없이 10년 기간을 복무하는 것으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당시 대학 추천자를 제외한 절대 다수를 입대대상자로 선발하여 10년을 의무 복무하게 하였다.

11 고재홍,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전망,” 『INSS 전략보고』 2018-2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p. 5-7.

12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는 지원병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모 연령이 되면 신체 불합격자,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복무를 하였다.



북한 여군 포병의 훈련 장면

10대 준수사항¹³이 있다. 복무 중 규율을 어길 경우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 사고자는 제대 후 직장 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 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는 부모 사망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군 복무 기간에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 병사는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평균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건설, 영농 등 비군사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병사에 대한 급식 상황은 2000년대 초 외부 지원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

13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① 군사 규정 철저히 준수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④ 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당조직 비밀 엄격 유지 ⑥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히 준수 ⑦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의 침해 금지 ⑨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⑩ 군대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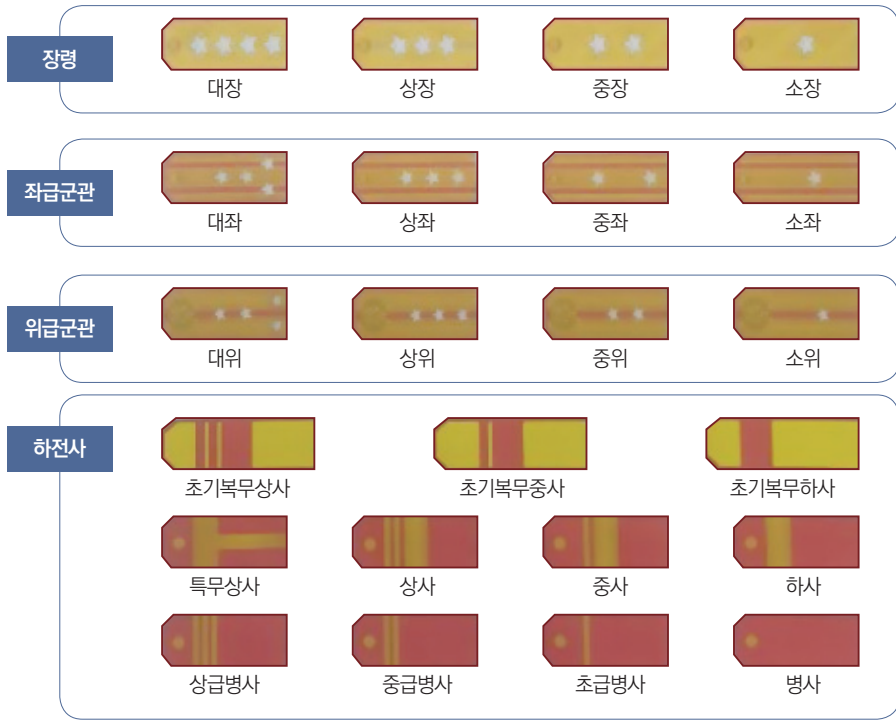
의 대복지원이 감소·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은 보급되고 있지만 부식은 직접 구매하거나 부대가 소재한 지역의 특징에 따라 영농, 어로, 채취 등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많은 부대가 염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콩 작물을 경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_{軍民}관계를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의 민간에 대한 부담과 각종 폐해 일소를 위해 군민관계 훼손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계급구조

북한군의 계급은 ‘군사 칭호’로 불리며 군관_{軍官} 12종, 하전사_{下戰士}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② 좌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③ 위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는 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 칭호’로서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병사로 구분하고 있다.

김일성은 80회 생일을 이틀 앞둔 1992년 4월 13일 ‘공화국 대원



[그림 3-3] 북한군 계급장(건장)¹⁴

수'로 추대되었으며, 김정일은 사망(2011.12.17.) 후인 2012년 2월 14일 '공화국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17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 받았다.¹⁵

14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은 '차수' 계급을 건너뛰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승진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공화국 원수'를 거쳐 '대원수' 호칭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준다는 결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나왔다.

15 하전사 계급장 가운데 초기복무상사·중사·하사는 별도의 계급체계는 아니다. 북한이 195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초기복무사관은 레이더, 통신기기 등 특수 분야에서 복무하던 사병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장기 복무시켜 공백 기간 없이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제도이다.(국립통일교육원 편, 『북한지식사전』, 2021. pp.101-102.)

1)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아울러 장거리미사일도 여러 차례 발사했다.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다.

핵무기

북한은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 IRT-2000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안북도 영변 지역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핵 전문 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에 긴요한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갖

취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5MWe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이 차례로 건설되었다.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1991년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사찰을 받았으며, 사찰 결과와 북한의 신고 내역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위기’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제1차 북핵위기는 1994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 기본합의」¹⁶ 타결로 일단락되었으며, 북한의 핵활동은 2002년까지 동결되었다.

2002년 10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소위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 등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폐연료봉 재처리 등으로 대응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2003년 8월 시작되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16 제네바 기본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영변의 5MWe급 원자로를 동결하고 북한 내의 다른 두 개의 원자로 건설을 중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IAEA의 감시 하에 둔다. 둘째,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200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을 지원하고, 경수로 건설 기간 중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여 북한의 에너지난을 덜어준다. 셋째, 미국은 미·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외교적 관계를 확대한다. 넷째, 경수로 완공 이전 북한은 의무적인 특별 사찰을 받기로 했으며, 경수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5MWe급 원자로는 물론, 건설 중인 두 개의 원자로까지 폐기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남북관계 지식사전)

[표 3-7]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1985.12.12.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12.31.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3.3.12.	NPT 탈퇴 선언
1994.10.21.	미·북 간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1.1.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2002.10.3.	켈리 미 국무부차관보 방북
2002.12.12.	핵 동결 해제 발표
2003.8.27.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5.2.10.	핵무기고 증대 대책 강구 주장
2005.5.11.	영변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 개 인출 완료 발표
2005.9.19.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9.19공동성명' 채택
2006.10.9.	제1차 핵실험 실시
2007.2.13.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에 대한 「2.13 합의」
2007.7.15.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 및 IAEA 감시허용' 발표
2007.10.3.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등 「10.3 합의」
2008.6.27.	영변 5MWe 원자로 냉각탑 폭발
2008.9. 2.	영변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
2009.5.25.	제2차 핵실험 실시
2009.11.3.	폐연료봉 8천 개 재처리 완료 선언
2013.2.12.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4.2.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016.1.6.	제4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9.9.	제5차 핵실험 실시
2017.9.3.	제6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수소탄두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8.4.20.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지 및 핵실험장 폐기 선언
2018.5.24.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기
2021.1.8.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 선언
2022.9.8.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 채택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2008년 12월 열린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후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능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4월부터 추진하였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선언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에만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미·북정상회담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공약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폭파하였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은 중단했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하노이 정상회담 2주년 기념 리선권 외무상 담화,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 전국 노병대회 등에서 “핵전쟁 억제력” 등을 언급하는 등 최근에도 핵을 통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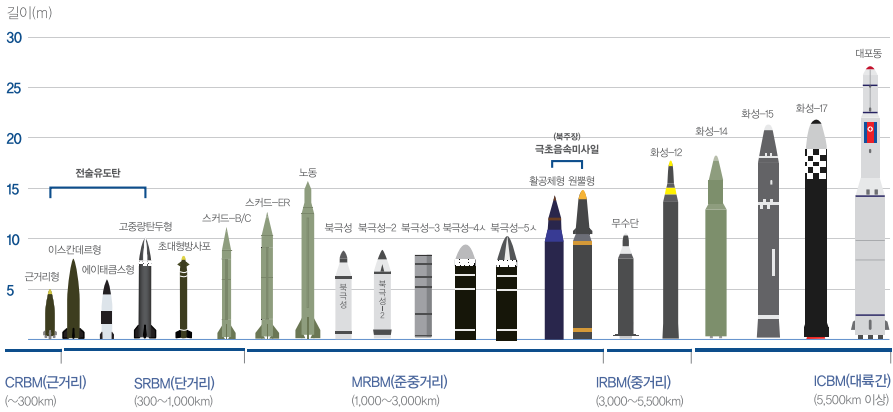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방공업을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전략적 과업들을 언급하면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5대 최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형 ICBM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만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가 그것이다. 2021년 9월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한 북한은 2022년 1월 5일에 이어 1월 11일에는 김정은의 참관 아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1월 12일자 노동신문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2년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연이어 ICMB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모라토리엄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2022년 4월 25일 창군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의지를 표출하였다.

미사일

북한은 장거리 타격 및 핵무기 등의 투발능력 확보를 위하여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킨드 SCUD-B와 사거리 500km의 스킨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 그 후에는 스킨드



[그림 3-4] 북한이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31.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형)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기념일 열병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공개하여 온 북한은 2012년부터 인공위성 발사 등을 내세우며 장거리 로켓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평가되는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을 시험발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2019년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 신형 SLBM ‘북

¹⁷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극성-3형', 신형 방사포 등을 시험발사하였으며, 2020년에는 초대형 방사포와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하였다. 2021년에도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데 이어 9월 28일 '화성-8형'을, 10월 19일 신형 SLBM을 발사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화성-17형' ICBM,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30여 차례에 걸쳐 발사하였다.

생화학무기

지금까지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핵·미사일 문제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로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군수산업의 비대화과 사이버 전력 강화

군수산업의 비대화

북한은 기존의 전군 간부화,全民 무장화, 전국 요새화에 1966년 10월 전군 현대화를 추가해 4대 군사노선을 완성한 뒤 내각에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기계공업성을 신설했고, 1972년 무렵에는 제2기계공업성을 내각에서 분리한 뒤 군수산업 관련 조직을 통합한 제2

경제위원회를 신설했다. 현재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계획, 생산, 분배,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군수산업에 필요한 자원과 물자를 일반경제보다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제2경제위원회가 산하 외화별이 기관과 무역회사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군수산업은 크게 각종 무기체계 및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군수부문과 군용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 군수부문으로 나뉘며, 민수공장에 설치된 ‘군수직장’ 역시 군수산업에 포함된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군수공장 및 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러한 공장·기업소를 통해 첨단 기술이 필요한 일부 무기체계를 제외하고는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한다.

북한이 1960년대 추진한 중공업 우선 정책은 독자적 군수산업의 토대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증시한 양적 동원에 의한 생산 확대는 결국 북한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북한은 일반 경제 및 민수산업에 우선해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고, 일반경제 및 민수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군수산업만 과대 팽창되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북한의 전체 경제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전력 강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사이버 전력도 꾸준히 증강해 왔다. 1986년 ‘지휘자동화대학’¹⁸ 일명 미림대학을 설립하면서 사이버 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고 데이터 해킹 등의 기술을 교육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사이버전¹⁹을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3대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였고,¹⁸ 사이버 공격의 낮은 진입 비용, 책임 귀속 규명의 어려움, 효과적인 억제력 부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핵과 미사일 능력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양성된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¹⁹을 이용하여 2000년대 초부터 남한의 행정 및 군사기관, 방산업체, 금융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기밀을 유출·탈취하거나 기간 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결제시스템 및 암호화폐 cryptocurrency 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디지털 자금을 탈취해 오고 있다. 특히 정찰총국 121국공식 병청은 기술정찰국 산하에는 라자루스, 김수키 등의 해킹 그룹이 있어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약탈한 불법적 자금과 정보는 국제적 경제제재를 회피하여 외화

18 김보미·오일석, “김정은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INSS 전략보고』 No.14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2~8.

19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25.

20 U.S. Army Headquarters, “North Korean Tactics”, July 2020, p.E-2.

를 획득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부터 북한이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의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 이상이며 2022년에만 약 8,000억 원 상당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3년 2월 10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그리고 지휘자동화대학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²¹

3) 총참모장의 직접적인 육군 군단 지휘·통제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그림 3-1])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에는 해군사령관과 공군사령관은 있지만, 우리의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육군 사령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합참의장과 동격인 총참모장이 북한군에 대한 전반적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육군 정규 군단과 기갑·기계화보병·기계화포병사단을 직접 지휘·통제하고 있다.

즉, 북한군 지휘체계 내에서는 육군 정규 군단과 기갑·기계화보병·기계화포병사단이 군종 사령부에 해당하는 해군 사령부, 공군사령부와 동일한 위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총참모장이 육군, 해군, 공군 등 군종 사령부에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종 사령관이 예하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일반적인 군사지휘체계와는 다른 형태로, 북

²¹ 외교부, 보도자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2023.2.9.

한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군 총참모장이 육군의 군단 및 사단급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북한군이 육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육군이 밀집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 자체 병력에서 육군 비중이 86%에 육박할 정도로 북한군은 육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과 공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와 8.6%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은 전방 지역에 4개의 육군 정규군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육군 전력의 약 70%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배치 상황을 감안해 북한군의 실질적 운용 체계는 작전지역에 따라 육군 정규군단을 일종의 전구^{戰區} 사령부로 하고, 전구 사령관이 자신의 전력뿐 아니라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여타 전력을 모두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이른바 '통합군 체제'이다.



IV

북한 외교

제1절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제2절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제3절 북한 외교관계의 전개

제 1 절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 북한 외교이념과 정책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밝히고,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17조에서도 당 규약의 세 가지 가치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과 “내정 간섭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¹

¹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권 붕괴 및 중국의 개혁·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98년 노동당의 대외정책 추진원칙을 수정하였다. 기존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1998년에 수정한 이 대외정책 기본 이념은 김정은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다.²

북한 외교정책은 기본 이념과 달리 실리주의에 기반하여 추진하였다. 1990년대 초 북한의 최대 경제지원국이었던 소련의 해체와 주요 사회주의 협력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 경제는 위기에 처하였다. 한편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였던 남한은 1990년대 초 냉전 시기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소련 및 중국과 국교정상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은 탈냉전 시기 체제 안정과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 실리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는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 및 외교 다변화이다. 특히 북한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및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였고, 국제사회와 비핵화 및 대

2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자주, 평화, 친선’ 이념에 따라 대외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제재 해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인 협상 실패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였다.³

2 북한 외교정책 결정구조

1998년 헌법 개정 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으나, 이후 북한은 외교 분야에서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먼저 2016년 6월 개정된 헌법은 국무위원장에게 일반국가에서 국가원수가 행사하는 ‘특사 파견권’과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부여하였다. 이어 2019년 4월 개정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북한 당국이 같은 해 8월 개정된 헌법은 ‘다른 나라 주재 외교대표 임명 또는 소환권’을 종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장에게로 이관하였다. 현재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3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2006.10., 2009.5., 2013.2., 2016.1., 2016.9., 2017.9.)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으로부터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탈냉전기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고립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통해 체제 생존을 모색하였고, 비량굴 전술에 기반한 핵협상 전략은 북한의 대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 외교 활동의 주체는 당, 국가, 민간⁴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가 정당 간 외교를 담당하고, 의회 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가 책임을 맡고 있다. 북한은 1998년 헌법에서 삭제한 외교위원회를 2017년 제13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복원하였으며, 2019년 4월 개정된 헌법에 이를 반영하였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인해 북한 대외관계에서 정당 간 외교의 비중은 줄어들고, 정부 간 외교 비중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 정부 간 외교를 관장하는 외무성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과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 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4 북한의 정치체제 특성상 민간 주체는 정부의 주도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의 민간 주체들과의 외교를 담당한다.

제 2 절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1 김일성 시기

냉전 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주를 내세우는 가운데 소련 및 사회주의 우방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였다. 6.25 전쟁을 겪고, 미소 경쟁이 치열하던 김일성 시기 북한의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기별 특징을 갖는다.

1) 1948~1950년대 초 : 사회주의 진영외교

북한은 1950년대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진영외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북한은 소련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중시하였으며, 특히 6.25전쟁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북·

중 관계는 혈맹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북한은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12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무상 원조를 얻는 데 주력하였다. 이 시기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경제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 1950년대 중반~1960년대 : 등거리 외교노선

1950년대 초 소련의 외교정책 변화와 중소 사회주의노선의 갈등으로 인해 북한은 비동맹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흐루쇼프 정권은 서방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회주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⁵

북한도 소련의 대서방 평화공존정책에 반대하며, 비동맹 외교노선에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동맹 외교노선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평화와 협력의 촉진에 대한 공동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반둥 10원칙’에 기반한다. 반둥 10원칙의 핵심은 세

⁵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스탈린을 비판하고 서방 진영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발표하였다.

계평화, 반식민주의,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 강화이다.⁶

북한은 노동당 대회에서 비동맹 외교노선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외교 다변화 방침을 밝히고,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투쟁, 신생 독립 국가와의 관계 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⁷

북한은 1960년대 중소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중소 양국과 자동군사개입이 포함된 상호우호 및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는 한편, 중국과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영토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불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⁸

비동맹 외교노선의 채택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고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6 1950년대 말 독립한 신생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반동 10원칙을 외교기조로 삼았고, 비동맹주의 지도 원리가 되었다. 그 내용은 (1)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2)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3)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 (4) 내정 불간섭 (5) 국제연합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6) 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방위결정(집단적 군사동맹)에의 불참가 (7) 상호불침략 (8)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9) 상호협력의 촉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등으로 되어 있다.

7 1956년 3월 소련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발발하자, 소련파와 연안파는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려 했으나 사전에 차단되었다. 같은 해 8월 동유럽 순방 기간 동안 연안파는 김일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지만,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숙청당했다. 1956년 중파투쟁 이후 내부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한 김일성 지도부는 중국과 중국인 민지원군 철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1958년 북한 내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에 대해 합의하였다.

8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8.12.

3) 1970년대 : 자주외교

북한은 1970년대 자주노선 강화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교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1971년 9월 유엔에 가입하고, 1972년 일본과 수교를 맺고, 1979년에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미중 데탕트로 인한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도 외교노선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대남 도발과 외채 상환 문제, 위폐 및 외교관 밀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이 추진했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에도 비동맹 외교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 국가들과 수교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외교 의존도를 낮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는 북한이 향후 제3세계 국가들과 독자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⁹

4) 1980년대 이후 : 대서방 실리외교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전환이 진행되었다. 사회

⁹ 북한은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외상회의(8.25.~30.)에서 '비동맹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주의국가들은 계획경제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스스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동유럽은 급진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졌고,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하였다.¹⁰ 북한 역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모순 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처럼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외교를 전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진영외교와 비동맹 외교노선을 유지하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과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었다. 결국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과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대서방 실리외교는 별다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2 김정일 시기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

¹⁰ 중국은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을 시작하였다. 베트남도 1986년부터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였다.

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진영의 체제 전환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함께 1990년대 중반 기록적인 대홍수로 인해 대량 아사를 겪는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는 미·일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1) 1990년대 : 미국 및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 추진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0~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대화를 추진하였다.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였다.¹¹ 한편, 북한은 1990년부터 미군 유해 발굴 및 인도 사업을 실시하였고, 1998년까지 200여 구의 미군 유해를 인도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클린턴 정부 시기 페리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듯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조·미 공동 코뮤니케」와 「반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 개선도 시작하였다. 1991~1992년 일본과 8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1995년 3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 여당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고, 1995~1996년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북일 간 두 차례의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북 등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1998년 8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일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다. 그리고 북한이 1999년 8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더욱 냉각되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북미 간 「베를린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가 유화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하였다.

11 「제네바 합의」: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 맺은 북핵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이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동결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이다. 「베를린 합의」: 북한과 미국은 1999년 9월 12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중단에 합의했다.

2) 2000년대 : 전방위 외교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에 들어 전방위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가 절실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전방위 외교전략과 함께 ‘핵 카드’를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벼랑끝 전술’을 펼쳤다. 2001년 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제2차 북핵 위기 대두 등으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 북미 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김정일 체제는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양국의 지도부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진행하였다.¹² 러시아도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¹² 김정일은 집권 시절 8차례 중국을 방문하였다(2000.5., 2001.1., 2004.4., 2006.1., 2010.5., 2010.8., 2011.5., 2011.8.). 장쩌민(2001.9.)과 후진타오(2005.10.)도 북한을 1회씩 방문하였고, 2008년 부주석 시절 평양을 방문했던 시진핑은 국가주석으로 2019년 북한을 방문(2019.6.)하였다.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였다.¹³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10년까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2000.1.)을 시작으로 영국(2000.12.), 독일(2001.3.)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은 2002년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 사용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핵실험,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도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에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의 북한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¹⁴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식량 차관 등의 문제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성과는 미미하였다.

3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통한 대결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

13 푸틴 대통령(2000.7.)의 방북과 김정일 방러(2001.7., 2002.8., 2011.8.)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4 2001년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방문한 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하였다. 또한 2002년에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천득령 베트남 주석 및 분양 라오스 총리를 북한에 초청하였다.

제와 핵무력의 동시발전을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2017년까지 병진노선 하에,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며 대결적 외교전략을 추진하였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가 통과되고, 미국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였다. 이 유엔결의에는 최초로 대북 석유 수출량 제한과 섬유 수입의 전면 중단이 포함되었다. 전략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6차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5형) 실험을 마친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하고(2017.11.29.) 미국과의 협상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유화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였다.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였다.¹⁵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였다. 2018년 유화적인 대화 및 협상국면이 조성되면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한편, 체제 안전보장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15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며 병진노선의 ‘결속’을 선언했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했다.

와 2018년 6월, 2019년 2월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2014년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고위급 교류 및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2019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화적인 협상노선보다 핵무력을 강화하는 정면돌파 노선을 택하였다.¹⁶ 2020년에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인 북미대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9월 일본에서 스가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2021년 1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북핵 관련 새로운 전략'과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천명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대외활동의 자주적 원칙 아래에 전략적 대미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반제자주역량 전략 강화를 재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사회주의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재규정하고, '강대강(強對強), 선대선(善對善)'을 대미관계의 원칙으로 표명하였다. 6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¹⁶ 북한은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중앙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였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기존 대외 정책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북한 당국은 2022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무기 선제사용의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십 차례 강행하였다.

2022년 2월에 개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해 북한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종래 입장에서 탈피하여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의 대열에 동참했다.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와 함께 반대하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독립을 승인했다. 북한은 미국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자군사훈련실시, 북한인권문제결의안,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가상화폐 절취 의혹제기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납치자 문제와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북 비판에 대해 자위대 부대운영 개편 방향을 군사대국화 시도라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대중관계 측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국경절 등에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의 관여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지지

하였다. 비동맹 국가들과는 예년과 같이 구두 친서를 통해 친선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인권결의안 제출에 대해 비판성명으로 대응했다.

제 3 절

북한 외교관계의 전개

1 미국과의 관계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과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북한은 1962년에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¹⁷ 1974년부터는 미국과의 단독 협상 전략으로 전환하였다.¹⁸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대미외교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17 북한은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의 시정 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18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제5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대미서한을 통해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침 서약 및 직접적 무력 충돌의 모든 위험성 제거 (2)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단 및 조선 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 반입 중단 (3) 남한 내 유엔군 해체 후 철수 (4) 남한 내 외국군대 철수 후 외국의 군사기지화 반대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¹⁹ 북한의 핵문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기대감을 표명하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핵확산 의혹 해소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후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2009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하고,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다.

2) 김정은 시기

김정은 시기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지원 재개에 동의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 합의는 파기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하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

¹⁹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1996년 4자회담, 1999년 '베를린 회담'(미사일 문제).

[표 4-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구분	원인	주요내용
제825호 (1993.5.11.)	북한의 NPT 탈퇴 (1993.3.12.)	북한에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
제1695호 (2006.7.15.)	북한 미사일 발사 (2006.7.5.)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을 금지
제1718호 (2006.10.14.)	북한 제1차 핵실험 (2006.10.9.)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WMD 관련 물자, 사치품 등), 금융 규제, 출입국 규제, 화물 검색 등 대북제재 조치
제1874호 (2009.6.12.)	북한 제2차 핵실험 (2009.5.25.)	기존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 포함
제2087호 (2013.1.22.)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기존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에 제재 대상의 확대, 금융기관 활동 감시 강화,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
제2094호 (2013.3.7.)	북한 제3차 핵실험 (2013.2.12.)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 확대, 금융제재, 화물 검색, 항공기 차단, 금수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에서 제재 조치의 실질적 강화
제2270호 (2016.3.2.)	북한 제4차 핵실험 (2016.1.6.)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2.7.)	북한의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및 운송봉쇄, 선박입항 및 항공기 영공 통과 금지, 금융제재, 무역제재(민생 제외), 핵·미사일 관련 전용 가능한 무기 금수 및 모든 물품 금수
제2321호 (2016.11.30.)	북한 제5차 핵실험 (2016.9.9.)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공급 판매 이용 금지,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 활동 금지, 회원국 내 북한 공관규모 축소, 북한에 대한 항공기 및 선박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민생 목적 예외 포함),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 추가,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제2356호 (2017.6.2.)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2017.10.15.~)	핵,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 대상 추가(개인 14명 및 단체 4개)
제2371호 (2017.8.5.)	북한 장거리미사일 '화성-14형' 발사 (2017.7.4.·28.)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해산물 및 납, 납광석 수출 금지(원산지 무관), WMD 재래식 이종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 해외 노동자 수를 결의 채택 시점으로 동결(제재위가 인도적 사유 결정 시 예외), WMD 개발 기여 가능한 대북 금융거래 금지 의무가 회원국을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에도 적용
제2375호 (2017.9.11.)	북한 제6차 핵실험 (2017.9.3.)	대북 원유 공급 제한(원유 공급량 현 수준 동결, 정제유 공급량 감축,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금지), 북한의 섬유 수출금지(원산지 무관, 유예기간 90일),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금지), 신규 기존 북한과의 합작 합영 사업 금지(120일 내 폐쇄), WMD 및 재래식 무기 이종용도 통제 품목 추가, 선박 검색 강화, 제재 대상 추가: 개인 1명(박영식), 단체 3개(당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 시 사안별로 예외 조치 가능
제2397호 (2017.12.22.)	북한 장거리미사일 '화성-15형' 발사 (2017.11.29.)	유류 공급 제한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2년) 이내 송환 조치,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개인(16명) 및 단체(인민무력성)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북한의 제4·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270·2321호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3월 북한의 개인 및 정부기관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채택을 주도하였다. 같은 해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대북 원유공급을 제한하고, 북한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시키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11월 다시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미국은 대북 유류공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안보리 결의 제2397호가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북한은 2018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해소하고 핵이 없어도 안보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동 선언문에 북미 양국이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계 설립’,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쟁포로 및 전쟁 실종자 등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하고, 7월 27일 1차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제2차 정상회담의 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2019.2.27.~28., 하노이)

하지만 양국 정부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범위 등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양국 간에는

일정 기간 소강·교착 국면이 지속되다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협상 교착을 타개하고자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2020년에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후 직접적 자극은 자제하면서도 여러 차례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전 대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²⁰ 특히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하였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북한의 대미 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관계는 변화된 정세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1년에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해 왔으며,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형식을 통해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는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5월에 블링컨 장관은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중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이라며 “관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과의 외교 모색, 기존 합의(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의 존중을 제시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개최된 6월 당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21.9.29.)에서는 “외교적 관여,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미국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20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지만,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북한은 12월 제7기 제5차 중앙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선 철회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있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화성-8형 시험발사(2021.9.28.),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2021.10.19.) 관련 미국의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2021.10.1·10.20.)에 대해 ‘주권침해’, ‘이중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022년 북한의 대미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 기초를 견지하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0여 차례가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국은 6~7월에 다국적 연합군사훈련(림팩, 피치블랙)과 8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용기를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 감시선 부근까지 위협 비행하는 방식으로 반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비난²¹과 러시아 인권이사회 자격 정지 결의를 비난²²하는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연장, 인신매매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고강도로 유지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은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 발간·사이버 문제 대응 등을 빌미로 ‘내정간섭’·‘적대시정책의 발로’라며 비난하였다.²³ 또한 북한은 외무성 보도국장

²¹ 2022.10.6., 10.31, 11.4. 외무성 홈페이지.

²² 2022.4.11. 조선중앙통신.

²³ 2022.7.21. 조선중앙통신, 9.14. 외무성 홈페이지

담화를 통해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비판하였다.²⁴

2 일본과의 관계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1970년대 동서 간 화해무드와 미중 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1991년 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북한은 일본과 수교회담을 11차례 개최하였다. 양국은 1990년대부터 수교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 정상화 후 대북 무상자금 및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5월 22일 1년 8

²⁴ 2022.8.6. 조선중앙통신.

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문제 등으로 북일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2)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의 대일본 외교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탈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²⁵ 북한의 입장에서 대일본 외교를 통해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된 외교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 또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 시기에도 자국 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독자제재를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북한은 아베 정부 시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치마 내각관방 참여(자문역)가 방북하였고, 2014년 북일 간 국장급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다(2014.3., 2014.5., 2014.7.). 특히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회담에서 발표한 「스톡홀름 합의」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

²⁵ 상세 내용은 윤대규 외,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북일 관계 개선 실태 전망,” 『동북아의 변화 동향 평가 및 전망』, pp. 140-166 참고.

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및 북한 내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제재를 추진하였다. 2016년 8월 북한의 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고, 2017년 8월·9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미사일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이에 일본의 아베 정부는 강력한 대북 규탄 성명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서 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와 제2397호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2018년 이후에도 북일 관계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일본에게 납치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일본이 배제될 것이라 경고하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8년 3선에 성공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도 표명하였다. 2019년 9월에는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고를 단장으로 하는 북일 우호 야마나시 현^縣 대표단이 북한에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지만,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2019년 5월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거사문제, 위안부문제, 독도, 군

비 증강 등과 관련한 비난을 전개하였다. 2020년 9월 출범한 스가 정부는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1년 9월 24일 스가 총리가 유엔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히자, 이에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스가 총리도 계기 시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표명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북한이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쿄 하계 올림픽 불참을 결정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021년 10월 새로 취임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10월 8일 첫 국회 연설에서 납치자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납치문제 제기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2022년 2월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 시험을 ‘자위권을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였다.²⁶ 그리고 북한은 일본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한 군사대국화 명분을 마련하고, 일본

²⁶ 2022.3.7. 외무성 홈페이지.

의 자위대 부대 운영을 개편하는 것은 “군비증강과 전쟁준비완성”의 일환이라고 비난하였다.²⁷ 또한 일본이 유엔에서 미국, 호주, EU와 공동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²⁸ 기시다 일본 총리는 2022년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건없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10월에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고 독자제재를 단행하였다.

3 중국과의 관계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唇齒}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과 사회주의이념을 중심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중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교 기조 또한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중국은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진

²⁷ 2022.5.20. 외무성 홈페이지.

²⁸ 2022.6.27. 외무성 홈페이지.

영 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 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중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만이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5월 이후 2011년까지 8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이전 중국 국가주석들도 북한을 2001년 9월과 2005년 10월에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1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 김정일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의 대중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목표 아래 추

진되어 왔다. 2012년 11월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북한과 핵
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3년 5월 김정은 위원장 특
사 자격으로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북중
관계는 급랭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5년 9월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10월 중국공산당 류원산 상무
위원의 북한 노동당 70돌 경축행사 참석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는 다
소 개선되었다.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제3
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대
하지 않았다. 2016년 이후 북한의 제4~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특히 중국은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유
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채택을 지지하였다. 이 결의는 최초로 북한
경제의 핵심 수출 자원인 석탄과 섬유를 포함하는 대북 수입 품목 및
수량 제한과 기존 석유 수출량의 30% 감축, 북한 노동자 신규 노동비

자 발급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비난하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북미 대화 전후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북중 관계는 “동지, 식구,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북중 양국은 문화 및 인적교류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송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한 예술단이 2018년 4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리수용 당 국제부장이 인솔한 친선 예술대표단이 2019년 1월 중국을 각각 방문하여 친선 공연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북한은 노동당 친선 참관단(2018.5.), 대외경제상(2019.4., 2019.8.) 등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분야별 인적교류를 확대하였다.



북·중 정상회담(2019.6.20.~21., 평양)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고, 양국 수교 70주년(10.6.) 기념방안과 양국 간 경제·민생 및 교육·위생·체육·언론·청년·지방 등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다. 이후 각 분야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북한 정권수립일(9.9.), 중국 건국일(10.1.), 북중 수교 70주년(10.6.) 등의 기념일에 정상 간 축전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다져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29일부터 북한은 북중 간의 접경

지역을 봉쇄하였지만, 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관련 5월 구두친서 상호 교환 등 주요 계기 때마다 상호 축전 교환을 통해 전통적 우호 친선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2021년 들어서도 북중 간 접경지역 봉쇄가 지속되었지만 북한과 중국은 상호 친선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양국은 정상 간 상호 방문 기념 공동좌담회를 개최하고(6.21.), 양국 대사들은 상호 언론 기고(6.21.)를 통해 북중 혈맹의 역사와 향후 발전방향 등 친선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7.1.), 북중우호 조약 60주년(7.11.) 등 7월 주요 행사를 계기로 양국은 상호 지지와 우호 친선을 과시하였다.

김정은은 2022년 2월에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중국 사회주의와 공산당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북·중 양국의 친선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징계와 코로나19 상황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불참하였다. 김정은은 3월 21일에 중국 광시족 자치구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에 대한 위로 전문을 발송하였고, 리영길 국방상은 중국인 민해방군 창건 95주년 기념 축전을 발송함으로써 북중 군대의 전략 전술적 협동작전을 강조하였다.²⁹

또한 2022년 8월 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미국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강력히 비판하고, 동일한 논조의 서한을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

²⁹ 2022.8.1. 조선중앙통신.

로 중국 공산당에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 결정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안에 대해 “총서기 동지가 중국 공산당을 령도하는 중임을 계속 지니게 된 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³⁰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자 2022년 7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은 전월 대비 237.93% 급증하였고, 8월 들어 다시 24.21% 증가하였다.

4 러시아와의 관계

1) 김일성·김정일 시기

과거 냉전 시기 북한과 소련은 전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탈냉전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하자 북한도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조·러우호선린협조조약」에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함으로써 북러는 정치·군사 협력뿐 아니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³⁰ 2022.10.23. 조선중앙통신, 2022.10.24. 노동신문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했던 북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양국은 2008년에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을 진행하고, 2012년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협정을 체결하였다.

2) 김정은 시기

김정은 시기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찬성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2014~2015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측 고위 인사들이 매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친선 관계는 지속되었다.³¹

양국은 2015년 3월 북러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2016년 2월 「비법 입국 및 비법 체류자들의 인도와 접수에 관한 협정·의정서」를 조인하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6년 7월에 북·중·러를 연결하는 육로와 해상 국제 관광노선 개통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나진-하산 간 도로를 개통하고, 2016년부터 나진-블라디보스토크 간 항로 개설 및 정기 노선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5월 31일 러시아 외교장관 라브로프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25일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양국 간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북·러 외교관계가 활발히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의 날(6.12.), 북한 정권수립일

31 2015년 5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전승기념일(5.9.) 7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기도 하였다.

(9.9.) 등 각종 계기 시 정상 간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나갔다.

2021년 러시아는 ‘제재’가 아닌, ‘안전보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유엔안보리의 대



북·러 정상회담(2019.4.25., 블라디보스토크)

북제재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21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행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³²

북한은 북러정상회담 2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정당·단체 연합토론회(4.8.), 러시아의 날(6.12.)을 축하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을 보내는 등 북러 양국의 친선활동을 지속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협력 사업은 가스관, 전기,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다. 2021년 8월 북한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20주년을 맞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강조하였다.³³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7월 12일 타스

32 푸틴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북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뒤 인내심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하며, 러시아는 핵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하였다.

33 2021년 8월 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20돌과 씨베리 및 원동(시베리아·극동) 지역 방문 10돌을 기념하여 3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전시회에 알레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고, 임천일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등이 초대되었다.

통신에 따르면 도네츠크 공화국 외무부 나탈리아 장관은 “도네츠크는 이미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와 도네츠크 재건 사업에 관련한 몇 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바가 있다.”라고 언급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외무상들에게 전날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³⁴ 그리고 7월 13일 올가 마케예바 주러 도네츠크 공화국 대사는 신흥철 주러 북한 대사를 예방했으며, 북한 대사로부터 독립 인정서를 받았다. 그리고 북한은 인프라 분야를 러시아와 협력 가능 분야로 고려 중이며, 북·러 양국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도로와 두만강-훈춘-크라스키노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을 고려하고 있다.³⁵

5 유럽연합(EU)과의 관계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대부분의 유럽 연

34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이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통보했다”라면서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따라 이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35 러시아 월간지 'Okno ATR (아태지역을 향한 창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북 러시아대사 마체고라는 북·러경제협력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했다.

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고,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를 계기로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을 진행하고, 같은 해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³⁶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작성·제안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으로 인해 북한과 유럽연합 간 직접 대화가 단절되기도 했다.³⁷

2) 김정은 시기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36 이 회담에서 유럽대표단은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 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37 북한의 인권 문제는 200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 대화를 통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제14차 북한과 유럽연합 간 국장급 정치대화(2015.6., 평양)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나,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을 방문한 것에 이어, 2014년 9월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 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북한과 유럽연합^{EU}은 제14차 국장급 평양 정치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의 지속된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로 인해 양측 관계는 악화되었다.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함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된 독자제재를 채택하였다.³⁸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개인(16명)과 단체(12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7년 10월 16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서 개인 대북 송금액 축소, 대북 투자와 대북 원유 수출의 전면 금지, 역내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갱신 불허를 포함하는 대북 독자 제재안을 채택했다.³⁹ 유럽연합은 2018년 대북 독자 제재안을 4차례 추가로 채택하였으며, 제재안에는 2020년 말까지 북한의 단체 84개와 개인 137명(유엔 제재 결의 포

38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시작하였다. 북한의 제2·3차 핵실험 이후에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였다.

39 개인당 송금 한도를 기존 액수(1만 5,000유로)에서 3분의 1(5,000유로)로 축소하고, 북한의 개인 3명과 인민무력부(現 국방성) 등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다.

함)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2021년 3월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중 북한 제재 대상은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그리고 중앙검찰소였다.

또한, 영국 및 프랑스와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과 ‘화성-8형’ 시험발사에 대해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북한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조치에 대해 ‘적대시정책’, ‘이중기준 적용’, ‘주권침해’라고 언급하며 비난하였다.

2022년 3월 23일 유럽연합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기본권 확보와 백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럽의회는 4월 7일 북한 인권유린과 종교박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과 세계여론 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2022. 3.18, 4.7 외무성 홈페이지).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있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추진해 왔다. 북한은 1980년대 초 ‘자주·평화·친선’의 외교 정책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지속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권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해체와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체제 생존이 급선무였던 북한에게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후원 국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동맹 외교를 강화한 것이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핵보유가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6년 장거리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2009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의 비동맹 국가와의 대외관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2)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는 대북제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동맹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나,⁴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도 대북제재에 동참하였다. 아세안 10개국은 2017년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⁴¹ 하지만 아세안 장관들은 미국 대표의 북한 회원 자격 정지 논의에 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회원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에도 북한은 비동맹 국가 및 전통적 협력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외 여건 개선에 주력하였다. 특히 동유럽·아프리카·아세안 국가 등 우호국가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재가동하였다. 리수용 당 부위원장은 2018년 7월에 쿠바를 방문하여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 그리고 11월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실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2019년에도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과 북한 하노이회담(2.27.~28.) 직후 김

40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6월 북한 김격식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고, 박의춘 외무상은 제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비동맹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2013년 3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2014년 10월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였다. 뒤이어 201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동회의 60주년)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으며, 2016년 9월에 개최된 비동맹국 회의에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였다.

41 필리핀은 2017년 기준 북한의 4번째 대외무역 국가로 필리핀의 대북 수출액은 1,384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570만 달러였다. 그러나 북한이 2017년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하 ICBM) 발사를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2397호, 2017.12.22.)를 받게 되자 이후 필리핀의 대북교역은 급감했다.

정은 위원장은 2019년 3월 베트남 응우옌 푸 쯡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베네수엘라는 2019년 8월 평양에 대사관을 개관하고, 디오스다도 까벨로 제헌의회 의장이 9월에 방북하여 북한과 기술·산업·군사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2021년 3월 19일 북한 사업가 문철명을 불법 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사건에 항의하며 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사실상 폐쇄되었던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하였다.

2021년 들어서도 북한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친선관계 및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수교국의 기념일, 북한 정권수립일(9.9.), 북한 당 창건일(10.10.) 등 기념일을 계기로 주요 우호국인 쿠바·베트남·라오스 등 사회주의 국가, 이란·인도네시아 등 비동맹국가, 기타 수교국 등과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교환하면서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7월 14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화상 방식으로 열린 비동맹 외무장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동맹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하고,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비판하였다.⁴² 9월 1일에는 비동맹운동 창립 60주년을 맞아 반동

42 2021년 7월 20일 북한 외무성은 “인간의 존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이 서방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용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권 문제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비상 방역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누구나 의료봉사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운동적인 관심을 돌려 현시기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악성비루스 위기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원칙에 기초한 비동맹운동의 의미를 강조하였다.⁴³

8월 6일 북한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화상 회의에 참석해서 “조선 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였고, 북한 외무성은 8월 8일 홈페이지에 아세안 창립 54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신기도 하였다.⁴⁴

2022년 북한은 비동맹국가들과 축전과 면담의 형식을 통해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리아 대통령에게 3.8혁명 59주년 기념 축전을 보냈고(2022.3.9. 노동신문), 나미비아 대통령에게는 독립 32주년 축전을 전달했다(2022.3.21. 외무성 홈페이지). 또한 3월에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 방북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북한 주몽골 대사는 몽골대외관계상을 만나 쌍무교류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친선관계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다(2022.6.23. 외무성 홈페이지).

북한은 동남아 담당 국장의 명의 담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친선 및 협조조약’ 가입(7.24) 14주년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7.27) 22주년을 평가했다. 국장은 “아세안이 조선반도와 지역에 조성된 정세의 근원에 대한 독자적이며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상존중의 근본원칙을 고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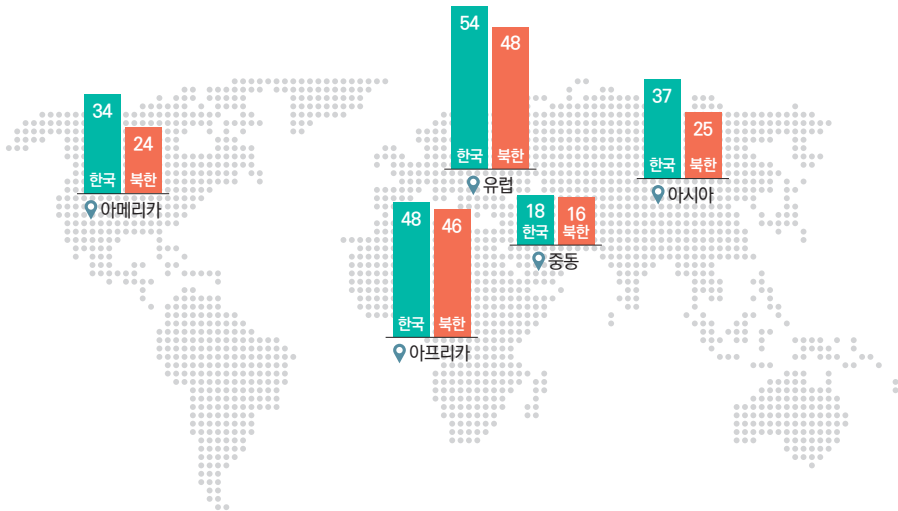
43 2021년 9월 1일 북한 외무성은 “자주와 정의, 평화를 위한 투쟁의 6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신고, 비동맹운동의 60년은 “자주권 존중과 영토 완전, 내정불간섭, 국제적 협조 강화 등 반동10개 원칙에 기초하여 내세운 운동의 이념과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44 북한 외무성은 2021년 8월 8일 홈페이지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 정책적 이념에 따라 아세안의 자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그에 기초한 아세안의 활동을 시종일관 존중하고 지지하여 왔다”고 밝혔다.

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2.7.20.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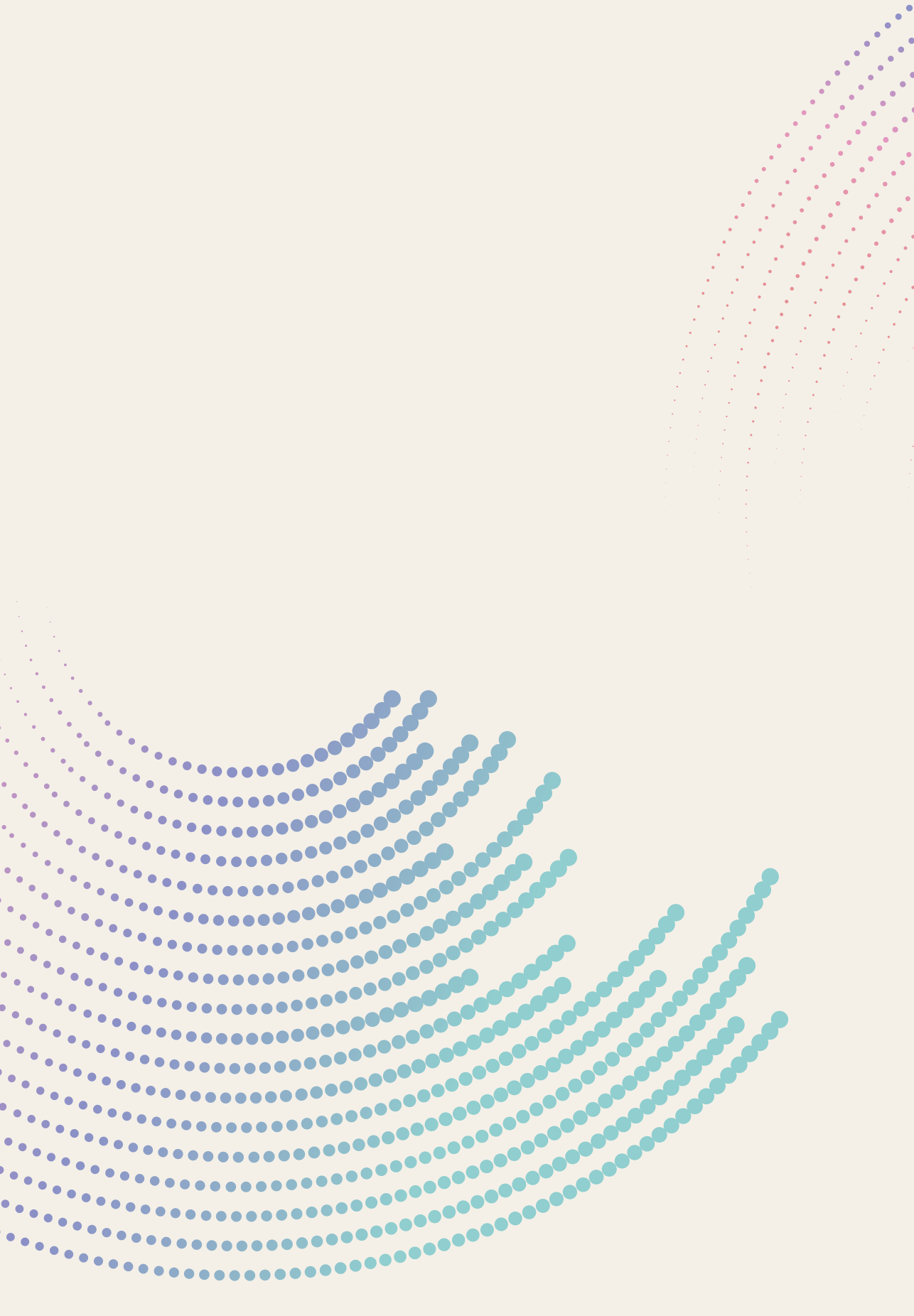
한편, 북한은 2021년 북한 범죄인의 미국 송환 조치를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단교하고, 2022년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단교하였다. 이로서 북한의 수교국은 159개로 감소하였다.

[표 4-2] 남북 수교 현황('22.12월 기준)



지역	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시아	37	25	25	12	0
아메리카	34	24	23	11	1(쿠바)
유럽	54	48	48	6	0
중동	18	16	14	4	2(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48	46	46	2	0
계	191	159	156	35	3

※ 외교부 웹사이트, 2022년 12월 기준





V

북한 경제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정책기조

제2절 거시 및 부문별 현황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제 1 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정책기조

1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 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이란 생산수단이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가 협동농장이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 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제21조)고 하면서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지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즉,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발(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사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화폐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국의 묵인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살림집리용허가증(입사증)’을 관할 기관에 뇌물을 주고 명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1990년대 이후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계획적 관리 시스템과 같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인 계획화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은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지방지표, 기업소지표)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계획 수립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 생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현물 계획에서 액상(금액)계획¹ 달성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4년 이른바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소법」도 2014·2015·2020년 세 차례 개정하여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액상(금액)계획은 계획지표의 현물 생산량에 도매가격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2 경제정책의 기초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이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²이다. 또한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³이다. 다음으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軍産複合形)으로 조성하고 북한 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군수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기에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주요 경제정책기조로 추진하여 김일성 시대의 병진노선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경제 환경 변화에도 본질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2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08.

3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15-716.

을 통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병진노선은 사실상 국방부문에 대한 과잉 예산배분으로 산업부문의 불균형과 소비재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켰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초래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후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공표하였으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유엔안보리로부터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시한 대표적인 경제목표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이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 개최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전략으로서 당면목표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기간 중에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실현할 것과, 장기목표로 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6~2020년까지 첫째, 전력문제의 해결, 둘째, 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셋째, 기계·화학·건설·건설공업 부분의 발전, 넷째, 농업·수산업·경공업 부분의 발전, 다섯째, 대외무역·합영합작·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 여섯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

였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완성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면돌파’⁴와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까지 겹쳐 북한의 경제목표 달성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⁵하며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첫째, 경제자립구조의 정비 및 보강, 둘째,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제품 생산의 증대, 셋째, 인민 생활 향상의 중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속·화학 등의 기간 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정상화를 실현하며, 농업부문에서 물질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공업부문에서는 원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를 통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릴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외경제는 대내의 자립경제 잠재력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⁶과 ‘자급자족’을 전면에 내세워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21년 1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2022년에도 기간산업을 비롯

4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12.28.-12.31.)

5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2020.8.19.)

6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당총비서는 ‘자력갱생’에 대해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생산 부문 전반에서의 증산과 민생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해결’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의식 제고, 식량문제의 완전한 해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22년 2월 6일 개최한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기업의 무역자유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내각책임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기업경영관리,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및 일원화 통제체계 강화 등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준수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에도 지속되어 5차 및 6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의주’에 해당하는 농업, 경공업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성과를 창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은 표면상 민생경제를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치체제 유지를 우선으로 한 경제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2 절

거시 및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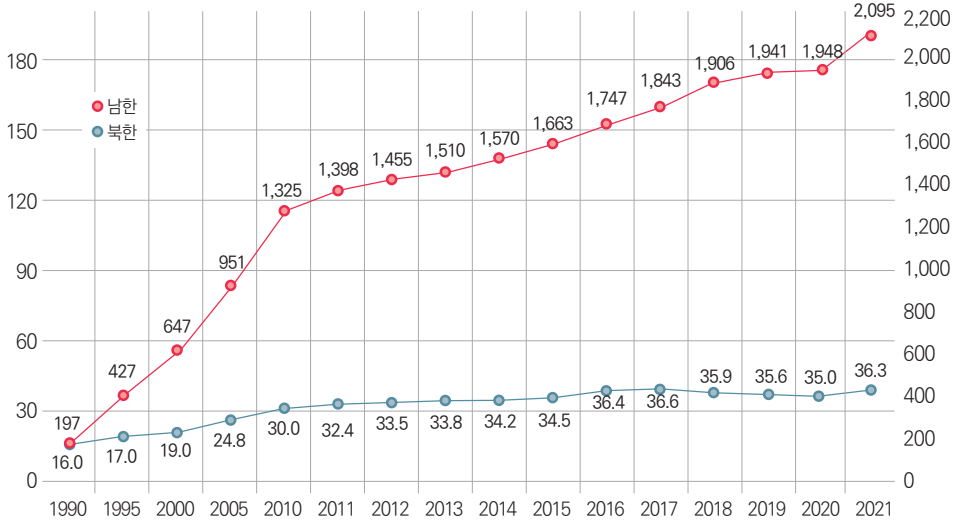
1 거시경제 현황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우리의 산업연관표와 유엔^{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해 북한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등의 주요 경제통계들을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 산출한 통계치이므로 북한경제 통계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국민총소득과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1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 ; Gross National Income} 규모는 36.3조 원(한국 원),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142.3만 원(한국 원)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추이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1] 북한 국민총소득 추이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명목GNI	24.8	24.4	24.8	27.3	28.6	30.0	32.4	33.5	33.8	34.2	34.5	36.4	36.6	35.9	35.6	35.0	36.3

* 자료: 『2022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22. (단위: 조 원)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 일부 증가하기도 했으나 미미하며, 2021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1/58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1/28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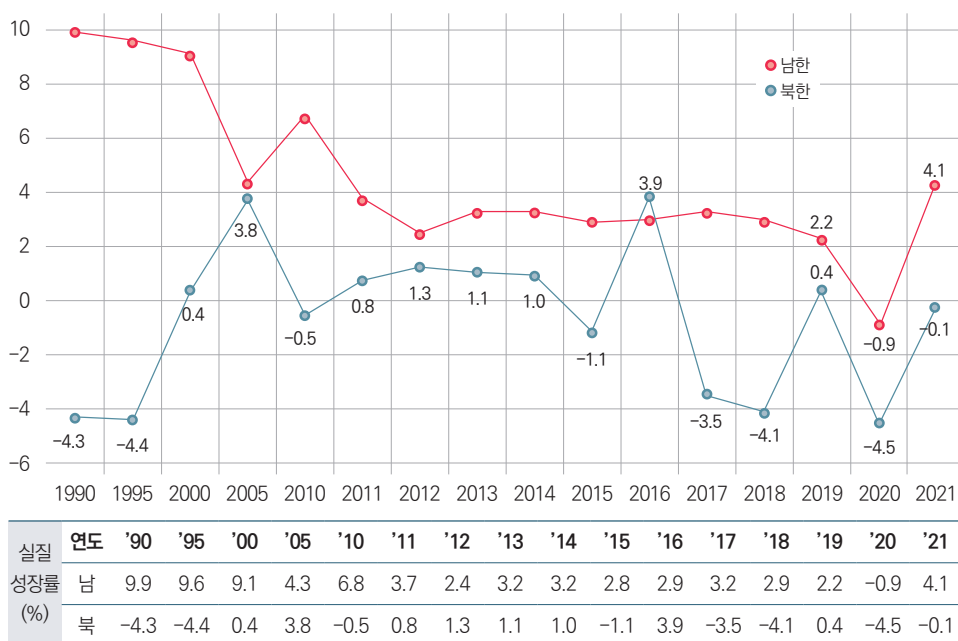
[표 5-2]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1990~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총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라고 명명한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붕괴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교역이 위축·중단됨으

로써 더욱 가중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선순환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1999~2005년간 연평균 약 2.2%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연평균 0.1%, 2011~2015년간 연평균 0.6%로 침체를 유지하다가,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 2020년 -4.5%, 2021년 -0.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2015년, 2017년, 2018년, 2020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전년대비 증감률, %).

년, 2021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집권 초기에는 시장 활용 정책과 대외무역 및 경제개선 조치의 추진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나, 이는 북한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라기보다 2017년, 2018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부분 활성화 현상은, 주로 서비스 및 유통 경제, 건설 부문 그리고 비공식경제 부문에 집중된 반면, 제조업·광업 등 실물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는 크게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경제 및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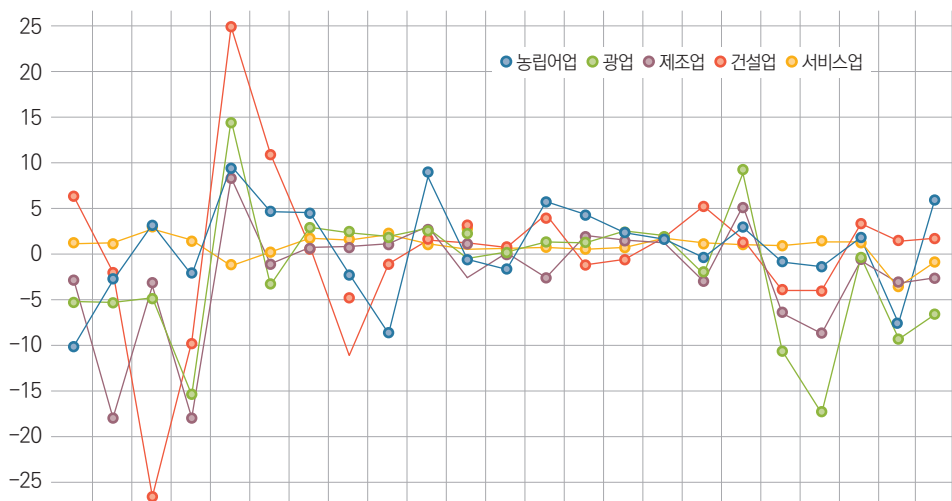
2) 산업별 성장률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 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효율성·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어도 대부분의 산업 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 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유 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 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재 제품의 공급 축소로 연결되는

산업 연관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표 5-3]에 제시된 북한의 주요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1990년대에 모든 산업 부문에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97년으로 광업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 성장률은 -18.3%에 이를 정도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 제조업의 가동률

[표 5-3] 북한의 주요 산업성장률 추이



구분	'90	'92	'94	'97	'99	'02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농림어업	-10.5	-3.3	2.8	-2.7	9.2	4.2	4.1	-2.6	-9.1	8.0	-1.0	-2.1	5.3	3.9	1.9	1.2	-0.8	2.5	-1.3	-1.8	1.4	-7.6	6.2
광업	-5.6	-5.7	-5.2	-15.8	14.2	-3.8	2.5	1.9	1.5	2.4	-0.9	-0.2	0.9	0.8	2.1	1.6	-2.6	8.4	-11.0	-17.8	-0.7	-9.6	-6.5
제조업	-3.2	-18.3	-3.9	-18.3	7.9	-1.5	0.3	0.4	0.7	2.6	-3.0	-0.3	-3.0	1.6	1.1	0.8	-3.4	4.8	-6.9	-9.1	-1.1	-3.8	-3.3
(경공업)	0.9	-7.6	0.1	-14.2	2.9	2.7	-0.2	-0.6	-2.2	1.3	-2.1	-1.4	-0.1	4.7	1.4	1.5	-0.8	1.1	0.1	-2.6	1.0	-7.5	-2.6
(중공업)	-4.1	21.3	-5.5	-20.3	10.4	-3.9	0.6	1.0	2.2	3.2	-3.5	0.1	-4.2	0.2	1.0	0.5	-4.6	6.7	-10.4	-12.4	-2.3	-1.6	-3.7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0.5	0.4	-11.5	-1.5	1.1	0.8	0.3	3.9	-1.6	-1.0	1.4	4.8	1.2	-4.4	-4.4	2.9	1.3	1.8
서비스업	0.7	0.8	2.3	1.1	-1.7	-0.2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0.8	0.6	0.5	0.9	0.9	-4.0	-0.4

*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전년대비 증감률, %)

은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당시 김정일 정권은 출범 이후 산업 연관관계를 복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른바 ‘기술개건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였으며,⁷ 그 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건 대상, 신설 대상으로 분류해 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으로 기초 에너지 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대체 투자 및 신규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서 추진된 ‘기술개건 정책’은 ‘4대 선행부문’의 정상화라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이었다. ‘4대 선행부문’이란 전력, 석탄, 철도운수, 금속 산업 부문을 의미한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 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군수 공업과 연관된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생산력 붕괴 상황에서 일단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산업성장률은 2003년까지 여전히 마이너스 추세였다가, 2004년 이후 연평균 1%대와 마이너스 2%대를 3~4년 주기로 반복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광업·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미미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 각기 8.4% 및 4.8%라는 다소 높은 성장

7 대안 유리공장 폐쇄(2000년), 남포제련소 인비료 직장 폐쇄(2000년), 사리원 카리 비료공장 철거(2005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세를 나타냈지만, 2017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진전은 과거보다 실용적 산업정책을 취한 결과로 평가된다. 즉 기계류 및 설비 자재의 수입 증가에 의한 일부 공장·기업소의 생산 기반 확충,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결합된 국산화정책, 그리고 돈주의 역할에 기초한 시장 활용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은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 등 평양 아파트 건설, 문수 물놀이장·마식령 스키장·해당화관 등 다수 위락시설 등)을 추진하며 화장품, 문구류, 신발·의류, 일용 식품류 등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진을 시행했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발표하며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발전엔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초 에너지·소재 분야의 정상화를 산업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금속·화학공업 등의 기간산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장기화,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산업가동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북한의 의미 있는 산업경제 발전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면돌파’, ‘자력갱생’, ‘자급자족’, ‘내부예비 동원’ 등을 내세우며 산업경제의 위기를 자체적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자본 등 투입요소의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면한 경제회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문별 현황

1) 에너지

1990년대 북한 산업생산력의 붕괴는 주탄종유⁸ 체계에 기초한 에너지 공급 체계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파괴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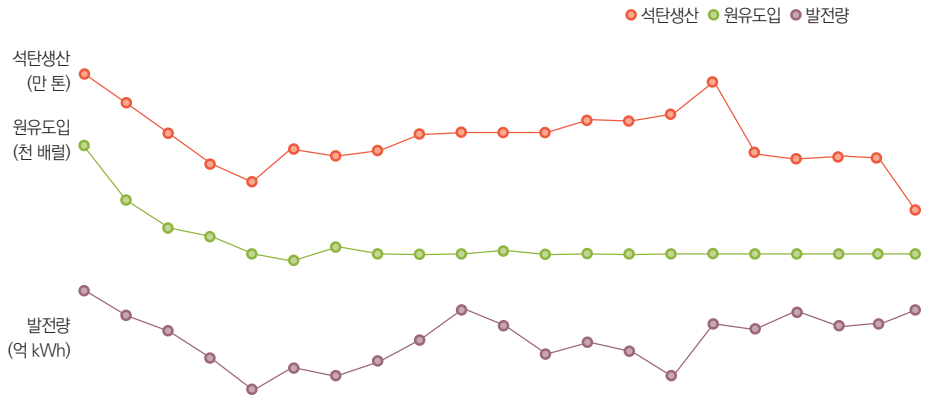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산업 연관관계 복구와 함께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정상화를 매년 신년사설, 최고인민회의 발표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발표 시에 우선순위로 두어 왔지만, 아직 에너지 산업의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 5-4]의 통계청 통계를 보면, 1998년의 석탄·원유의 도

8 북한의 에너지는 석탄이 주도하고 석유가 보조하는 체계이다.

입·발전량은 1990년 대비 각기 56.1%, 19.9%, 74.8%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점진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면서 석탄생산량과 발전량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 에너지 분야 연관 산업의 지속 곤란, 외화 확보 목적의 수출용 석탄 생산에 대한 집중 등으로 인해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선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다. 2020년 기준 원유 도입량이 1990년 대비 21.1%, 전력 생산량은 86.3%, 석탄 생산량은 57.3% 수준으로 1990년대 수준 대비 미달 상황에 있다.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구분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석탄 생산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00	2,580	2,660	2,709	2,749	3,106	2,166	1,808	2,021	1,900	1,560	
원유 도입	18,472	11,142	6,670	6,861	3,694	2,851	4,376	3,900	3,841	3,878	3,870	3,834	4,237	3,885	3,885	3,885	3,885	3,885	3,885	3,885	3,885	-
발전량	277	247	231	213	170	194	190	206	225	255	237	215	221	216	190	239	235	249	238	239	255	

*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연도별 내용을 참조

* 주: 중국은 2013년까지만 대북 원유공급량을 발표. 따라서 2014년 이후 북한의 원유 도입량 통계는 기존 관행 공급량에 의거해 추산한 통계

전력 생산

북한의 발전소들은 1970년대 이후 발전소 현대화와 설비 대체 투자도 사실상 거의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동평양, 평양, 북창, 청진 등 주요 화력 발전소의 경우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타격을 받아왔다. 석탄 채굴 증가로 칼로리 함량이 낮은 저열량 석탄 사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화력 발전소 가동에 착화를 위한 증유 사용도 필수였다. 북한의 전력생산 부문은 여타 산업 부문에 비해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이 적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이 50% 수준 이하였다. 이후 1990년대 전반에는 80년대 말 대비 원유 도입량이 1/5 수준으로 추락했고, 석탄 생산량은 50% 이하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6,800여 개의 중소형 수력 발전소(평균 11kwh의 발전량)와 약 20여 개 이상의 중·대형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했지만, 후진적 설비와 낙후된 기술, 일정치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목표로 한 획기적인 전력 생산 증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수력·화력 발전소의 설비 개보수 및 터빈 교체 작업을 추진하며, 원산군민발전소, 희천발전소 3~12호,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예성강청년5호발전소 등 많은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2018년 12월에는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를 증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속도전식 건설과 낮은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전량이 발전설비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준공 및 개보수 이후에도 빈번하게 가동이 중단되어, 많은 노력

동원을 통해 건설한 수력 발전소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0년대 증가 추세에 있던 전력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는 2008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전력 분야를 주요 기간산업으로 설정하고, 발전량 증대를 독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전력산업 복구가 난항을 거듭하자, 북한에서는 민간 에너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개별 가정, 소규모 서비스 기관·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으로부터 11W, 50W, 100W 등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변압기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 및 기관 운영, 소규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태양광 집열판 수요가 늘어나자 2~3년 전부터 북한은 소형 태양광 집열판들을 일부 생산·공급하고 있다.

석탄 생산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외화난으로 원유 도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의 정상화는 곧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대규모 탄광들은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 수해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붕괴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소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소형 탄광 개발에 주력해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다. 그리고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해 탄광들이 부분 복구되고, 일부 탄광에 중국 자본에 의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폐갱된 소규모 탄광에 대한 ‘돈주’의 투자도 나타나 석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대중 수출 상품 제1위의 품목이 될 정도로 늘어났다. 2012년 2,580만 톤에서 2016년 3,106만 톤으로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규모가 2010년 464만 톤(3.9억 달러)에서 2016년 2,249만 톤(11.8억 달러)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석탄생산량은 2017년 2,166만 톤, 2018년 1,808만 톤, 2019년 2,021만 톤, 2020년 1,900만 톤, 2021년 1,5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북한의 석탄산업 부문은 주력 수출 부문으로서 당·군 등 특권기관들에 의해 주로 장악되어 있고, 이 기관들은 외화벌이에 주력할 뿐 석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 재투자를 해오지 않았다. 북한의 석탄산업은 북한 석탄 수출을 전면 규제하도록 한 유엔 대북제재 2371호(2017.8.5.)의 영향을 받아 향후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수출용 석탄을 내수용으로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도입

냉전 시대에 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

무역 방식,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한 구상무역 방식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 주었는데, 1980년대 말경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약 250만 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체제 전환으로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했는데, 외화 부족으로 인해 원유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평균 공식적으로 50여만 톤을 공급해 왔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식 공급량은 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왔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공급량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평안북도에 소재한 봉화 화학 공장이 기존처럼 가동되고 있고, 장마당 유통 석유 가격이 2017년 말까지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볼 때, 중국의 통계 미발표 이후에도 중국이 대북 원유 및 석유 관련 제품을 공식 수출을 통한 경로 외에도 무상 원조, 장기 차관, 밀무역 등 다양한 비공식 방식으로도 공급해 온 것으로 국제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선봉 간 해운 항로 및 북러 간 철로를 통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정제유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2016년 말까지 외부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유를 도입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원유·석유 관련 제품 도입량은 유엔 대북제재 제2375호(2017.9.11.), 제2397호(2017.12.22.)를 통해 연간 수입 상한선이 정유제품 공급량은 기존의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되고, 원유 공급량은 연

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면서 제약을 받고 있다. 다만,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비공식적으로 도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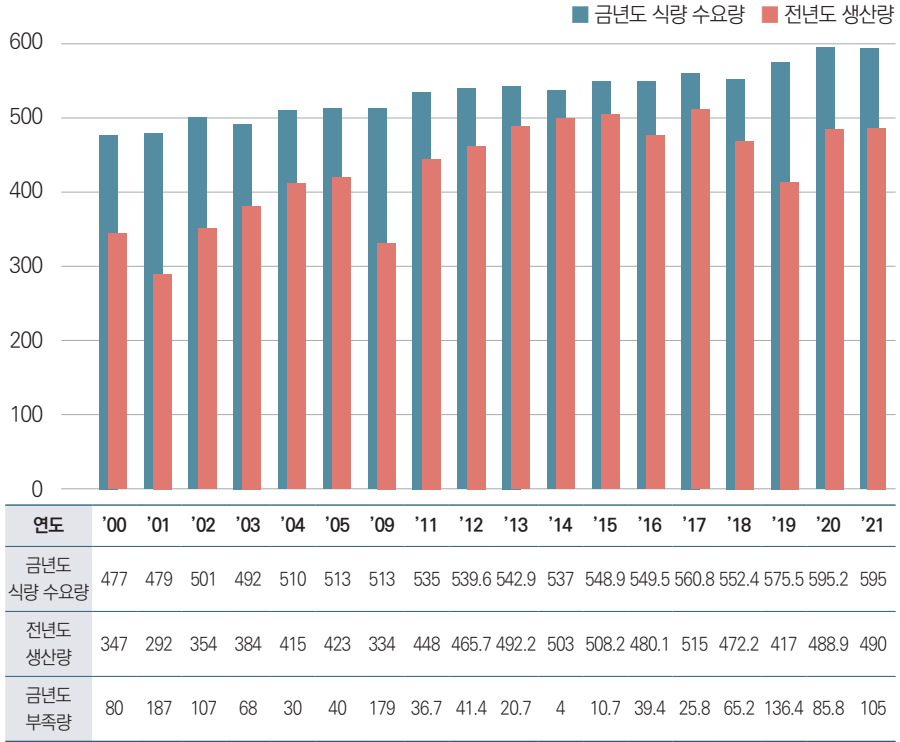
2) 식량

북한의 식량 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 집단 영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등으로 인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428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이미 정량 배급 기준에 평균 160여만 톤의 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일반 노동자의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한 546g으로 줄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등으로 기근 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이 중단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 원자재 생산 급락,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급감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1997년 3년간 식량 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함으로써, 감량배급(22%) 기준 식량 부족량이 평균 210여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양호한 기상 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표 5-5]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 자료: WFP/FAO

* 주: ① WFP/FAO는 '06·'07·'08·'10·'20년未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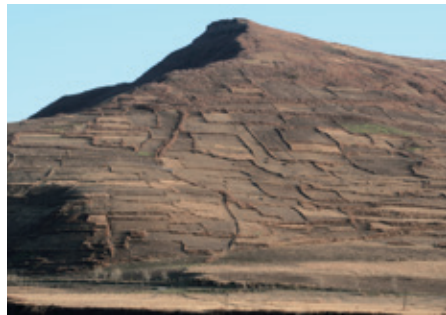
② 금년도 식량 수요량 - (전년도 생산량 + 외부 도입량) = 금년도 부족량

③ 농진청은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FAO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여 매년 발표, 최근 3년간 생산량은 △'19년 464만 톤, △'20년 440만 톤, △'21년 469만 톤, '22년 451만 톤 집계

④ 북한은 유엔에 보고한 자발적국가리뷰(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년 7월 제출)에서 곡물생산량(조곡)은 2018년 495만 톤, 2019년 655만 톤, 2020년 552만 톤 생산한 것으로 보고



식량증산 독려 선전화



북한의 소(燒)토지(화전)

비료지원, 국제사회의 농업 협력, 자체 농업 기반 복구·조성 노력(자연흐름식 물길 공사, 토지 정리 사업) 등에 힘입어 4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는 연평균 480만 톤 수준의 곡물 생산량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부족량은 연평균 53만 톤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 북한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상업적 식량 수입량과 주민들의 소규모토지 경작물까지 고려해보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 규모가 줄어들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식량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농업 부문이 여전히 농업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투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상조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식량 문제의 완전 해결을 농업 분야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새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도 다시 한번 식량생산 증산 및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구축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⁹ [표 5-5]의 북한 식량 수요량 추계는 최소 칼로리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정상 칼로리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19년 5월 이후 2년 만에 북한 곡물생산량을 추정발표(2021.6.14.)하였는데, 생산량(약 490만 톤)

9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뭄과 큰물,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 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수요량(약 595만 톤)에 비해 약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므로 북한은 여전히 ‘식량지원 필요국가’라고 지정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식량 증산을 강조하며 이른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 등의 농업관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급자족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3) 대외무역

냉전 시기 북한의 자력갱생 발전노선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의 하나로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다.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며, 본격적인 경제난 도래 이전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0년 42억 달러가 최대 규모였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원유 등 전략 물자들은 구소련과의 사회주의 우호무역을 통해 공급받다 보니, 구소련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약 80%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도에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단일화된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조용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과 새로운 대외경제 관계를 모색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지체로 구舊 사회주의 경제권에만 집중된 대외무역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5-6] 연도별 북한의 대중·전체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대중국	전체	대중국	전체	대중국	전체
2000	37	556	451	1,413	- 414	- 857
2002	271	735	467	1,525	- 196	- 790
2004	582	1,020	795	1,837	- 213	- 817
2006	468	947	1,232	2,049	- 764	- 1,102
2008	754	1,130	2,033	2,686	- 1,279	- 1,556
2010	1,188	1,513	2,278	2,660	- 1,090	- 1,147
2012	2,485	2,880	3,528	3,931	- 1,043	- 1,051
2014	2,841	3,164	4,023	4,446	- 1,182	- 1,282
2015	2,484	2,696	3,226	3,555	- 742	- 859
2016	2,634	2,820	3,422	3,710	- 788	- 890
2017	1,650	1,772	3,608	3,778	-1,958	-2,006
2018	195	243	2,528	2,601	-2,334	-2,358
2019	216	277	2,879	2,967	-2,663	-2,689
2020	48	89	713	774	-665	-684
2021	58	82	624	631	-566	-549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률 추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00년 19.7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무역이, 2005년 30억 달러, 2010년 41.7억 달러, 2014년 76.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해 나갔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도 2016년에는 6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 55억 5,000만 달러(남북교역 제외)였으며, 2018년에는 28.4억 달러로서 전년 대



훈춘 권하 세관 앞 중국 화물차들



단동-신의주 간 압록강 철교 위 무역물자 차량들

비 48.8% 감소하였다. 반면에 2019년 기준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32.4억 달러(수출 2.8, 수입 29.7)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20년 8.6억 달러(수출 0.89, 수입 7.74), 2021년 기준 7.1억 달러(수출 0.8, 수입 6.3)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종합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연평균 무역 규모는 2017년을 제외하고 2011~2016년간 68.2억 달러로서 김정일 정권 후반기(2006~2010년)의 연평균 34.7억 달러에 비해 약 2배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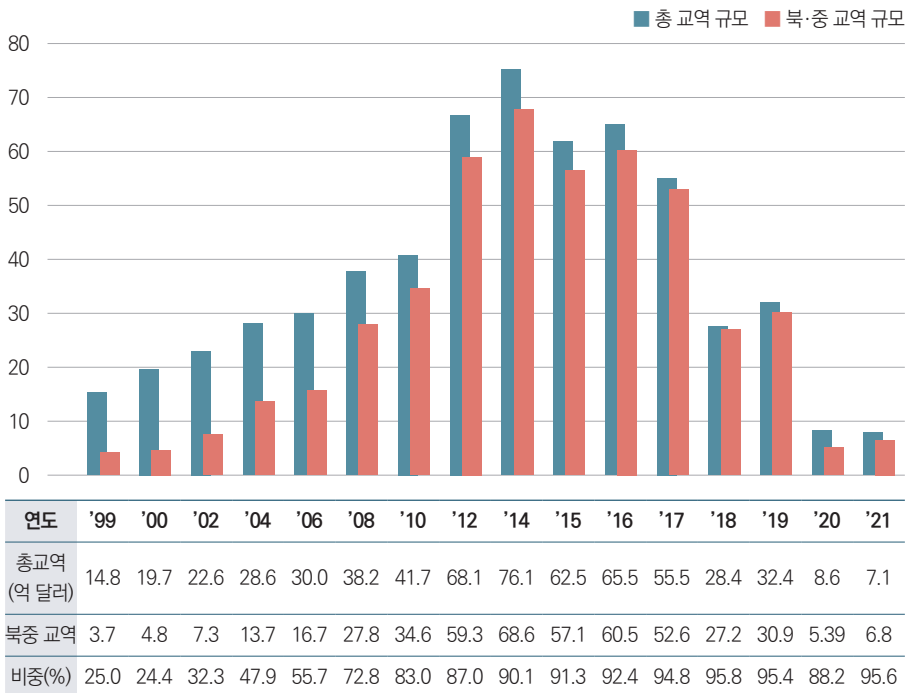
이는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연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과 노동력 수출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획득된 외화가 수입 능력 확대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이 내수 시장 및 소비시장의 확장을 초래해 무역 수요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증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무역 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외화 획득 경로도 다양화시키는 대외 경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2011~2016년까지 보여준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은 북한 경제의 실물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년대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1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한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무역 외 수지(노동력 수출, 관광 수입 등)로 대체해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북한 무역 규모의 성장이 광물자원 및 위탁가공 제품의 수

[표 5-7]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 주: 2015년 이후 북중 교역액에 원유 수입 추정치(2015년의 경우 약 3억\$, 2016년의 경우 2.3억\$)를 포함시켰음.

출과 온갖 종류의 공산품·완제품, 식량·원유 등 전략 물자의 수입이라는 후진국형 무역구조의 고착 속에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무연탄·철광석·아연 등 광물자원 수출은 매년 55~65% 비중을 차지해 왔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의류 위탁가공 제품이 제2위, 수산물 이 제3위의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수입에서는 곡물 및 비료 등 민생 관련 품목, 자체 생산이 어려운 기계설비 및 중간재, 섬유류와 같은 위탁가공 원부자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 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가는 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0년 24.4%에서 2016년 92.7%, 2017년 94.8%, 2018년 95.8%, 2019년 95.4%, 2020년 88.2%로 증가해 ([표 5-7] 참조) 사실상 대외무역 자체가 대중국 교역으로 고착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강화와 남북 경협 및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된 풍선효과, 중국 동북3성 지역 경제와 북한 경제의 상호 수요 접근, 중국의 대북 전략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제2375호 채택 이후 북한은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 섬유 위탁가공 제품, 수산물 등 수출 금지와 더불어 신규 노동력 수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는

산업용 기계, 철강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수입까지 금지하여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48.8%)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말부터 북한 스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중단되었다. 5월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식자재 수입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2020년 8월부터 다시 제한이 강화되어 북중무역은 2019년 대비 82.6% 감소하였다. 이후 2021년 북한의 총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17%로 감소,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 3 절

경제정책의 변화

1 시장화와 대내 경제정책

1) 시장화 현상

북한 경제에서 시장화 현상은 1980년대 중후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자재 공급과 배급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자, 2003년 북한 당국은 10일장 형태의 농민시장을 상설시장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농민시장은 계획경제 하에 운영되던 공식시장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 ‘장마당’ 등으로 발전하여 당시 불법 거래 상품이었던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품 등을 매매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림 5-1]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북한 주민들은 처음 배급제가 중단되었을 당시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 목적으로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시장에 등장했지만, 여러 차례의 교환활동을 통해 부의 축적을 경험하며 화폐 자본을 축적해 나갔고, 일부는 상업자본을 축적하여 ‘돈주’로도 성장했다. 시장에는 공장·기업소 자산의 전유, 약탈·탈취 등을 통해 유입된 재화, 텃밭·

소토지 등에서 경작된 농축산물, 개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품,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북중 간 공식·변경 무역 및 밀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입된 재화들이 조달되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무렵 심각한 식량난과 계획경제 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하게 되자 북중 접경지대의 통상구를 개방하고, 국가 지정 무역기관 외에 정부 부처인 성(省), 기관, 군부대, 지방의 도인 민위원회, 공장·기업소들도 대외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경에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진전되었다. 주요 시·도에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특화된 시장들이 발달되어 나갔다(그림 5-11 참조). 주민들의 장사 형태도 ‘등짐 장사’에서 출발해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장사인 ‘되거리 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판 장사’ 등에서 2003년 상설 시장이 도입된 이후 시장에서 앞서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분화·발전되어 나갔다.

현재 북한의 계획경제 하에 운영되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뿐이다. 생산요소 시장(자본·노동·토지시장)은 공식적 운영을 허용하지 않아 부를 축적한 개인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 확산되고 있다.

생산물 시장으로서 북한 전역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과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2022년 기준 약 414개¹⁰

¹⁰ 홍민, “공식시장의 규모와 분포 변화,”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2022.11.23.) 『2022 북한 공식시장 조사 결과 : 규모와 분포, 장세 현황, 입지 변화』 발표 자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일 개장하여 통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 및 식량 등의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다.

[표 5-8]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 쌀 가격

(단위: 원/1kg)

기간	평양	신의주	혜산
2022.03.20.	4,940	5,100	5,200
2022.05.30.	5,000	5,200	5,300
2022.07.26	6,280	6,300	6,800
2022.09.18.	5,600	5,800	6,000
2022.11.27.	6,000	6,200	6,300

* 출처: 데일리NK

[표 5-9]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 환율

(단위: 원/1달러)

기간	평양	신의주	혜산
2022.03.20.	6,450	6,520	6,610
2022.05.30.	7,300	7,350	7,260
2022.07.26	8,150	8,200	8,000
2022.09.18.	8,200	8,250	8,000
2022.11.27.	8,400	8,400	8,200

* 출처: 데일리NK

시장 운영 과정에서 북한은 시장사용료(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시장에서 매대를 빌려 공식적으로 장사하려면 시장사용료(장세)를 지불해야 하며 상인 1인이 납부하는 시장사용료(장세)는 품목별, 지역별로 다르다.¹¹

11 시장사용료(장세)는 매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에 따라 다른데, 채소류, 생선류, 의류, 공산품 등의 순에 따라 최소 5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시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장세가 다른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다.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서울: 통일연구원, 2016) 및 북한이탈주민인터뷰 자료.

시장의 과잉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은 김정일 통치시기인 2005~2009년까지 시장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은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을 김정은 정권은 묵인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 김정일 시기

1990년대 시장화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으로서 북한 경제의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라는 큰 모순을 야기했다. 김정일 통치시기 북한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2002년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이하 7.1 조치)’의 후속조치인 상설시장화 조치(2003.3.)를 통해 계획경제하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7.1 조치에 의해서는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에 분권적 자율 경영 권한이 일부 부여되었고, 상설시장화 조치에 의해서는 기존의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거듭나 매일 개장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 간 원자재·생산재 교류가 가능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과 수입물자교류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부분 제도화한 상설시장화 조치 이후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종합시장 바깥의 장사활동(메뚜기 장사, 주택가·골목장사, 방문 판매) 및 개인 경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업종(노래방·PC방, 숙박업, 운송, 목욕탕, 식당, 개인 수리업, 자

전거·오토바이 배달 등) 및 자영업이 발전되어 나갔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존 업종과 생산 활동을 아예 변경해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거나, ‘돈주’의 투자를 유도해 ‘돈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 몫을 받아 국가기업이익금을 내는 현상도 나타났다. 상설시장 도입 조치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시켰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을 통제해 나갔다. 시장 억제 정책은 김정일이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언급한 이후, 본격화되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시행 및 종합시장 철폐로까지 이어졌다.¹²

그러나 재정 수입 증대와 시장규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의도했던 북한의 화폐개혁은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가계 경제가 시장활동을 통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계획경제 공간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고 있었으며, 국가의 재정 수입조차 시장의 토대 위에서 상당 부분 달성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은, 합법과 비합법의 혼용으로 결국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구조를 고착시켰다.

12 북한의 화폐개혁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 대 1의 비율로, 한 가구당 10~15만 원(북한 원)까지 교환해주는 것을 원칙하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화폐개혁은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했던 북한 주민 경제생활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실패로 끝났다.

3) 김정은 시기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경제가 이제는 결코 계획경제 체제로 회귀할 수 없고, 시장이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돈주’ 및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의 단기 업적을 가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이 오늘날처럼 양적·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돈주’가 중심 역할을 하는 사금융 시장의 발달도 한몫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에는 주로 환전 및 고리대금업 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유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는 ‘북한판’ 화폐 자본가로 변모해 갔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



평양역 앞의 대동강택시(2018)



별이버스(시외버스, 2012 평양)

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돈주'들은 사금융 분야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분야에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화폐 자산을 축적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시외버스·택시·물류 등 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 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문에까지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돈주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을 개인유휴자금 활용으로 합법화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영기업소와 국영상점과 같은 공식경제 부문들이 돈주의 투자를 받아 직접 시장지향적 경영활동을 행하고, 이 과정에 이익을 창출하여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때때로 돈주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가는 것을 견제하고 있지만, 공식경제 부문의 경제활동이 돈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국영사업망 복원정책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다소

강화되고 있다.

둘째, 공장기업소의 부분적인 자율 경영에 따라 기업소지표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생산된 생산품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국 차원의 내수시장 견인 조치를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은 의류, 신발, 식품공장 등을 방문하여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상품의 생산 판매를 촉구하였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상점을 건립하는 등 주민들의 소비를 국영부문으로 흡수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협동농장 경영활동도 시장과 연계되어 농산물 시장 유통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이른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도입해 국영기업소, 국가기관, 협동농장들의 시장과 연계된 활동을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 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이다.¹³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2013년 전면 도입)’,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2014.5.30.)’¹⁴의 시행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하부말단 노

¹³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 『조선신보』, 2012.6.28.

¹⁴ 북한은 201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동단위인 분조의 규모를 10~1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하고, 1인당 약 1,000평씩 토지를 배분하여 경작하게 한 후, 생산물 중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을 제외한 초과 생산물을 경작 농민들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로서 협동농장에서는 ‘농장책임관리제’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농장 대부 면제’ 특혜를 실시하는 등의 농촌 환경 변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202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살림 집 건설’ 외 별다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곡물생산량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외 개방정책

1) 4대 경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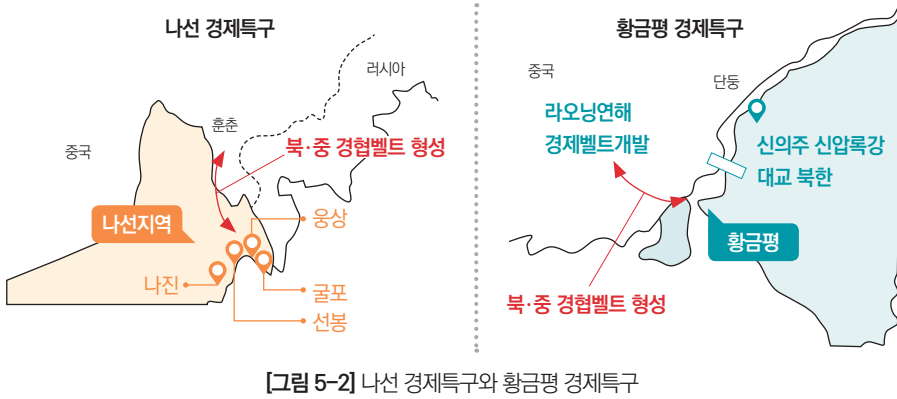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 간 연결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제공받아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

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법 등을 제정하였고 이에 이어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신의주·개성·금강산까지 합해 4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로 개설되어 가동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2008년 8월에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2016년 2월 전면 중단되었다.

2) 대중국 경제협력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한의 5.24 조치에 의해 남북 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 경제정책을 변화시켰다.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키고,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나선·황금평·위화도를 중국과 함께 공동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북한 장성택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



[그림 5-2]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여하는 공동 착공식을 개최하고 ‘조·중 라선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이라는 공동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었다. 또한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 간 교량,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 및 증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양 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은 답보 상태에 있다. 우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형식상 관리위원회 건물만 건축된 후 사실상 수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신압록강대교(20.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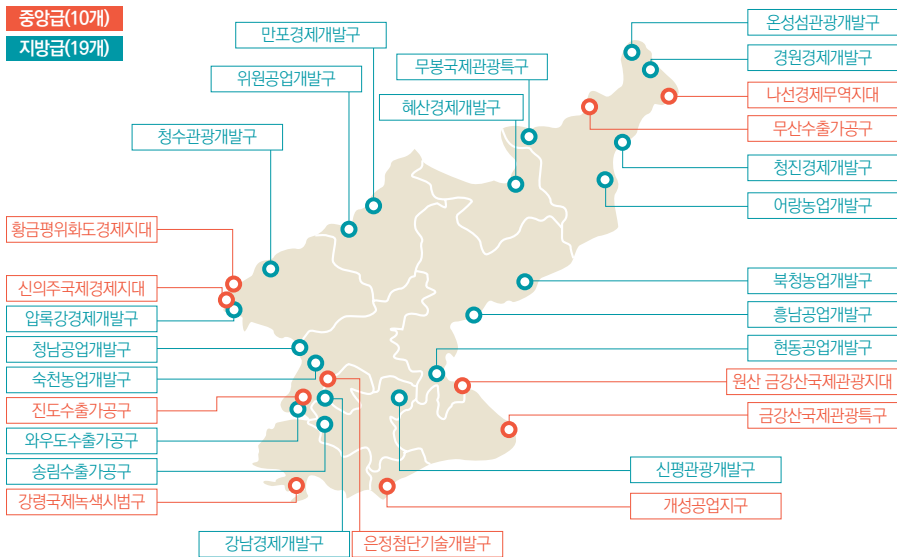
집안-만포 간 철로(17.7월)

나선 경제특구의 경우 북중 간 합의된 소규모의 프로젝트만 몇 개 추진되었다. 즉 중국이 사용하는 나진항 1호 부두 개보수 및 창고 건설, 북한 원정리 세관과 나진항 간 도로 확장(2차선→4차선), 길림성-나선시 간 고효율 농업 시범구 협력사업 일부 등만 전개되었을 뿐이다. 중국의 나선 경제특구 내 자본 투자는 주로 식당·가라오케·숙박업·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이고,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나선 경제특구의 개발보다는 나진항을 이용해 자국 남방 지역으로의 물류 이동에 필요한 원정리-나진 간 도로 확장·개선과 제2두만강대교 건설에 주력해왔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013년 5월까지 나선 경제특구의 외자 유치는 약 4.1억 유로(약 4.8억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은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2011년 북중 간 합의되었던 통상구 연결 다리와 도로의 개보수 및 신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현재 미개통)하고 신두만강대교를 개통(2016년)하는 한편, 중국 집안-북한 만포 간 다리 및 철로를 신축(2019년)하였으며, 중국 도문-북한 남양 간 다리를 새롭게 건설하였다. 대북제재의 강화와 상관없이, 중국의 필요에 의한 소규모 접경지대 연결 인프라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통상구 다리를 이용한 중국인의 대북 자가용 관광, 1일 혹은 반나절 관광은 코로나19로 북한 내 해외관광객 유입이 차단되기 전까지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3) 경제개발구 신설

김정은 정권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대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¹⁵하고, 2021년 기준 중앙급 10개와 지방급 19개 경제개발구 등 총 29개의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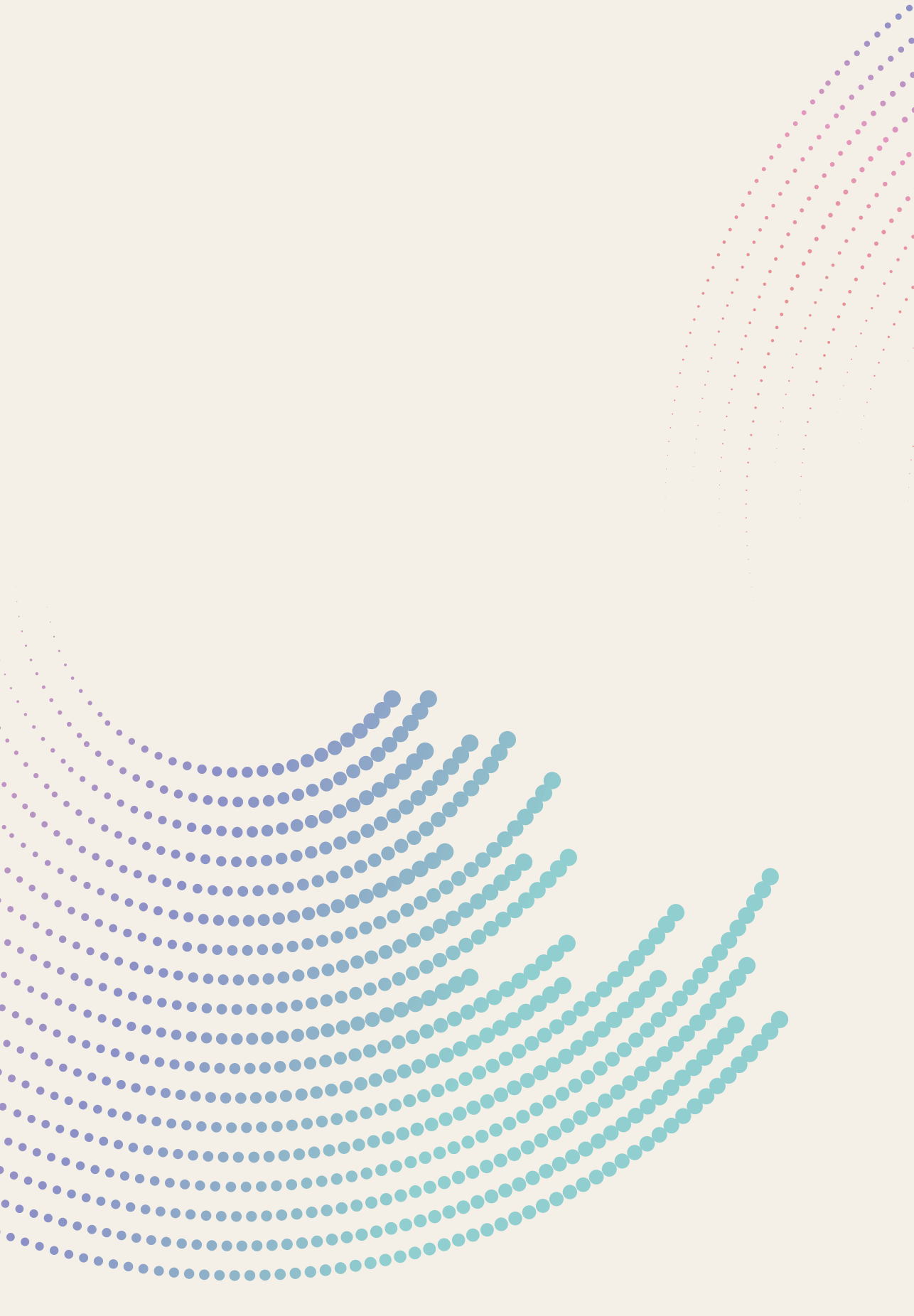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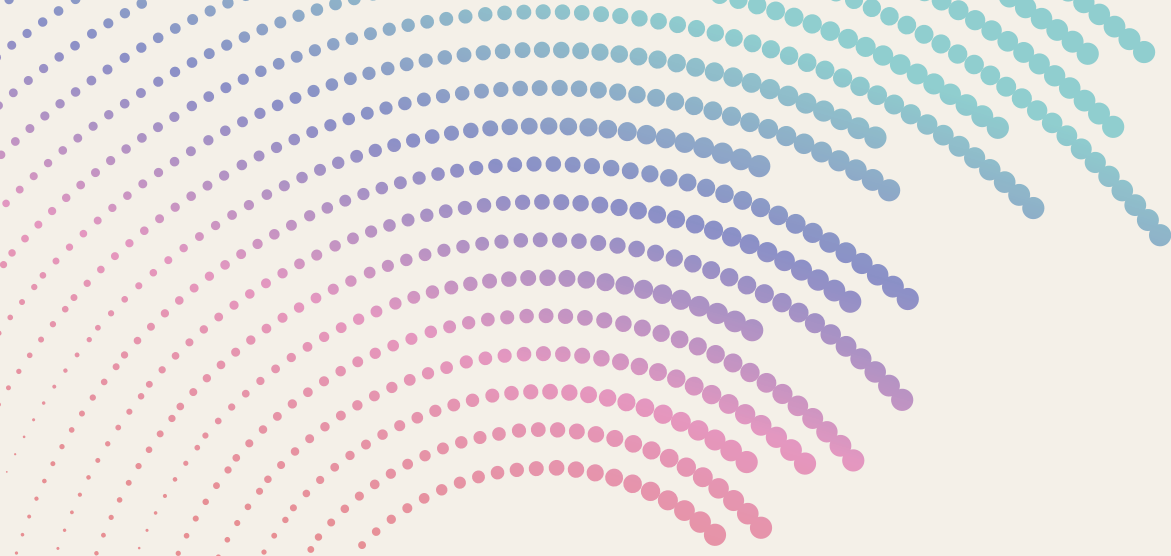
[그림 5-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¹⁵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전역에 설립될 경제개발구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경제특구법제와 비교할 때 20여년의 경험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선포된 이후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경제개발구 신설을 선포한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시장 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중단 위기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등이 겹쳐 경제개발구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종합 계획을 제시하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구상은 본격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VI

북한 사회

제1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제2절 주민생활

제3절 인권

제 1 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교’이다. 한 사회의 특징은 같거나 비슷한 시대,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세계에는 대비되는 두 종류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대다수 자본주의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사회이다.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베트남·쿠바·라오스와는 다른 모습도 갖고 있다.

1 북한 사회의 특징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정당, 집단이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전체 주민의 의지와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사회주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한다.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도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집권 정당으로서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사회와 다르게 북한 사회에서는 수령이 당·국가 안에서 군림하는 사실상 1인 지배체제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 북한 사회에서는 노동당 안의 여러 정치세력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6.25전쟁, 1950년대~1960년대 치열한 권력투쟁 등을 거치면서 점차 김일성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됐다.

이러한 권력의 1인 독점은 북한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알바니아의 호자,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불가리아의 지프코프처럼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1인 장기집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쿠바 사회에서도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가 수십년간 권력을 이어서 장악했었다. 하지만, 북한 사회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경우는 없다.

북한 사회에서는 ‘수령’을 정치적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수령이 당·국가·군대에서 공식적으로 차지하는 직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변화해왔다. 현재 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위는 노동당 총비서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운송수단, 산림, 지하자원, 원료 같은 중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생산력 발전을 추구한다. 이

에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중요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가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이 '시장기구'에 의해 배분되는 데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관할하는 '계획기구'를 통해 대부분 배분된다.

그리고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중앙 계획당국의 지도, 명령 지표, 국정가격 등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이러한 특성은 경제의 비효율성과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시장기구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중국·베트남 당국은 1980년대 이후 사영기업을 허용하며 사회주의 소유구조까지 개혁해나갔다.

이와 달리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구조가 정착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눈에 띄는 경제개혁 없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다. 북한 사회 경제구조는 1990년대 초·중반 탈냉전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 상실, 거듭된 자연재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누적, 노동자·농민의 생산의욕 저하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셋째,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이해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기구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집단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¹

북한 당국은 1950년대에 농업·상공업 부문에서 개인 소유를 없애나감으로써 개인주의가 성장할 토대를 약화시켰고, 1959년에는 집단주의적 사상 개조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주의 교양에 주력했으며, 1970년대에는 노동당과 근로단체(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²에서의 조직생활과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각종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 당국이 1960년대에 내놓은 구호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는 북한 사회 집단주의를 상징하는 구호이며,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 시 관람해서 화제가 됐던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2002년 초연돼 2013년까지 진행된 「아리랑」, 2018년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공연된 「빛나는 조국」 같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도 북한 당국이 북

1 북한 헌법에는 아래와 같은 ‘집단주의’ 관련 조문이 들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

2 북한 당국은 1996년에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꾼 뒤, 2016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2021년에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 조선민주여성동맹도 2016년에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 사회의 집단적 결속력을 과시하는 대표적 문화 상징이다.

한편,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개혁·개방 이후 집단주의적 대중운동이 자취를 감춘 데 비해, 북한 당국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이래 오늘날까지 대중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주의자로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90년대 후반 ‘제2의 천리마 대진군’, 2016년 시작된 ‘만리마속도 창조운동’ 등이 이러한 대중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2 북한 사회의 변화

1990년대 초·중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징인 수령체제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 중심의 경제구조, 집단주의 중심의 이데올로기 지형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시장기구가 계획기구의 보완재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과거 북한 사회에도 시장은 있었다. 1950년대 말에 계획적으로 생산·분배하는 경제구조가 갖춰지기는 했지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분배할 수는 없었다.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이 허용했던 시장이 바로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에서는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생산했거나 개인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일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팔았다. 단, 양곡과 공업 제품 거래는 금지했다. 국가는 농민들이 농민시장에서 거둔 수입으로 부족한 소비품을 구매하고,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국가가 채 보장해주지 못한 부식물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순기능 때문에 농민시장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국가의 식량배급이 끊기고, 국영상점 진열대가 점차 비어가자 주민들은 농민시장뿐 아니라 당국 관리를 벗어난 암시장으로까지 몰려가 부족한 양곡과 생필품을 구매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시장기구를 계획기구의 보완재로 수용했다. 2003년 3월에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종합시장에서는 농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고, 농민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됐던 양곡, 공업제품 등도 일부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상인은 시장관리소에 시장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월 소득액 신고 뒤 소득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 ‘국가납부금’도 국가에 내야 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는 2018년 2월에 공식시장 482개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통일연구원은 구글 어스 프로 Google Earth Pro의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2022년 11월 기준으로 북한 사회에서 공식시장 414개가 운영 중³이라고 밝혔다.

3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 공식시장 증가, 최소 482개,” 『연합뉴스』, 2018.2.4. 홍민, “공식시장의 규모와 분포 변화,”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2022.11.23.) 『2022 북한 공식시장 조사 결과 : 규모와 분포, 장세 현황, 입지 변화』 발표 자료

[표 6-1] 북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생산수단 소유	국가·협동적 소유 중심	➡	'사실상의 사유화' 진전
자원배분	계획기구 중심	➡	시장기구 역할 확대
의사결정	타율적 의사결정 중심	➡	의사결정 분권화

둘째, 이처럼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사회 소유구조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사실상의 사유화'다. '사실상의 사유화'란 '법률상의 사유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요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법·제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시장 활동에 적극 참여한 개인이 화폐를 매개로 국가·협동단체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북한 사회에서 사실상의 사유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주체는 '돈주'이다. 돈주는 북한 사회 시장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화폐를 축적한 신흥 부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북한 사회에서 돈주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돈, 자재, 비료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나누거나, 기관 명의를 빌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예 비공식적으로 사영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 당국은 아직 '법률상의 사유화'나 사적 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은 2014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개정해 “기업소는 정해

4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pp. 58-76.

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 유희 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 수 있다.”(제38조)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돈주의 국영기업 투자를 합법화했다.

이처럼 돈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북한 사회에서 양대 계급인 노동자, 농민에 더해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곧, 과거 중국·베트남 당국이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사영기업을 합법화했던 선례를 볼 때 북한 사회에서도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돈주의 국영기업 투자 합법화에 이은 사영기업 합법화, 사적 고용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주의가 성장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은 조직생활에 열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 부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은 개인 부업을 통해 만든 생산물을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와 다른 개인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김정일이 1990년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개인 리기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로,⁵ 1990년대 들어 개인이기주의 성장, 개인이기주의에 뿌리를 둔 ‘비#사회주의적 현상(국가재산 유용, 탐오낭비, 부정부패 행위 등)’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5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1990.6.2.)”, 『김정일 선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47.

특히, 1990년대 초·중반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 이동이 늘고 출근율은 낮아지면서 집단주의의 제도적 기반인 조직생활과 정치사상 교양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개인주의의 토대인 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면서 개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북한 사회 ‘기성세대’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심리,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염세적 감정, ‘개인의 삶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가치관 변화에 대한 혼돈감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바로 아래 세대, 곧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북한 사회의 ‘청년세대’는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아직 시장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교류하고, 외부문화에 민감하며, 개인적 소비 욕망을 드러내는 등 윗세대와는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⁶

중국 사회에서 경제 이행기(economic transition)에 시장개혁에 따른 민영기업 증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접촉 증대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청년들의 개인주의가 성장했다는 사실을⁷ 고려하면,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개인주의와 소비 욕

6 김성경,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pp. 169-193.

7 Eric Fish, “Chinese Youth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 Changing Behaviors and Values,” 『북한 장마당 새 세대 :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2015.6.23.) 자료집, pp. 87-90.

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요 등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청년세대 조직생활,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 등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 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청년운동 강화”를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 요구”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유포에 대한 대응과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였고,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는 등 청년 대상 사상교양에 매진하는 중이다.

제 2 절

주민생활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생각과 행위는 그 사회의 정치·경제구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며 필수적이다.

제1절에서 알아보았듯이 북한 사회의 경제구조는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현재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뚜렷해지고, ‘사실상의 사유화’도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집단주의가 지배적이었던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도 개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북한 사회의 주민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 주민생활을 크게 조직생활, 의식주, 여가와 명절, 보건·복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조직생활

다른 사회의 주민생활과 비교할 때 북한 주민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애 과정에 걸쳐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조직생활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당국의 사상과 지향을 주입하고 주민생활을 통제하며 노동력을 동원해왔다. 경제난과 시장화 진전,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조직생활 참여도가 과거와 같지는 않다. 그래도 북한 당국은 통치 안정, 집단주의 유지, 경제적 동원 등을 위해 여전히 조직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는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탁아소에서 생애 첫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공식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공식 조직생활은 소학교 2학년(7세) 소년단 입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년단 입단식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4월 15일), 소년단 창건 기념일(6월 6일) 등 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년단원의 징표는 빨간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이다.

소년단 생활은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고, 14세가 되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 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추가적으로 시(군·구역) 청년동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연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인데 비해, 노동당은 일정한 입당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세포를 구성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은 세포비서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세포는 노동당의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이다.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소속 당세포에 제출해야 하며, 당세포 총회에서 입당 문제를 심의해 결정을 채택한 뒤 시·군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식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후보당원 2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2년을 채우면 당세포 총회에서 정식 입당 문제를 심의·결정한다.

31세 이상 직업을 가진 노동자와 사무원은 조선직업총동맹 구성원으로서, 협동농장 농민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구성원으로서, 전업주부 여성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구성원으로서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주민은 주별·월별·분기별 및 연말에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는 주로 10~15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며, 조선노동당에서는 당세포, 근로단체에서는 초급단체 혹은 분조로 나누어져 실시한다.

2 의식주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은 비록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은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하고, 식량은 국가로부터 배급받으며, 국가가 지어서 배정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거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의식주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지금도 국영상점에서 의류와 생필품을 공급받거나 구매할 수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 주민은 시장을 이용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례 북한 이탈주민 조사에 따르면, 2011~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약 90% 정도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로 입을 옷을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백화점·외화상점에서의 의류 구입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도 의류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고가의 의류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2]).⁸

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45.

[표 6-2] 북한 주민의 시기별 의류 구입처

(단위: %)

구입처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응답자 542명)	2015-2017 (응답자 348명)	2018-2020 (응답자 226명)
시장 구입		93.0	91.4	87.6
국영상점(직매점 포함)		0.6	0.6	2.2
백화점(외화상점 포함)		1.1	1.7	8.9
국가공급		0.2	0.0	0.9
기타(해외직구 포함)		5.2	6.3	0.4
전체		100.0	100.0	100.0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47, <표 2-7>.

둘째, 북한 주민 중에서 식량 배급에 많이 의존했던 이들은 도시에 사는 노동자이다. 협동농장 농민은 국가를 거치지 않고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 당국은 배급 대상을 당·국가기관 종사자, 교사, 군인 등으로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매하도록 식량 공급 체계를 바꿨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15년에는 114만 7천 톤, 2018년에는 148만 6천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아직도 북한 사회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은 편이다.⁹ 김정은 총비서도 2021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농사를 “당과 국가가 최

⁹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p.58, Annex II.

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경작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은 도시 인근에 ‘소(燒)토지’를 일궈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고, 자가 소비 이후 남는 식량은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¹⁰ 소토지 경작은 아직 북한 사회에서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협동농장 농민들이 시장에서 파는 식량과 함께 주민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요소가 된 상황이다.

셋째, 국가가 지어서 배정해 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는 것이 과거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주거생활이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 밀천이 필요하거나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 식량 확보가 절실한 사람들은 국가 소유 주택을 비합법적으로 매매한다.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번 주민은 좀 더 생활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비합법적인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합법적 주택 매매는 ‘살림집리용허가증(입사증)’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¹¹ 또한 국

10 정은이, “북한 도시 노동자의 식량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pp. 265-280.

11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pp. 304-308.

[표 6-3] 북한 주민의 시기별 주택 마련 방법

(단위: %)

구입처 \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응답자 547명)	2015-2017 (응답자 351명)	2018-2020 (응답자 227명)
국가 배정	21.6	20.2	15.9
돈 주고 구입	55.4	50.7	65.6
직접 건축	7.1	12.3	4.8
상속 받음	13.7	14.5	11.0
친척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양도	2.2	2.3	1.8
기타	0.0	0.0	0.9
전체	100.0	100.0	100.0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50, <표 2-9>.

가기관이 돈주, 개인건설업자 등과 연합해 주택을 신축한 뒤, 결혼으로 자식을 분가시켜야 하는 경우처럼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¹²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주택 매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됐다고 증언한다.¹³

이 시기는 종합시장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와 일치한다. 2018~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65.6%에 달하고,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률은 15.9%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 수

¹²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pp. 40-45, 112-116.

¹³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 사회변동 2016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 55-56.

있듯이([표 6-3]), 이제 북한 주민에게 주택 마련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당시 북한 사회에서 한 세대 숫자는 ‘4인’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1동 다세대 연립주택이었다([표 6-4]). 그런데 유엔 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으로 2015년에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에 따르면, 단독주택 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 25.0%로, 2008년에 비해 단독·연립주택 비중은 줄고, 아파트 비중은 늘어났다. 북한 사회에서도 점차 아파트 주거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표 6-4] 북한 사회의 살림집 형태와 세대 식구 수(2008년)

세대식구 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합계
1명	32,283	47,675	18,350	858	99,166
2명	252,325	325,257	166,246	7,457	751,285
3명	383,514	532,520	248,767	10,466	1,175,267
4명	672,731	944,701	471,396	18,161	2,106,989
5명	416,459	493,876	234,994	10,410	1,155,739
6명	177,791	187,153	87,328	4,164	456,436
7명	40,851	37,973	21,460	1,005	101,289
8명 이상	12,461	15,280	13,168	391	41,300
합계	1,988,415	2,584,435	1,261,709	52,912	5,887,471

※ 출처: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중앙통계국, 2009), <표 46>.

북한 주민은 생산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비교적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및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로 단체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 활동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에 맞춰 국방체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체육활동을 꾸준히 독려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에 참가할 여력이 없었고, 당국 역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¹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11월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이후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유행했다. 2013년 5월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능라인민체육공원’, 10월에는 대형 워터파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클럽)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우리 태릉선수촌처럼 국제대회 메달의 산실이었던 ‘평양청춘거리체육촌’, 대표적 동계 스포츠 시설인 ‘백두산지구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7년에는 평양 보통강 근처에 종합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숙소 등을 갖춘 ‘평양시 체육촌’을 완공했다.

이러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움직임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종목은 ‘스키’이다. 아직 대다수 주민의 생활수준이 스키를 대중적으로 즐길 정도는 안 되지만 스키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인프라는 늘

¹⁴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5, pp. 153-155.

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했고, 2018년 1월에는 자강도에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이 주로 활용할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 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는 출장증명서와 여행증명서가 있다. 출장증명서는 공적 용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관혼상제 등 사적 용무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요 도시에 숙박하며 최신 정보를 취득해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지정 공식 명절도 북한 주민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모처럼 여가를 즐길 좋은 기회다. 북한의 명절은 사회주의적·국제적 성격의 명절, 전통 민속명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기념하는 대표적 명절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2월 8일, 광복절인 8월 15일,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헌법 제정일인 12월 27일 등이다. 북한 당국은 4월 15일과 2월 16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기념한다. 그리고 세계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 등도 기념하고 있다.

[표 6-5] 북한 사회의 공휴일

명칭 * () 안은 북한 당국 공식 명칭	날짜(2023년 기준)
양력설	1.1.
음력설(설명절)	1.22.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절)	2.8.
김정일 출생일(광명성절)	2.16.
세계 여성의 날(국제부녀절)	3.8.
청명절(민속명절)	4.5.
김일성 출생일(태양절)	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4.25.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1.
조선소년단 창립일	6.6.
정전협정 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7.27.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5.
김정일 선군정치 개시일(선군절)	8.25.
정권수립일(공화국 창건일)	9.9.
추석	9.29.
노동당 설립일(노동당 창건일)	10.10.
어머니날	11.16.
사회주의 헌법 제정일(사회주의헌법절)	12.27.

북한 당국은 설과 한가위 같은 민속명절들도 기념한다. 과거 북한 당국은 민속명절이 봉건 잔재라면서 양력설 하나만 인정했었다. 그러다 1972년 추석을 맞이해 성묘를 허용하는 등 민속명절을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1988년 추석 명절을 허용한 데 이어, 1989년에는 음력설과 한식을 부활하여 하루를 쉬도록 했다. 2003년에는 김정일이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쉬고, 정월대보름도 하루 휴



평양의 설 풍경

식하며, 단오와 추석을 예전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를 것을 지시했다. 단, 민속명절은 제도화된 휴일이라기보다는 당국 지정에 따른다. 곧, 민속명절에 쉬기 위해서는 북한 내각에서 그해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공식 발표 절차가 필요하다.

민속명절의 대표적 활동은 전통 민속놀이를 기반으로 한 ‘민족체육’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대표적 민족체육 종목은 씨름, 그네, 널뛰기, 태권도, 밧줄당기기 등이며 ‘전국 민족체육 경기대회’에서 각 종목별 개인전·단체전, 도별 대항전 등도 이루어진다.

4 보건·복지

북한 사회 보건생활의 제도적 특징은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다. 현행 북한 헌법은 국민의 무상치료권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북한 「인민보건법」은 모든 약의 무료 제공, 진단·실험검사·치료·수술·왕진·입원·식사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 무료, 근로자의

무료 요양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 국가의 질병 예방 활동을 강조하고, 예방치료 사업을 위한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는(제28조) 등 예방의학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며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거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무상 제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 부담이 여전히 크고,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경우 수고비 명목으로 의료진에게 약간의 현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¹⁵

다만, 예방의학 관련 제도 중에서 아동 대상 예방접종은 비교적 잘 기능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아동 예방접종률은 경제난이 한창이던 1997년 35% 수준에 불과했지만,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같은 국제기구의 지속적 지원 결과 2006년 이후 90%를 넘어섰다.¹⁶ 유니세프는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 예방접종률이 2020년 기준 97~99% 수준이라고 밝혔다.¹⁷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가 2022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북한 아동 예방접종률이 급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인한 국제기구의 대북의료지원사업 차질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⁸

¹⁵ 통일연구원 편, 『북한인권백서 2022』, 통일연구원, 2022, pp. 271-275.

¹⁶ UNICEF 평양소장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률 90% 이상,” 『노컷뉴스』, 2010.1.20.

¹⁷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21*, 2021, p. 200.

¹⁸ WHO, WHO Immunization Data portal, <http://immunization.who.int>.

복지의 기본인 사회보장 역시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다. 북한 「사회보장법」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국가가 특별히 돌봐주어야 할 대상 등을 사회보장 대상으로 정하고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가 일정한 근속연한을 채우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후 퇴직 시 연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재해의 경우 규정상 사회보장연금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지급되고 있다. 연로연금도 1990년대 경제난 이전까지는 많지는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급됐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¹⁹

특히 북한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할 때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북한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북한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로 ‘고령화 사회’ 기준(7.0%)을 넘어섰고, 2014년 유엔 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 공동 표본조사 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19 통일연구원 편, 『북한인권백서 2022』, 통일연구원, 2022, pp. 331-337.

[표 6-6] 북한 사회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구분	1993년	2008년	2014년
합계출산율	2.2	2.0	1.9
기대여명*	73.2	69.3	72.1

※ 출처: DPRK CBS and UN Population Fund, DPRK: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CBS, 2015, p. 100; DPRK CBS, DPRK: Population Projection (2014-2050), CBS, 2016, pp. 33-35.

10.2%로 2008년에 비해 1.2% 증가했다.²⁰ 합계출산율 하락,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라([표 6-6]) 북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추세이다. 북한 중앙통계국도 저위 출산율을 가정했을 때 2030~2035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총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45-2050년 사이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1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더불어, 경제난 이후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 지역공동체의 상호부조 등도 약화되고, 새롭게 형성된 시장경제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북한 노인들은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만약 현재와 같은 인구추세, 경제사정 등이 지속된다면 북한 노인의 삶은 갈수록 곤궁해질 가능성이 크다.

²⁰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20권 1호, 2017, pp. 25-26.

²¹ 홍제환·김석진·최지영·김수경,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통일연구원, 2020, pp. 258-259.

제 3 절

인권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류적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인권 문제를 일국의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곧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12월 유엔^{UN}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후 유엔 회원국들은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됐다. 북한 당국은 1981년 위 두 개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1991년부터는 유엔^{UN}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2013년 3월 설립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에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이하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세히 알려졌다.

※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결정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3대 목표는 ①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의 조사 및 기록화, ②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③ 책임 소재 파악이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설립 직후 1년여 동안 북한 인권 피해자 및 기타 증인들과 240차례가 넘는 비공식 면접, 서울·도쿄·런던·워싱턴 등에서의 공청회 등을 통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2014년 2월 7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구체적 조사 결과를 북한 정부에 제공하는 한편, 김정은 당시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주체라는 결론에 따라, 주요 조사 결과,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담은 서신을 2014년 1월 20일 김정은 제1비서에게 직접 발송했다. 이러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과거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적 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되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는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이동 및 거주 자유, 생명권 등을 포괄한다.

1)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하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노동당에 의해 통제된다. 국가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을 통제한다. 북한 주민의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도 처벌받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은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인터넷 접속 등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모든 대중매체 내용은 조선노동당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당하고, 주민들의 경우 외부 세계와의 통화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을 통해 외부 정보 접촉을 지속적으로 검열·차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영상물 시청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수령 숭배에 도전하고, 국가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필요에 의해 설립하여 통제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 및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금지돼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2) 차별

북한 당국은 주민에게 모든 분야에서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사회에는 성분 제도라고 하는 차별 시스템이 존재한다. 성분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사회 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며, 정치적 견해 및 종교도 고려 대상이 된다. 성분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에 만연한 남녀 차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록 국가에 의한 차별 개선 노력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과거 성분 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특히 대학), 식량 배급량 및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였다. 이러한 성분 제도에 따른 전통적 차별은 최근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으로 복잡하게 변화됐다. 기초 공공 서비스가 무너지고 돈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재산이 없고 유리한 성분도 아닌 주민 상당수는 점점 소외되고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에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북한에서 성차별은 여성에게만 뇌물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북한 사회 전역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고, 피해 여성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나 지원 서비스, 법적 구제를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정치 영역을 볼 때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5%, 중앙 정부 관료 중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차별은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여성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노출시키고 점점 성매매로 몰고 갔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적 봉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북한 여성들은 세계 다른 지역 여성들처럼 집단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끝으로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아직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정도의 차별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북한은 공식적 차별 제도를 운영해 개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3)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북한 주민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성분에 의한 차별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강제적 거주지 및 근로 장소 지정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당국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좀 더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주민들과 가족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이주된다. 북한 정부에 가장 충성하여 혜택받은 이

들만 거주하는 평양의 특별한 위치가 이러한 차별 제도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는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이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가족적 유대를 희생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이 탈북 중 붙잡히거나 강제로 북송되면 조직적으로 학대 및 고문을 가하고, 장기적이고 자의적으로 구금하며, 경우에 따라 신체 내부 수색 중 이루어지는 성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 국적자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된 북한 주민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일반 감옥에 구금되며,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되기도 한다.

4) 생명권 침해

탈북 과정에서의 총격, 구금시설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절도, 마약거래, 음란물 제작·유통 등 광범위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형 집행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을 동원해 처형 과정을 목격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개 처형은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이들은 정치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한다. 고문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는 특히 정치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진다. 또한 수감한 용의자들을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비인간적인 환경 아래 둠으로써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한다.

북한 주민 중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감금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갇히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 모두(조부모 및 3대를 포함)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런 사례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부인하지만, 전직 경비병, 수감자 및 수용소 인근 거주자 증언, 위성사진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반 감옥(교화소) 및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에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다.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경비병 및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자의적인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면도구나 여성용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외국인 납치

북한 당국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 대한민국, 일본 및 여타 국가 국민 수백 명이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북한으로 납치됐다. 북한은 납치 및 체포를 위해 군인 및 정보 요원을 동원했다. 납치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 및 기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됐다.

납치 피해자는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도 빼앗기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도 상실했다. 납치 피해자들은 삼엄한 감시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납치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았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을 포괄한다.

1) 식량권 침해

북한 당국은 식량을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성분 제도에 기초해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또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식량 배급이 이루어질 때 배급량이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역·직종·기업소 등에 따라 배급 주기, 배급량, 곡물혼합비율 등이 다른 경우도 있다.

북한 당국은 1995년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기 전부터 식량 상황 악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배급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정보 은폐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무너진 중앙배급체계의 대안을 찾을 수 없었고, 국제적 지원도 연기돼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동하거나 비공식 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걸 통제했다.

북한 당국은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조차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식량 구호를 방해했고,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군대의 사병들에게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북한의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 체계에서는 생산 및 배급

등 식량과 관련된 결정, 정부 예산 분배,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원조의 사용에 관련된 결정 등이 최종적으로 소수 관료 집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관료 집단에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 이처럼 북한에는 식량권을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

2) 건강·교육·사회보장권 침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균형한 접근성, 개인의 불법 의료행위 만연, 불충분한 예방의학 등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수술 부대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고, 공식 의료체계 내 의약품 부족으로 장마당을 통한 의약품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 간부 및 가족 전용 의료시설 설치, 병원 내 간부 전용 진료과 운영 등 성분·계층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

부족한 교육 시설과 장비, 교육 기회 차별, 학습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교육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무료교육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학교 시설 개선, 교보재 구입 등 학교 운영비용과 교원 보수 등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은퇴한 고령자, 질병·장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자, 산재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이 미비해 사회보장권도 침해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열악한 식량·의료·교육 상황은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²² 유엔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²³

3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으며, 2006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도 2008년부터 매년 3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오고 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회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08년 제63차 총회부터 2022년 제77차 총회 사이에 2019~2021년을 제외하고 12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편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오면서 동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에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다.

²² 통일연구원 편, 『북한인권백서 2022』, 통일연구원, 2022, pp. 348-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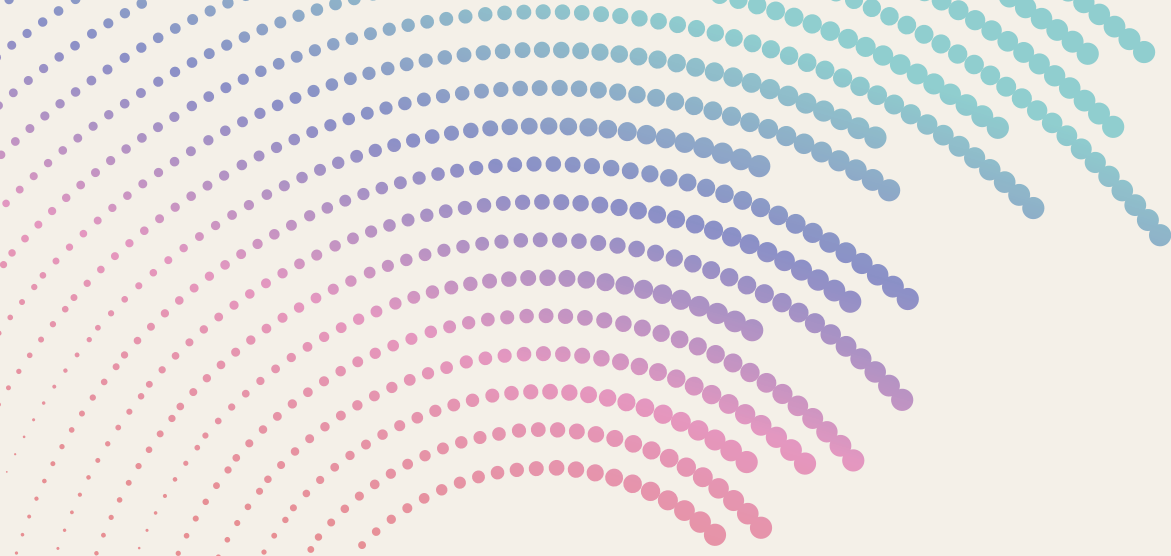
²³ "유엔 사무총장 "코로나19 통제로 북한 인권 탄압 심화", 『연합뉴스』, 2022.8.31.

[표 6-7]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구분	유엔 인권위원회/이사회		유엔 총회	
	채택 방식	입장	채택 방식	입장
2003	투표	불참	-	-
2004	투표	기권	-	-
2005	투표	기권	투표	기권
2006	-	-	투표	찬성
2007	-	-	투표	기권
2008	투표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09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0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1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2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3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4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5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6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7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8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9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20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21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22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북한 당국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중심으로 일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에는 「아동권리협약」, 2001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가입했다. 또한 2009년 4월 헌법 개

정 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는 조항을 추가하며 인권 관련 법제를 정비했고,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4년), 「장애인권리협약」(2016년)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추가로 비준했다. 2017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및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고, 2019년 1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북한 당국은 4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여, 2022년 현재까지 2009년, 2014년, 2019년 총 3차례 심사에 응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 사회의 권고가 내정간섭이라면서 국제사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VII

북한 문화·예술

제1절 문화·예술

제2절 언론출판

제1절

문화·예술

1 문화·예술 정책

북한은 문화·예술정책을 흔히 ‘문학예술 정책’이라고 칭한다. 이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문화예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화예술과 달리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당성·인민성·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사회주의·반사

회주의 문화에 대한 척결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류 등 자유민주주의 문화 유입을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1) 주체·선군 문예이론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KAPF¹를 계승하여 1950년대 이후까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예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예정책은 1960년대 중반 ‘모든 문예 창작을 항일혁명 문학을 중심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항일혁명 문예관의 핵심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북한의 유일사상이 문예정책에 반영되어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추진된 것이다.

1980년대 북한 문예정책은 다소의 변화를 보였는데 변화의 중심에는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이 있었다. 김정일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전과 차이점은 주요 인물이 항일혁명 영웅에서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농부 등 ‘보통 사람들’로 선회

¹ 카프는 1925년 결성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의 약자이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을 강조하자 문예정책에서 다시 수령형상화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환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김정일이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한 특별한 시기이다. 김정일은 〈무용예술론〉(1990년), 〈음악예술론〉(1991년), 〈주체문학론〉(1992년) 등을 출판했는데, 이로써 주체문예이론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 문예관이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한 일종의 실천 강령은 ‘종자론’과 ‘군중예술론’이다. 북한은 “작품의 핵을 이루는 것이 종자이며,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으로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없애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조류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북한은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을 추가하였다. 북한은 2000년 말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을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며,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선군혁명문학의 특징을 “반제혁명정

신의 구현, 조국애의 구현,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였다.²

2002년 12월 조선중앙방송이 ‘선군혁명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선군’은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선군미술, 선군영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핵심내용은 군인의 혁명정신 실천과 수령 결사 용위로 북한 주민의 단합을 통해 체제 안전을 이루려는 의도라 하겠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문예정책에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졌다. ‘실리추구’는 실리추구를 위한 개혁·개방에 문학예술이 복무하자는 것으로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에 나타난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족문화 정책’의 강조는 개혁·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선군문학예술’은 주제나 내용에서는 수령 찬양, 체제 유지, 혁명과 건설 등 기존 주제를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겠다.

2) 사회주의 문명강국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사회주의 문명국’,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2012년에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장한 이후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2017)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란 첫째, 전체 인민

2 “주체사실주의 문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되는 선군문학의 본성과 특징.” 『조선문학』, 2005년 1월호.

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둘째,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셋째,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다.³ 김정은은 동시에 ‘모란봉 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모범’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식,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⁴ 과학화 역시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문학예술이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형상할 것을 재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뿐 아니라 ‘김정은의 위대성’, ‘우리식 사회주의’, ‘만리마 정신’ 등을 주장하면서 ‘청년들의 헌신’, ‘자력자강’, ‘경제선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문화시설, 관광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3) 우리나라제일주의와 국가 상징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선전 교양 사업이 되고 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 공식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상징’ 교양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독려해내고 있다.

3 명광순,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19.

4 『노동신문』, 2014.5.17.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 국기, 국장, 국호, 수도 이외에 국견(풍산개), 국수(소나무), 국어(평양문화어), 국조(참매), 국주(평양주, 평양소주, 고려주), 국화(목란)가 김정은 시대에 국가상징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선언한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 상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기이며, 이를 토대로 창작된 〈우리의 국기〉 노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관련한 상징 교양 사업을 통해 세계 속의 보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토대로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자력갱생을 위한 내부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문화·예술의 실제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문학

1967년 이전 북한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 창작에 초점을 두었지만, 1967년 이후부터 주체 문학이 전면화 되면서 창작 방향을 바꾸었다. 그 방향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당의 행군로〉 등의 시와 〈무성한 해바라기〉 등의 장편소설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다룬 장편소설 총서 「불멸의 역사」가 발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김일성이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이 장편소설로 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생활 속 영웅, ‘숨은 영웅’의 발견이 중요 주제가 되었다. 〈숨은 영웅들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새로운 영웅관을 보여준 작품이다. 또한 〈청춘송가〉 등 충성 주제에 남녀의 애정을 엮은 작품도 창작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는 북한 문학계에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했던 시기였다.

1990년대 북한 문학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당성을 강조하고 김정일의 업적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0년 2월 김정일의 업적을 형상화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창작 선언이 있었고, 〈아침해〉(1989)를 시작으로 선군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총대〉(2003),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2000), 〈황진이〉(2002) 등이 출간되었다.

영화·텔레비전 드라마

1967년 이전 북한 영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인간형과 천리마 시대 영웅들의 재현에 초점을 두었지만, 1967년을 기점으로 항일혁명 문예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에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운동 시기에 만들었다는 3대 혁명영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는 ‘수령형상 영화’가 활발히 제작되었지만, 〈적후의 진달래〉(1970) 등 정

탐물 영화와 체제통합을 요구하는 가족 멜로드라마 〈우리집 문제〉 시리즈도 인기를 얻었다.

1980년대에 북한은 한편으로는 수령형상 영화 시리즈를 이어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어갔다. 수령형상 영화로는 〈조선의 별〉(1980~1987)과 〈민족의 태양〉(1987~1991) 등이, 숨은 영웅 형상화 영화들의 대표작에는 〈도라지꽃〉(1987) 등이 있다. 1980년대 북한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민족고전물의 창작이다. 〈림꺼정〉(1987) 등과 같은 전통 액션활극 〈춘향전〉과 같이 전통 민담이나 설화가 영화화되었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해체되자 영화계는 체제 유지를 위해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부각시킨 작품을 창작하였다. 1992년부터 제작된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시리즈가 대표작인데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2002년 100부작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선군영화가 보편화되면서 〈그는 대좌였다〉 등과 같이 모범군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 창작되었다.

2000년대에도 군 관련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는 다소 결이 다른 영화들도 제작되었다. 과학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을 중시하면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부 지배인〉(2001), 경제난 이후 북한 차세대의 고민을 다룬 〈한 여학생의 일기〉(2006) 등이 대표적이다. 〈한 여학생의 일기〉는 공식적인 유럽 배급 유통망을 통해 서구지역에서 일반 상영된 최초의 북한영화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이전 북한 영

화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무조건적인 혁명적 낙관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갖게 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등, 아버지로 상징하는 기성세대들의 삶에 대한 회의적 심리 묘사들이 사실적으로 등장하여 북한 사회 내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혁명적 낙관주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주로 지도자 가계의 업적과 지도자와 함께 투쟁에 참가한 인물들이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가정과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통해 수령관과 집단주의적 의식을 고취하는 <2학년생들>(2002)이 대표작이다. 또한 경제선동 역시 중요 주제이다. 대표작으로 8부작의 <수업은 계속된다>(2006)를 들 수 있다. 이외 부부 간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 등을 다룬 드라마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엄마를 깨우지 말아>(3부작)와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을 다룬 <가정>(9부작)은 이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북한은 198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평양에서 비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영화제의 정식 명칭은 ‘뽄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 영화축전’으로 줄여서 ‘평양영화축전’으로 불린다. 최우수작품상에는 ‘햇불금상’이 수여된다. 경쟁 부문(장편예술영화, 단편영화, 만화영화)과 비경쟁부문이 있으며 영화시장도 운영한다. 2006년부터는 영화제의 정식 명칭을 ‘뽄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 영화축전’에서 ‘평양국제영화축전’으로 변경하였다.

연극·가극

1960년대 이전 북한 연극계는 일본적 잔재에서의 해방, 민족문화 계승, 소련예술의 수용을 강령으로 삼다가 1960년대에는 천리마 운동과 관련된 것을 창작의 주제로 삼아 <붉은 선동원> 등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양상을 달리한다. 김정일의 지도하에 연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한 ‘성황당식’(<성황당>(1978)) 혁명연극이 개발되어⁵ 이후 전형이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도 성황당식을 수용한 <혈분만국회>(1984), <딸에게서 온 편지>(1987) 등이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1990년대까지 맥을 이어갔으며 북한에서 5대 혁명연극으로 불린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문예담론에서 선군이 등장하자 선군은 곧 창작의 원리가 되었다. 선군담론에 부응하는 대표작에는 <동지>(1999) 등이 있다. 2000년대 말에는 경제선동 주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대표작으로는 경희극 <산올림>(2010)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1950~1960년대 레퍼토리를 리메이크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는데, 대표작에는 국립연극단의 <네온등 밑의 초병>이 있다.

김일성 시기 가극은 초기에는 <춘향전>, <심청전> 등 창극 공연이 주를 이루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민요를 바탕으로 하는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새로운 현대적 양식의 민족가극”이 발전하게 된다. 대표작에는 사회주의 현실을 주제로 한 <강건너 마을에서 새 노

5 성황당식 연극의 특징은 ‘흐름식 입체 무대미술’과 ‘방창’이다. 흐름식 입체 무대미술은 무대 전환 시 암전 없이 무대가 움직임으로써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창이란 무대 밖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래 들려온다>(1960), 민족고전작품을 주제로 한 <금강산 팔선녀>(1969)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김정일의 지도로 ‘피바다식 가극’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모방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1972) 등이 제작되었다. 이후 ‘피바다식 가극’의 형식에 민족고전의 내용을 담은 ‘민족가극’이 창작되었으며 대표작에는 <춘향전>(1989)이 있다. 한편 1992년 김정일이 노력 영웅을 원형으로 하는 ‘우수한 혁명가극’을 창작하라고 지시하자, 북한 가극계는 혁명가극의 창작에 힘을 기울였다.

음악

1960년대 이전 음악에서는 전투적 기능과 교양적 역할,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이 중시되었지만 1960년대부터는 천리마 시대에 맞는 민족음악의 현대화와 혁명적 음악예술의 창작이 강조되었다. 또한 영화음악 분야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대표작에는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 <천리마대행진의 노래> 등이 있다.

1970년대는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로 개조하기 위한 전환의 시기였다. 특징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송가의 창작이 많아진 점이며, 만수대예술단의 주도로 해외 공연이 활성화된 점이다. 특히 혁명가극 <피바다>가 발표된 1971년은 북한 음악사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새로 개량한 민족악기를 주체로 하여 양악기들을 배합한 선율에서도 민족선율이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체사상이 전 분야에 적용된 시기로 민족음악은 전통 음악문화와 동일한 지평에서 복원되었다. 또한 김정일의 ‘전자음악을 북한식으로 발전’ 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전자악기와 민족음악의 요소를 결합하여 공연하는 ‘보천보전자악단’(1985), 북한 최초의 경음악단인 ‘왕재산경음악단’(1983) 등이 결성되었다.

1990년대 북한 음악의 중요 주제는 이상화, 사상교양, 군대 중시, 경제건설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또 하나의 특징은 생활가요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빠른 템포와 서구의 팝음악적 요소가 특징이며 대표곡으로는 〈휘파람〉, 〈반갑습니다〉 등이 있다.

2000년대는 김정일이 선군 음악정치, 노래정치, 음악정치를 표방하자 송가의 비중을 줄이고, 선군사상을 주제로 하는 곡들과 천리마 운동에 관한 노래를 제작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2003) 등이 있다. 북한은 기존 〈아리랑〉이 주로 비탄조였던 반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작곡된 〈강성부흥 아리랑〉(2001)은 부흥과 낙관의 정서로 민족감정을 고취시킨다고 자평한다. 악단의 창단도 꾸준히 이어져 2000년대 말에는 ‘은하수관현악단’(2009)과 ‘삼지연악단’(2009)이 창립되었다.

무용·교예·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북한의 무용계에서는 전쟁 이후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무용의 본산으로 기능하였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김정일의 지도 아래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키춤〉 등의 가극무용이 창작되었다. 또한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을 중요시했다. 또

한 1970년대 초부터 주체문예의 일환으로 무용 동작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1987년에 ‘무용 표기 기법’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에는 〈총동원가〉 등 ‘혁명무용’이 창작되었고, ‘무용소품’과 무용대작인 ‘무용조곡’, ‘무용극’도 제작되었다. 무용조곡은 ‘여러 개의 독자적인 무용종목을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묶은 형식’이다. 대표작에는 〈장군님 받들어 군민은 한마음〉(1995)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일의 “군중무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군중무용’이 적극적으로 창작되었다. 이외 ‘체조무용’, ‘수중무용’, ‘빙상무용’ 등 무용의 대중화와 체육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북한의 교예는 1952년 6월 창립된 평양교예단의 창립공연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평양교예단은 주무대인 평양교예극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이동식 천막극장 무대를 통해 지방순회 공연을 자주하고 있으며 외국 방문공연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빙상〉, 〈동물교예〉가 있다. 1980년대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중교예와 빙상교예를 창작하였으며 난이도가 높은 동작으로 세계교예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에서는 집단체조(매스게임)의 기원을 김일성이 직접 창조하였다는 1930년의 〈꽃 체조〉로 설명하지만, 본격적 시작은 1946년 5월 〈소년들의 연합체조〉라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 후반 ‘군중체육’의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체조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집단체조의 대중화가 진행되어 평양에서는 수만 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가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집단체조창작단」이 창립되면서 집단체조 부문이 양

적·질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시기 대표작은 연인원 7만 5,000명이 출연하는 <주체의 조선>(1978) 등이 있다. 1982년에는 집단체조를 공연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김일성 경기장(1982, 모란봉 경기장의 개명)이 건설되어 집단체조 공연이 더욱 대형화되었고, 같은 작품을 수십 회 공연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집단체조를 수만 명이 동원되는 화려한 공연예술 형식으로 연출하여 국가 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서 보여주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한동안 소규모 집단체조를 창작하였지만 2000년에 들어선 후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공연하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 부르는 초대형 공연이 시도되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체육의 일부이던 집단체조를 ‘예술공연’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김정일 시대 대표적 작품은 <아리랑>이다. 10만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가



아리랑 공연

장 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음악과 무용뿐 아니라 매스게임·카드섹션·체조·서커스 요소까지 포함한다.

미술

해방 직후 월북 미술가들은 북한 사회주의 미술의 내용과 형식 규정에 대한 논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통을 계급주의적 시선



다박술 초소



장자강의 불야성

으로 규정하는 테제가 발표된 후 1967년을 기점으로 논쟁은 종식되었다. ‘문인화’는 봉건 지배계급의 미술이므로 척결하고, ‘민화’를 민중들의 미술로 인식하여 계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채색화를 중심으로 조선화를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970년대는 ‘주체미술의 대전성기’로 수령형상과 사회주의 혁명투쟁 및 새 조국 건설 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창작되었다. 대표작에는 <강선의 저녁노을>(1973), <수령님, 이 밤도 어데 가시옵니까?>(1978) 등이 있다.

1990년대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기치 밑에서 그동안 척결의 대상이었던 사군자 등 문인화들이 복권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김정일 시대 본격화된 선군정치와 관련된 ‘선군미술’이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의 주제는 수령 결사옹위 정신, 군민일치, 혁명적 낙관주의, 총대사상 등이며 주목할 작품에는 조선인민군 창작사에서 제작한 <선군 8경>(2004)이 있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 선전과 선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전회를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선전화 창작 사업’은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당 정책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무수히 발표되고 있다.

체육

북한은 1945년 북조선체육동맹을 결성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체육과 스포츠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민족체육을 강조하였으며, 1950년대 중반부터 민속놀이를 통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켜 주체사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엘리트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195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국제스포츠 연맹에 가입하였다.⁶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구축한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 독재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방체육을 군중체육과 결합하였다. 군중체육은 곧 주체사상의 경제적 실현을 위해 천리마운동과 결합되었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제와 연결되었다. 또한 1967년을 기점으로 국방체육을 강화하여 사격, 산악 행군 등 군사훈련 성격의 체육 경기 종목을 신설하였다. 1970~80년대는 체제 우월성을 증명하는 선전의 도구로 체육이 적극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제난으로 체육기반이 약화되어 실질적 발전은

6 1956년 국제사격연맹 가입, 국제아마추어농구연맹 가입, 국제배구연맹 가입, 1957년 국제탁구연맹 가입,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 가입, 국제빙상연맹 가입, 1958년 국제체조연맹 가입, 국제축구연맹 가입, 국제아마추어레슬링연맹 가입, 1959년 국제역도연맹 가입.



북한 체육대회 응원단



북한 새해 첫 체육의 날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부응하고자 민속놀이와 체력 단련의 결합이 중요시되었다. 민족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북한 당국은 이 시기에도 국제대회에서의 우승을 중시하였다. 이에 1980년대 후반 여자축구를 집중 육성해서 1990년대 여자축구계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탁구에서는 남한과 함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우승(1991) 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문화재

북한은 해방 이후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민족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명분으로 안악 고구려 고분 조사 사업 등의 발굴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50년대 들어서는 고구려가 세운 안학궁터 복구 및 대성산 박물관 건설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기 위함이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위해 문화유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안학궁 남궁 제1호 궁전터에서 출토된 기와



안악 제3호분 서촉실 서벽 묘주와 신하 전경

전원회의 결의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혁명사적지와 전적지 조성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모든 문화·예술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 시기에 동명왕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발굴 작업도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유물보호법」(1994)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 문화유적 발굴사업과 복원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민족사의 정통성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유물·유적 발굴과 복원에 노력을 기했다. 그 결과 고구려 사찰 광법사(1990, 평양), 동명왕릉(1993, 평양), 단군릉(1994, 평양) 등이 개축·복원되었다. 북한은 1998년 7월 세계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고구려 고분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04.7.).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북한 주민을 애국심으로 단결 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건축

북한은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을 하면서 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러시아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 중심부인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강한 축을 형성하여 육중한 구조미와 대칭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층고(層高)를 높이고 열주형 기둥을 노출시킴으로써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대표작에는 평양역사(1954) 등이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건축물이 평양 곳곳에 만들어졌다. 1960년에 완공된 평양대극장이 대표적인데, 건축 방식은 전통적인 ‘조선식’ 지붕을 씌우는 것이다. 이외 1960년대 대표적인 조형물에는 6.25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인민군 열사탑’,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을 기념하는 ‘우의탑’,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1960년대가 사회주의 양식과 전통적 요소 간의 조화를 모색한 시기라면, 1970년대는 ‘우리식’을 강조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 체제가 확립되자, 북한은 체제 강화용 대기념비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전국에 대량으로 건설하여 사상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만수대 대기념비’는 1972년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기념 건축이다.⁷ 1980년대는 김정일의 주도로 평양에 기념비적 건축물이 가장 활발하게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7 만수대 대기념비 한 가운데는 김일성 동상이, 그 왼쪽에는 항일혁명 투쟁상, 오른쪽에는 사회주의 혁명 건설상이 세워졌다.

를 통해 세습이라는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김정일은 대형 건축물로 평양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주체사상탑⁸, 개선문⁹, 인민대학습당¹⁰ 등이 모두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북한의 대표적 건축물 ‘3대혁명전시관’, ‘당창건기념관(1990)’ 등이 건축되었지만, 1989년 완공이 목표였던 유경호텔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중지된 공사는 2000년대 들어 재개되었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맞춰 평양 10만 호 주택건설 사업도 착수되었다. 이 시기 건설된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축물로는 동평양대극장, 양각도축구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전쟁이 끝날 무렵 북한은 6.25전쟁 동안 폐허가 된 평양의 복구 사업을 본격화했다. 북한은 평양을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로 재편하

-
- 8 주체사상탑은 1982년 4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해 대동강 동쪽 기슭에 세워졌다. 높이 170m로 주체사상탑은 봉화, 탑신, 3인 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화는 높이 20m, 무게 46톤으로 알려졌다. 150m의 탑신의 앞뒷면에는 글자폭이 4.2m에 이르는 주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탑신 정면에는 높이 30m에 이르는 3인의 군상, 곧 노동자, 농민, 인테리가 각기 망치, 낫, 붓을 들고 당 마크를 형성하고 있다.
 - 9 개선문도 같은 시기 모란봉 기슭에 건립되었다. 높이는 60m이며 너비는 50.1m, 폭은 36.2m이다. 북한의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11m 더 높고 너비도 5m 더 넓다. 개선문 남쪽의 양쪽 기둥에는 ‘1925’와 ‘1945’라는 숫자를 금빛으로 새겨놓았는데, 이는 각각 김일성이 14세 때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만경대 고향집을 떠난 해와 조국의 해방을 이루고 개선한 해를 각각 뜻한다고 한다. 개선문의 중심 부문인 무지개문은 김일성 생일 70돌을 상징하는 70여 개의 진달래꽃으로 장식되었다.
 - 10 인민대학습당은 1982년에 건설되었으며 북한 최대의 종합도서관으로 연건평 10만㎡이며 높이 63m 10층 건물이다.

는 과정에서 소련 및 동구권 유학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고, 모스크바 건축 아카데미 출신의 김정희는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에 입각한 ‘평양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플랜은 다핵화를 통한 평등한 공간위계, 풍부한 녹지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농 간 격차 해소, 격자형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단위의 도시구조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상도시 평양건설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70~1980년대 들어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선회하자 북한의 도시계획 이념도 사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침체기를 맞이하며 모든 도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다. 지방도시 발전을 지연하며 평양에 ‘선택과 집중’을 꾀하면서, 도시 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이른바 ‘주체적 도시화’ 전략을 내세워 체제 선전을 위한 도시 건설 전략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평양은 혁명적 수령관을 반영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었다. 이 시기에 유독 평양에만 인민들의 군중집회, 열병식과 경축야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심부 상징광장과 기념비적 공공건물,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주요 간선 거리와 고층 주택 등이 크게 늘어났다.

북한의 도시계획은 구역보다 가로(街路: 시가지의 넓은 도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평양도심부의 정치적 및 사상적 상징성이 핵심 가로를 통해 멀리, 그리고 넓게 퍼지도록 하는 공간배치인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특별배려는 지속되어 1998년 ‘수도평양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만수대거리

법은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평양시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평양시 관리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2002년 김정일은 '21세기형 수도 건설'을 제안하였고, 평양의 특권적 지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평양의 가로가 개발되면서 함께 건설된 것은 바로 아파트이다. 북한 아파트는 평양에 밀집되어 있으며, 거대 경관을 조성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인공물로 활용되기도 한다. 김정일 시기 북한의 적극적인 평양 건설과 정비의 의도는 무엇보다 대외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평양을 치장함으로써 자주자립 강국으로서의 국가적 존엄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시계획의 핵심은 평양도시계획이며, 평양도시계획의 핵심 축은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1982년)을 연결하는 축선이다. 이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도시가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평양도시계획에서 또 하나의 중심 축선은 만수대언덕과 당창건기념탑(1990년)을 연결하는 축선이다. 만수대언덕에는 김일성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김정은시대 들어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새로 세워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2) 김정은 시기

문학

김정은 시기에는 선군문학의 잔영은 거의 사라지고 종래의 주체 문예,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복귀하였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추모문학이 주를 이루다가, 2013년부터는 <불의 약속> 등 김정은 후계 승계를 합리화하는 작품이 발표되었다. 김일성 일화를 추려서 묶은 <태양 총서에 비낀 일화의 세계>, 김정일의 업적을 서술한 <영화보급의 새 역사> 등이 출판되었다.

한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김정은의 치적 홍보를 위한 시, ‘만리마 시대’에 바람직한 인간들을 형상한 작품, 투쟁과 헌신에 앞장서는 청년을 주제로 하는 작품 등이 창작되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지침을 따라 ‘과학기술 중시사상’ 주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정시 <내 심장의 노래> 등이 발표되었다.¹¹ 채동규의 <향긋한 깨사탕맛>, <우리는 영원한 태양의 아들과 딸>과 같이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슬로건을 반영한 작품들도 제작되어 인민들을 교양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4.15문학창작단은, 김정은 위상화를 위한 총서 『불멸의 여정』 중 장편소설 「부흥」을 출간하였다. 김정은을 주제로 한 총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서의 첫 주제로

¹¹ 『노동신문』, 2018.9.17.

‘새 세기 교육혁명’을 선정하여, 국가부흥의 기반으로 ‘인재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영화·텔레비전 드라마

김정은 시대 대표작으로는 경제선동을 주제로 하는 〈벼꽃〉(2015)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희생을 다루는 〈우리집 이야기〉(2016)가 있다. 만화영화로는 〈고주몽〉이 18부까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이전 시기 보다 해외합작 영화제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작영화 중 가장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Comrade Kim Goes Flying)〉는 북한 최초로 영국·벨기에와 합작하여 제작한 영화로,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2012년 제작하였다. 2012년 평양국제영화제 최고 감독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2016년 이후 신작이 발표되지 않다가 2022년에야 비로소 영화 〈하루 낮 하루 밤〉이 발표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일 시기에 북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장르였던 영화 분야는, 김정



북한 TV 연속극 '기다리는 아버지'



북한 TV 연속극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은 시기에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로는 <임진년의 심마니들>(2018년) 등이 제작되었는데, 일본의 탐욕에 맞서 개성인삼을 지키는 조선 심마니들의 이야기이다. 이전 드라마보다 이야기 전개가 빠르다.

연극·가극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경희극과 같은 희극 공연이며, 작품의 흐름은 크게 과거 작품의 재창작과 경제건설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작품의 재창작으로는 1950년대에 초연된 반미사상 주제인 <승냥이>(2015)와 1960년대 초연된 애국주의 주제인 <리순신 장군>(2016)이 있다. 김일성 시대 초연된 작품의 재창작은 삼대 세습으로 정통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내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혁명연극의 재공연을 통해 혁명연극을 지도한 김정일을 기억해내고 이를 김정은과 연결시켜내는 기억의 문화정치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경제건설 주제의 작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고분 분투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인 <향기>(2015)는¹² 김정은의 수산사업소 방문과 북한 당국의 인민생활 향상 지침을 선전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가극의 대표적 신작으로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¹² 조선중앙TV에서 2015년 2월 17일에 방송한 경희극이다. 그러나 조선중앙연감은 이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16), 〈북부전역〉(2017)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신작을 발표하기보다 1970년대의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피바다〉 등을 재공연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이후에는 계속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식 문화’, ‘우리 식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주의 진지 수호’를 강조하는 정책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4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면서, 외부 사상,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지침은 특히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 집중되고 있다.¹³ 가극 〈영원한 승리자〉와 연극 〈멸사복무〉는 이러한 북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음악

김정은 시기의 대표 악단은 모란봉악단이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시범공연에서 〈아리랑〉을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하고 미국 영화 〈록키〉의 주제곡을 소개하는 등 이전과 차별되는 무대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정은은 “모든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수령결사옹위정신”(2013)을 본받고,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배워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라.”(2014)고 지시하였고, 이로써 모란봉악단은 최고의 위상으로 자리잡았으나, 2018년 모란봉전자악단으로

13 2021년 4월 29일 개최한 청년동맹 제10차대회를 평가하면서는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하였다.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 서한을 높이 받들고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노동신문』, 2021.5.3.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청봉악단은 여성가수와 남성 중심의 밴드로 구성되어 2015년 7월 창설되어 모란봉악단과 쌍벽을 이루며 활동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강릉아트센터와 서울국립극장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이 참여하여 공연을 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모란봉악단, 만수대예술단에서 선발하여 구성된 삼지연관현악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평양에 관현악단 전용공간으로 만들어진 삼지연극장도 개관하였다.

국무위원회연주단은 2020년 등장했는데, 국무위원회 소속 대형 연주단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및 가수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김옥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당 제8차 대회 등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상징사업의 일환으로 창작된 〈조국찬가〉(2013)와 〈우리의 국기〉(2019)는 애국 교양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불리우고 있다. 〈조국찬가〉에는 국가상징인 국조 참매, 국화 목란, 국기 등이 가사에 직접 언급되고 있다. 〈우리의 국기〉는 국기게양식을 비롯해 주요 행사에 사용되면서 국기를 상징하는 노래로 정착되었다. 또한 이전 시기 국민의례나 국가행사의 개막과 폐막곡으로 많이 부르던 〈김일성찬가〉와 〈김정일찬가〉를 대신하여 〈애국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교류음악회와 북한의 유명 작곡가를 기념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평양 장애인교류단이 영국에서 공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2017), 2018년에는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대회를 열었다. 2019년에는 북한의 대규모 친선 예술대표



모란봉악단 공연모습



국무위원회연주단 공연모습

단이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공연을 하였다. 참가한 예술대표단은 공
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악단 등 북한을 대표하는 최
고 예술단체들로 구성되었다. 북한 예술단의 중국 방문 공연은 북중
수교 60주년을 앞둔 2008년 이후 처음이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의 문화교류도 중단
되었었다.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 공연이 예정되었으나 공연 직전
취소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9년 방중 공연은 김정은 체제에서 이
루어진 최초의 정상급 문화공연으로, 문화외교를 통해 대중 관계 회
복을 대내외에 보여준 상징적인 공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용·교예·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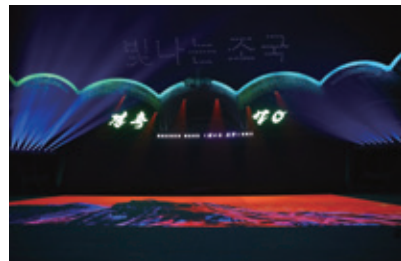
김정일 시기까지 중심이었던 혁명무용이 아닌 ‘륜춤’, ‘타프춤’,
‘그림자무용’ 등의 현대 무용이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로 등장했다.
김정은 시기 무용은 음악무용 종합공연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대
표작은 <영원한 승리의 7.27>, 1만 명 대공연의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등인데 이 작품들은 북한의 고유한 장단과 춤가락을 기본으로

무용, 음악, 극을 결합한 것이다. 무용조곡 〈황금의 내나라〉,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등을 공연하였으며 내용은 사회주의 체제 선전이 주를 이룬다.

평양교예단은 국립교예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예 〈춘향전〉(2012)을 공연했는데, 작품의 특징은 공중에서 줄타기, 물 위에서 줄타기 등 현란한 배우들의 움직임이다. 2018년에는 만리마정신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공연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참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제1차 국제교예예술축전에서 〈철봉과 그네날기〉로 금상을, 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쇠줄타기〉로 최고상을 수여하였다.

기념일이나 명절에 진행되는 공연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 규모도 커지고 화려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예술작품 창작은 크게 줄었다. 대부분 예전의 작품을 재공연하거나 편곡한 작품이 공연되고 있고, 신작 창작은 크게 줄었다.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에는 2013년 〈아리랑〉 공연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김정은 시대의 슬로건인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김정일시대 ‘아리랑’ 공연을 대신하여 국가를 표상하는 ‘빛나는 조국’이 공연되었다. 드론과 첨단 기술의 활용, 무대 바닥에 백두산 천지 영상을 비추는 일종의 미디어 아트 기법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체제선전을 생략하여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축하공연에서도 공연되었다.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로 이름을 바꾸어 공연하였으며, 6



〈빛나는 조국〉 공연

월 20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는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특별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에는 <위대한 향도>가 공연되었다.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 <불패의 사회주의> 등에서는 <아리랑> 공연이 민요 아리랑으로 시작되던 것과는 달리, 국기게양식으로 공연이 시작되는 변화를 보였다.

2015년 10월에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공연으로 열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에서는, 만수대예술단,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등의 주요 예술단체의 전문예술인 1만 명이 출연하였다. 그러나 제7차 당대회 이후로는 대형 공연은 줄었다. 공연 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영화, 음악, 연극 등 예술계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과학의 성과를 공연의 효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시도되었다. <빛나는 조국> 공연에서 드론을 사용하였고, 무대 바닥에 백두산 천지 영상을 비추는 일종의 미디어 아트 기법을 시도하였다. 주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열리는 행사도 야간에 진행하면서, 드론이나 불꽃, 레이저, 조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해 내고자 하였다.

미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두 종류의 김일성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정일과 함께 등장하는 김일성상은 노년상으로, 단독상일 경우는 젊은이의 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상들은 웃는 모습으로, 색조각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수령형상 창조이론’에서 강조하던 ‘숭엄함’을 대신하여 ‘생동하고 친

밀한 상'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2019년 제2차 전국 당초 급선전일꾼대회에서, '수령을 신비화시키는 것보다는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나오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선전선동의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한 김정은의 언급과 관련된다 고 판단된다. 선대 수령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에 부합하듯이, 백두혈통을 표상하고 있는 백두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유화 장르에서의 변화도 주목된다. 2013년에 발표된 김소영의 글에는 '유화를 유화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조점은 평범해 보이지만 북한 문화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북한 미술계에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조선화를 토대로 한 '우리식 유화'이기 때문이다. 조선화의 미학을 토대로 한 '우리식 유화'에서 거부되었던, 유화 물감의 색채를 덧쌓는 방법, 즉 마띠에르의 강조 또한 종이에 스며드는 조선화의 특징을 유화에 구현하고자 하였던 북한 미술가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테크닉이었다. 이러한 금기시되었던 기법들이 해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 작품 창작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요소가 '민족적 형식'에서 '인민의 감성'과 '세계화'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격적인 등장에 발맞추어 소나무 등 국가상징을 소재로 한 작품 제작 및 전시회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예술에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시도되었다. 미디어 아트의 본격적인 등장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공연 〈빛의 조화 2020〉은 건축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형식이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조명축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체육

김정은 시대에 체육 정책은 전문체육기술 발전, 체육종목기술 과학화 실현, 국제체육기구들과의 협조 강화, 대중체육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2012) 체육을 통해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육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양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 11개 종목에 5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종합 2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고, 동아시아컵(2013), 인천 아시안게임(2014), 브라질월드컵(2014) 등 메이저 국제 스포츠경기 대회에 참여하여 대외적으로 체제를 선전하고 대내적으로 체육과업의 성과를 홍보하였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타는 북한어린이



북한의 5월1일 경기장



2017 동계아시안게임 염대옥 김주식 선수



백두산국제피겨축전

체육시설물 건설에도 힘을 기울여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 성지’를 준공하고 마식령스키장, 능라인민체육공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평양체육관, 양각도체육촌 등을 건설하였다. 최근 북한은 스키를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좋아하는 체육종목의 하나였지만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 그 발전이 좌절된 경기”라고 설명하며 스키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양능라인민유원지에서 수영복을 입고 모래터 배구¹⁴비치발리볼을 즐기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통일거리운동센터 등의 헬스장에서 코어근육 운동을 즐기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체육정책 발전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체육은 대외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활용되고 있다. 평양 능라도 지구에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개교하여 외국인도 유학이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대성산 체육단에 속하는 염대옥·김주식 선수가 메라노컵 빙상피겨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¹⁴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에서

14 『노동신문』, 2017.2.12.

열린 제18차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이루어 여자 카누에서 금메달을, 여자농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박명원은 사격, 임은심이 역기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문화재

1994년 4월 채택했던 「문화유물보호법」을 폐지하고 2012년 8월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했다. 기존 「문화유물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물질 문화유산’¹⁵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민요 ‘아리랑’, 민족체육 ‘씨름’, 민속무용 ‘연백 농악무’, 민족음식 ‘평양 랭면’, ‘김치’, ‘막걸리’ 등을 국가 비물질 민족유산으로 등록하였다.¹⁶

2015년 「문화유산보호법」이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변경 채택되면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¹⁷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민족유산의 유형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구분을 의식해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민족유산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15년 사용된 비물질 문화유산 개념 분류 중 ‘전통예술’(2015년)

15 북한은 ‘비물질 문화유산’에 “한 민족이 역사발전 과정에 이룩하여 후세에 남긴 정신문화적 재부를 의미하며, 일정한 사회적 집단이나 단체, 개인들이 자기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풍습과 생활세태, 지식과 재능, 그와 연관된 수단과 도구들을 포함하여 인간의 정신문화 영역에서 창조되고 끊임없이 전달되어 오는 유산”으로 설명한다. 『노동신문』, 2018.10.21.

16 『노동신문』, 2014.1.19.

17 북한은 “자연유산”에 대해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 섬 같은 명승지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고 설명한다. 『민주조선』, 2015.5.9.

을 ‘전통예술과 의술’로, ‘전통수공예’(2015년)을 ‘전통수공예기술’로 변경하였다.

북한은 2019년 4월 「사회주의 헌법」 제41조를 개정하였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는 기존의 규정에서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중심으로 무형 문화유산 발굴과 등록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8년까지 108개에 이르는 종목을 ‘국가 비물질 유산’으로 등록하고 13개에 이르는 종목을 ‘지방 비물질 유산’으로 등록하였다.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과 방향은 문화유산의 범주가 확대된 점, 역사유물과 역사유적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점,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를 포괄적으로 민족유산의 범위로 규정한 점, 법제 정비 이후 유네스코 등재(세계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를 위한 민족유산 발굴에 적극적인 점 등이다.

건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평양의 건축 및 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평양역과 평양 순안공항, 원산갈마 국제공항의 현대화 사업이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슬로건 아래에서 유

희시설 건설을 중요시하여 평양만경대유회장, 능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을 건설하였다. 또한 김정은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재건”(2014.6.)하라는 지시에 따라 체육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체육 문화시설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지침에 부응하는 건축 사업 또한 활발해졌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2016), 대동강수산물식당(2018), 린산폐기공장(2018), 강원도 양묘장(2018),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 등이 지어졌으며, 대규모 애육원(고아원)이 평양을 비롯해서 남포, 강계, 평성, 사리원, 신의주, 해주 등 전국 각지에 세워졌다.

도시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내각 소속 ‘수도건설부’를 국방위원회 산하 ‘수도건설사령부’로 승격시켰고, 김정은은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고 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2012.4.27.).

이에 따라 2012~2013년 평양 현대화 작업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만수대 아파트 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를 들 수 있다. 여명거리는 2017년에 완공되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평양 은정구역에도 위성과 학자 주택지를 완공하였다. 또한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한 광복지구에는 연건평 1만 2,700여㎡의 상업중심을 세웠으며, 중국 자본과



대동강수산물식당



미래과학자거리

손잡고 동평양지구에 대규모 상업시설 건설도 추진 중이다. 김정은 시기 평양시 건설 부문에서는 주택공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5개년 계획으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통강주변에는 ‘다락식주택구’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양도시 거리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켜내면서 이를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기념비적 성과로 드러냄으로써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제 2 절

언론출판

북한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기능을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67조에서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 할 때만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¹⁸

북한 언론인의 중요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의 선전과 옹호이다.

¹⁸ “1만호 발간 기념사설,” 『노동신문』, 2001.12.1.

북한은 출판물을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 실천을 위해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로 설명한다.¹⁹ 북한 출판물의 중요 기능은 대중을 교양하고 당 정책에 따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1 신문·잡지

1) 신문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이다. 모든 신문은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 북한 신문의 종류에는 전국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지, 수도시민을 독자로 하는 수도신문, 특정 지방의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로 구분된다.

대표적 중앙지로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의 3대 신문이 있다. 수도신문으로는 평양시 당위원회 기관지인 『평양신문』이, 도별 노동당위원회가 발행하는 12개 정도의 지방지가 있다. 분야별로는 『체육신문』, 『교원신문』, 『철도신문』 등이

¹⁹ 『김일성 저작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6.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있으며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가 있다. 이 중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지방지 등은 일간지이다.

기관별로 발행하는 신문은 격일간이나 주간지로 발행되며 발행부수도 많지 않다. 신문 기사의 종류에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다루는 사실, 사상적·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논설, 김일성·김정일 교시나 공동사설을 쉽게 풀이한 해설, 정치문제의 의미를 다루는 정론,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장하는 논평, 단평, 정세 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 등 총 29가지

가 있다.²⁰ 김정은 시대 이후 『노동신문』을 비롯한 주요 신문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사상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이후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주요 기관지들의 전면 컬러화가 대표적이다.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노동신문사가 발행하는 북한의 대표 신문이다.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통합하여 현재의 『노동신문』으로 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론이나 사설 등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기본 의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노동당의 조직 강화와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지면의 편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행적, 정치·교양, 경제, 문화, 남한 정세, 국제 정세로 이루어진다. 총 6면 내외로 발행되는 조간 신문인데 특별한 사건을 다룰 때에는 총 9~10면까지 발행하기도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기사는 통상 1면에 실리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이름이나 교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글자보다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하게 표기한다. 『노동신문』은 철저한 검열을 거쳐 국가기관이나 당원에 한정하여 배포되며 그 권위

20 『광명 백과사전 7: 교육·언어·출판보도』, 백과사전출판사, 2011.

는 절대적이다.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이다. 『민주조선』은 1945년 10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 후 1947년 2월 다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기관지로 바뀌었다가 1948년 9월 현재의 위치로 고정되었다. 민주조선의 기능은 『노동신문』의 기본 임무와 비슷하지만 정부(내각) 기관지라는 특성상 편집에서 행정실무적인 문제를 많이 다룬다. 민주조선사에서 대형 판으로 주 6회 발행되며 정권에서 채택한 결정 사항이나 정령·법령 등을 상세하게 취급한다. 편집의 경우 『노동신문』과 같이 1면과 2면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정치지도 동향과 사진, 이들에게 보내온 외국의 축전이나 편지 내용, 우상화 선전 시·수필 등을 게재하고 있다.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증면된다. 『노동신문』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신문이다.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이름이 바뀌다 1996년 『청년전위』로 개칭되었다. 『청년전위』는 세대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시

대에 맞춰 청년층에 대한 사상적 단속을 엄두에 두고 만들어진 일간지이다.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며,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여 이의 완수를 위한 헌신을 권고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충성교육을 임무로 한다. 『청년전위』의 기사 내용은 『노동신문』에 실린 여러 문제를 청소년과 결부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2) 잡지

북한에서는 전문지와 학술지 모두가 잡지에 속하며, 주요 잡지는 『경제연구』, 『근로자』, 『천리마』, 『조선녀성』, 『조선문학』, 『조선예술』 등이 있다.

경제연구

『경제연구』는 경제학 부분의 이론잡지이다. 1956년 4월 10일 창간되어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격월간 잡지로 발행되고 있다. 1973년 4월부터는 사회과학종합이론잡지인 『사회과학』으로 합쳐져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가 1985년 12월부터는 『사회과학』이 부문별로 갈라지면서 다시 『경제연구』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다. 『경제연구』는 북한이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된 성과들을 경제 사상과 이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해설하며 선전하는 잡지이다. 국내외 경제학자들과 경제전문가, 대학교수, 경제관리자, 정치경제 및 사회과학분야의 대학생들을 독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

『근로자』는 조선노동당출판사 산하의 ‘근로자사’에서 월 30만 부씩 발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이론 기관지이다. 『근로자』라는 제호는 김일성이 지었다고 하며 1946년 10월 월간으로 창간되었다가 이후 월간과 반월간을 반복하다가 1966년 월간으로 정착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 근로단체 간부들과 사회과학 부문, 교육 부문, 양성기관 일꾼들을 기본 독자로 한다. 주요 임무는 당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당의 시책과 그 관철을 위한 방도 제시,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 공산주의 교양 등이다.

천리마

『천리마』는 북한이 발간하는 대표적인 ‘대중교양 종합잡지’이다. 북한에서 ‘종합잡지’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자료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편집하는 잡지를 칭한다. 각계각층 군중들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잡지로,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근로대중을 교양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자 제작되고 있다. 『천리마』에는 대중교양 종합잡지의 성격에 맞게, 당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위한 자료들과 국제 정세, 경제건설 소식, 역사, 지리, 과학, 산림, 보건위생, 가정 상식과 관련한 지식과 자료들, 연재소설, 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 문화 예술,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과 풍속 등 다방면의 글이 실린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청소년 등 광범한 범위의 대중들 전체를 독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1959년 1월 22일에(국립미술출

판사 발간) 창간되어, 현재는 문학예술출판사의 천리마사에서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조선여성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1946년 9월 6일에 창간되어(조선여성사 발간), 현재는 근로단체출판사에서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조선여성』은 “여성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투쟁에 이바지하도록 교양·육성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들의 계몽과 발전을 위한 지침서로 창간되었다. 대중정치 잡지의 성격에 맞게 여성 운동 발전과 여성 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방침들을 적극 해설·선전하는 글들과 사업 경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들의 긍정적 모범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이 방향으로 여성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선문학

『조선문학』은 1946년 ‘문화전선’으로 창간되어 1947년 『조선문학』으로, 1948년 『문학예술』로 발행되다가 1953년 『조선문학』으로 다시 발행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이다. 주체적인 문예이론과 사상을 널리 선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작품을 비롯해 고전문학 작품, 우수한 시, 소설과 문학평론, 논설 등을 싣는다. 주된 독자는 문학예술 전문가와 근로자들이며 월간 발행된다.

조선예술

『조선예술』은 1967년에 창간된 예술 부문 종합잡지로 월간 발행되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이다. 배포대상은 예술 부문의 전문가, 예술인들, 예술 소조원 및 일반대중이다. 초기에는 연극과 무용 부문의 예술잡지로 출발했지만 1968년 제4호부터 『조선미술』, 『조선영화』, 『조선음악』을 통합하였다. 예술 부문의 작품창작과 창조활동에서 거둔 성과, 경험, 우수한 예술작품을 소개하여 예술인들의 정치실무적인 능력과 예술기량을 높여주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¹



²¹ 『조선영화』는 1957년 창간된 영화예술 잡지로 영화예술인과 영화애호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1968년 제3호 이후 '조선예술'로 통합되었지만 1984년 다시 '조선영화'로 속간되었다. 최종적으로 1997년 다시 폐간되면서 '조선예술'로 통합되었다.

북한에서 방송은 내각 소속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밑에 운영되며, 신문과 같이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한다. 북한의 방송사업 체계는 방송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 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앙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존 총국, 문예총국이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텔레비존(조선중앙TV)’을 1999년부터 태국 통신 위성 ‘타이콤 5’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일부 지역 등에, 2015년부터는 ‘인텔샷’을 통해 미주 지역에 송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9일부터는 ‘조선중앙텔레비존’ 위성 방송을 디지털 고화질 HD로 전환하였다.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에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대외 방송이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조국개선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를 중계 방송함으로써 출발했다. 이후 1967년 제1중앙

방송(대내)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됐다가 1972년 제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으로 개칭되었다.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제2중앙방송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되었다. 뉴스는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의 보도, 사설, 논평, 논설기사 등을 인용·보도한다. 1989년부터 개설된 ‘평양FM 방송’은 대남 선전용 방송으로 북한의 혁명가곡과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등 클래식 음악을 방송한다. 또한 북한에는 ‘제3방송’으로 불리는 독특한 유선방송이 있다. 북한의 전 가구를 유선 방송망으로 연결하여 스피커를 통해 당국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텔레비전 방송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하여 ‘만수대텔레비죤’, ‘용남산텔레비죤’, ‘체육텔레비죤’ 등이 있다.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1963년 ‘평양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70년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74년 김일성 62회 생일을 계기로 컬러 방송을 시작했으며, 1999년 노동당 창당 54주년을 맞아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시작 시간은 평일(월~토)에는 오후 5시, 일요일과 명절에는 오전 9시였는데 2013년 8월부터 평일에는 오후 3시, 일요일과 명절에는 오전 9시로 변경되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발병 공개(2022.5.12) 이후 2022년 5월 16일부터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2023.1. 기준)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이며, 특징은 영화나 연극을 녹화하여 방송한다는 점이다. 최근 영화와 스포츠 방영이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를 집중 방송한 바 있다.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체육텔레비존'이 개국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방송은 체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텔레비전 방송은 전체적으로 선전·선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작품의 소재와 내용에서 남녀 문제, 주민생활, 사회 갈등을 다루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화질에도 주의를 기울여 2015년부터 기존의 표준화질SD 방송을 중단하고 고화질HD 방송으로 전환송출을 시작하였으며(4:3 화면 비율), 2017년 12월부터 '조선중앙텔레비존'을 고화질 풀화면(16:9 화면 비율)으로 송출하였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30여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VIII

북한 교육

제1절 교육정책과 제도

제2절 교육과정과 내용

제 1 절

교육정책과 제도

1 교육정책

1) 교육 목표

북한 교육의 이념적 지향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다. 북한은 초기에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처럼 소련식 사회주의를 북한에 이식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활용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문맹 타파를 비롯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김일성 시기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¹에 따라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육성을 목표로 했다. 김정일 시기에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북한 교육 체계의 기본 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이 집대성되어 있다.

는 2009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교육 목표였던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법(1999년), 보통교육법(2011년), 고등교육법(2011년) 등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김정은 시기 첫해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²(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를 발표했다. 이듬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2013년)이 완성된 후 단계별 시행을 거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시행’(2017년)을 공표했다. 또한 2013년에 「어린이보육교양법」, 2015년에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수정·보충하고, 「교원법」(2015년), 「교육강령집행법」(2016년), 「원격교육법」(2020년) 등을 새로 제정했다. 2019년에는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견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참다운 애국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교육 목표를 변경했다.³

「교육법」에 제시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를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 교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2012.9.25.)’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2. 지식경제시대 교육 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필요한 조건과 환경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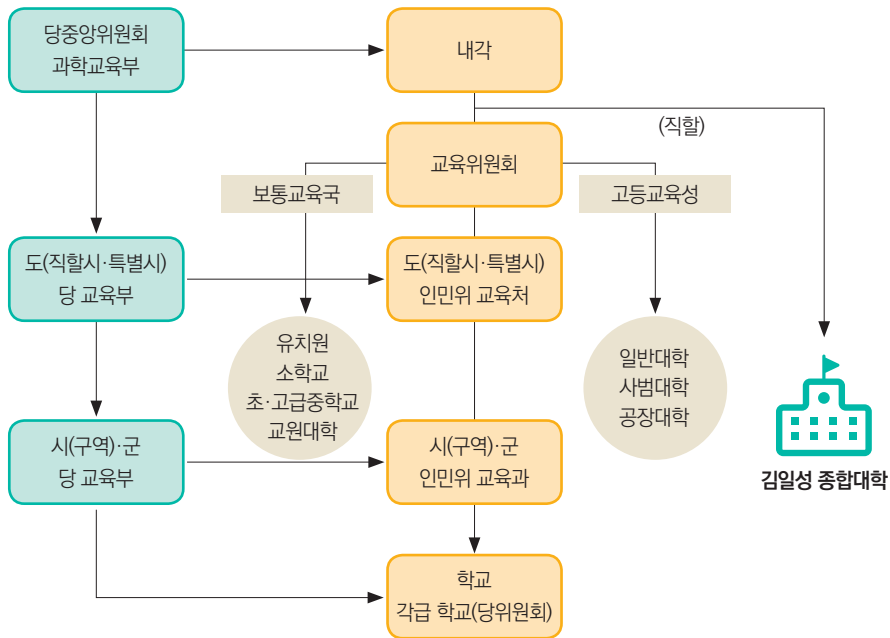
3 201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영어와 과학·기술교육, 교육정보화 추진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도 “중등 및 교육부문에서 현대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문화기관은 노동당 및 국가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북한 교육의 중요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교육 관련 부서인 과학교육부는 실제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세부 집행계획 지침을 작성해 교육행정 기구에 내려 보낸다. 중앙교육행정기구인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 보통교육국·고등교육성과 시·도 지방 교육행정 기구는 중앙당 과학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집행 기구이다. 북한의 각급 학교 역시 노동당에 소속된 학교 당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림 8-1]과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한다.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구체화하며, 학교는 당과 내각의 교육정책을 실시한다.



[그림 8-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내각의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육국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국에서는 유치원과 소학교·중학교 및 교원대학을, 고등교육성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 공장대학을 각각 관장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지침을 각 도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과로 송부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한다.

북한의 학교 행정조직 체계는 행정조직과 정치조직으로 구분된다. 행정조직은 교장과 부교장을 책임자로 하고 교무부와 경리부가 실제 행정을 담당한다. 반면 정치조직은 당 세포비서를 겸하고 있는

부교장을 중심으로 학교당위원회, 소년단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 등이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당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교원과 학생들의 조직생활과 사상교양 사업을 담당하는 부교장에 비해 행정과 재정 업무 중심의 학교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 교육제도

1) 북한 교육제도의 변천

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식 교육제도를 도입했고, 초기에는 전 인민의 문맹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6·25전쟁 후 북한은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전념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4년제 초등 의무교육(1956년), 인민학교 4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7년제 중등 의무교육(1958년)을 실시했다. 이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 기술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3년제 중학교에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한 5년제 중학교를 신설해 9년제 의무교육(1967년)을 실시했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이 1973년 4월부터 시행 되었다.

[표 8-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2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해 각 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 영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이후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개칭(2002년)되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소학교를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늘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화했다.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는 [표 8-1]과 같다.

2) 북한의 학제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학제는 소학교를 기존 4년에서 5년제로 변경하고,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학제는 다음의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연령 (만)	학년 구분	교종 구분	교육 구분			
26	4	박사원(2-4년) 대학	고등교육			
25	3					
24	2					
23	1					
22	6					
21	5					
20	4	*	중등교육			
19	3	고급중학교				
18	2					
17	1	초급중학교			보통교육 (12년제)	
16	3					
15	2					
14	1	소학교	초등교육			
13	3					
12	2					
11	1	유치원	취학전 교육			
10	5					
9	4					
8	3	유치원				
7	2					
6	1	유치원				
5	높은반					
4	낮은반	유치원				

[그림 8-2] 북한의 학제

* 현재 북한은 평양교원대학(3년제)에만 박사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방의 교원대학(3년제)에는 박사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

3) 북한의 보통교육

북한에서 학교교육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눈다. 보통교육은 기본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통교육은

학업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8-2] 북한 보통교육의 분류

구분	학교급
1	1년제 학교 전 교육을 위한 유치원
2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4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5	장애자 교육을 위한 맹·농아학교
6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혁명 학원, 외국어 학원, 예체능 학원)
7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고 2017년 전면 실시되면서 북한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북한 당국은 학제 개편의 배경으로 “지식경제 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을 들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의 기준 문서이다. 새 교육강령에 따라 집필된 새로운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종이의 질과 삽화 등이 개선되고, 교과서의 ‘과’별로 이해와 토론 및 탐구와 실천을 강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새로 바뀐 교복이 지급되고 학교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개건 보수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시기의 특징은 ‘보통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화 관련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2013년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우며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20.)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2019년에도 북한은 신년사 및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3.)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2019년 9월에는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개최하여,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함께 교원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교원을 증시하는 기풍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온 사회에 교육과 인재를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확립하자’라는 구호 하에 지역별 교육사업 평가순위를 발표하면서 지역 일군들과 교원들에게 온 나라에 ‘교육 경쟁 열풍’을 일으킬 것을 독려했다. 한편 2020년에는 사범 교육기관의 교원 진영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사범·교원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확보’ 및 ‘교육 내용 개선’을 평가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 시기 교육 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보통일반교육’ 체계에 더해,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기술고급중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중학교’에서는 중등 일반지식을 위주로 가르치는 데 비해, ‘기술고급중학교’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따른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한다.⁴ 북한 당국은 각 도에 11개의 ‘정보기술고

4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내오는 데 맞게 일반고급중학교들에서는 중등 일반지식을 위주로 교육하고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초 기술교육을 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교육신문』, 2014.10.2., p. 2.

급중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2017년부터 모든 시·군들에 '기술고급 중학교'를 1개씩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기술 교육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기준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금속, 전력, 석탄, 화학, 농산, 수산 등 10개 부문에 500여 개의 기술고급 중학교(기술반)를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200여 개의 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삼아 전 교육기관의 현대화·정보화 실현 등 교육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서 학원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교육 기관인 만경대 혁명학원 등 '혁명학원', 평양외국어학원 등 외국어학원을 비롯해,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태권도학원 등 예체능 학교가 있다. 또한 북한은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중등일반교육'과 별도로 '수재교육 체계'를 일찍이 수립해 운영해 왔다. 북한은

[표 8-3] 북한의 특수교육 기관

목적	학교명	비고
핵심인재 양성	혁명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설립 • 초, 중등교육과정 • 혁명가 자녀, 전사자 가족, 당정 고위간부 자녀
영재양성	제1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설립 • 6년제 중등교육과정 • 과학·수학·물리 등 이과 위주(과학자 양성 목적) 교육
	외국어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설립 • 6년제 중등교육과정, 영·중·일·러 등 8개 외국어 중점 교육 • 소학교 졸업자 중 외국어에 소질 있는 학생 선발
예체능 인재양성	음악학원, 체육학원, 태권도학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설립 • 6년제 중등교육과정 • 예체능에 소질 있는 특기자 대상 특수교육

이러한 수재교육에 대해 ‘우리식’의 ‘주체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능 있는 학생을 가급적 조기에 발굴해 수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수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재양성기지’나 ‘학원’ 등 특수교육 기관을 운영해 왔다. 1958년에는 중등학교 단계의 외국어 학원을 설치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음악·무용·체육학교 등 예체능 특수학교를 개설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분야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재 교육이 더욱 늘어났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김정은 시기에도 수재교육에 대한 강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학제 개편 배경을 밝힐 때에도 ‘수재교육 및 교육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수재양성 사업’이나 기초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학이나 물리 등 국제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이나 문학 분야에서의 조기 영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재능을 가진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경연’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4) 북한의 고등교육

북한의 고등교육은 194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설립

하면서 시작되었다. 6.25전쟁 후 3개년 복구 건설기(1954~1956년)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이후 중등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경제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⁵으로서 공장대학·야간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 등을 증설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 종합대학을 확대하는 방침을 취하여 신의주농업대학을 평북종합대학으로, 함흥컴퓨터·경공업·건설대학을 통합하여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지역별 종합대학을 신설하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 등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등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이후 북한은 기존의 종합대학 확대 정책을 변경하여 다시 학부 체제로 복귀시키거나 부속 대학을 분리하면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 교육총화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앙과 도급대학, 교원양성부문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대학 등 대학별 순위를 발표하고, 교육내용의 실용화·종합화·현대화 및 ‘학술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주요대학 산하에

5 북한의 고등교육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 구분된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는 공장, 농장 등에 부설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일반대학의 야간부 및 통신부, 방송통신대학이 있다. 대학 유형은 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첨단·핵심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할 연구원을 설립하고 학부과정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일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교육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책공업종합대학 산하에는 ‘미래과학기술원’을, 김일성종합대학 산하에는 ‘첨단기술개발원’을 신설했다. 또한 북한은 전문학교를 직업기술 대학으로 전환하고, 직업기술대학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천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 대학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인 김형직사범대학(5년제)을 제외한 사범대학은 4년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 등 다양하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대학 입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각 교육위원회가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하면, 시·군 인민위원회는 도에서 할당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19%⁶에서 26.8%⁷ 수준이다. 예비시험이나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에서는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

6 통계청 보도자료 2011,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html?fn=e14df6300214231055214&rs=/assist/synap/preview>.

7 UNESC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and Literacy, 2018.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성분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직통생’ 또는 ‘직발생’ 등으로 불린다. 경제난 이후에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에도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제 2 절

교육과정과 내용

1 교육과정

1) 소학교

초등 교육과정은 [표 8-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학교 재학 5년 동안 지도자의 어린 시절, 국어,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간은 국어·수학·체육·음악무용·도화공작·자연의 순으로 많으며, 학제 개편 이전보다 영어, 수학, 음악무용, 도화공작 등의 시수가 증가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2013)’에 따르면 소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과목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는 정치사상 교과 시간이 소폭 늘어났다.



소학교 학생들



소학교 교과서

[표 8-4]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 시절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6	수학	4	5	5	5	5
7	국어	7	7	7	7	7
8	자연	1주	1주	2	2	2
9	음악무용	2	2	2	2	2
10	체육	2	2	2	2	2
11	도화공작	2	2	2	2	2
12	영어				2	2
13	정보기술(컴퓨터)			1주	1주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소학교)' 내용 재구성

* 북한의 교육과정은 주당 교수시간과 집중교수(주 단위로 표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위의 표에서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함.

국어, 영어, 수학, 체육은 우리나라와 교과명이 동일하지만, 우리의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은 북한에서는 각각 자연, 정보기술, 음악

무용, 도화공작으로 부른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사회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고, 도덕은 ‘사회주의 도덕’으로 부르고 있다. 교과 비중은 우리에게 비해 국어, 수학 등의 기초과목과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보기술(컴퓨터) 교과는 1주 집중교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초급중학교

중등 교육과정은 기존 6년제였으나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식 경제 강국’을 이끌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기초과학, 컴퓨터 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⁸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23개 과목을 교육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교과목이 각각 16개와 22개로 분리 증대되었다. 초급중학교 과정은 주당 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 학습, 소년단 생활, 과외 체



초급중학교 교과서

⁸ 『교육신문』, 2014.5.8.

[표 8-5]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6	국어	5	5	5
7	영어	4	4	4
8	조선역사	1	1	2
9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6	6	6
11	자연과학	5	5	5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1주)	2(1주)	2(1주)
15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위의 표에서 체육 교과의 주당 교습 시간은 2시간이며 괄호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

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초급중학교 단계에서 정치사상교과와 수학, 과학, 영어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기초과목 비중이 높은 편이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 활동' 과목이 신설됐고, '자연과학'과 '음악무용' 등의 통합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개정 이전의 '제도, 실습' 등의 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이 통계,

‘그림 파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기술’ 과목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도입되었다. 소학교에서의 ‘자연’이 초급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으로 바뀌고, ‘도화공작’은 ‘미술’로 바뀌었다. 사회/도덕 계열 과목으로는 ‘사회주의 도덕’과 국내 중심의 내용을 다룬 ‘조선역사’, ‘조선지리’를 배우고 있다.

3)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4시간으로,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 학습과 청년동맹 생활과 과외 체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급중학교에서는 지도자의 ‘혁명 역사’, 국어문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등 총 22개 과목 교육이 편성돼 있다. 교과목별로는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교과와 영어 교과의 비중이 높다.

고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역사’ 과목이 신설됐고, 세분화된 분과형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초급중학교의 ‘자연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되었다. 반면 초급중학교에서의 ‘국어’는 ‘국어문학’으로, 초급중학교의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는 고급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로 바뀐다. 그리고 초급중학교의 음악무용과 미술을 합쳐 고급중학교에서는 ‘예술’ 교과를 배운다. 또한 초급중학교에서는 없던 ‘현행 당정책’, ‘심



고급중학교 교과서

[표 8-6]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3	2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역사		2	4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역사		1/2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1	1	1
5	당 정책	1주	1주	1주
6	사회주의 도덕과 법	1	1	1
7	심리와 논리			1주
8	국어문학	3	2	3
9	한문	1	1	1
10	영어	3	3	3
11	역사	1	1	2
12	지리	1	1	1
13	수학	5	5/4	4
14	물리	5	4	2
15	화학	3	4	2
16	생물	3	3	3
17	정보기술	2	1	1
18	기초기술	2주	3주	3주
19	공업(농업)기초			4
20	군사 활동 초보		1주	1주
21	체육	1	1	1
22	예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2학년의 '김정숙 혁명력사' 과목과 '수학' 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

리와 논리', '한문', '공업(농업)기초', '군사 활동 초보'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북한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경우 영어만 배우며, 제2외

국어 과목은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주의 도덕과 법’, ‘역사’, ‘지리’, ‘심리와 논리’는 필수 교과로서 별도의 선택 교과군은 없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공업(농업) 기초’ 교과가 있다.

북한의 고급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졸업 후 직업을 갖기 위한 교과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교과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의 ‘군사활동 초보’ 과목은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이 장기적인 군 생활을 하는 데 대한 준비 과목의 역할을 한다. 북한의 교육강령에는 교과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1주, 나무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4) 대학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양한데,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 과정은 전공과목과 전대학에 규정된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기초 과정은 전공에 필요한 준비 과목으로 구성되며, 전공 과정은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최근 북한은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 강좌, 정보공학과를 설치하여 IT 중심 학부로

대학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 및 교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와 교과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안을 개편하고 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공학부를 ‘지능정보공학부’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교육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김정은 시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제와 내용,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와 ‘기술전습체제’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도서관, 자연박물관, 과학전시관의 현대화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⁹

또한 공장 근로자들이 사이버대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장대학’에 ‘과학기술 보급실’을 확대하고, 2015년 10월에는 ‘과학기술 전당’을 설립하는 등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과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과학기술, 경영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북한 국제화와 경제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북 합작으로 2010년 10월에 설립된 이공계 특수대학이다. 평양과학기술

9 『노동신문』, 2014.10.20.

대학에서는 전기공학(컴퓨터·통신·산업자동화), 농·생명공학, 국제 금융·경영학 등의 전공이 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재학·졸업생 1,100여 명 중 40명 정도의 우수 학생을 유럽·남미·중국 등에 유학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11년부터 격년(2017년 취소)으로 미국, 호주, 독일 등 유명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2 교육내용

1) 교과 교육

북한의 교과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이 중시돼 왔다. 김정은 시기 교육제도 개편 이후에는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이 중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사상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으로서,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수령)와 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간형을 지향하고 있다.¹⁰ 북한 학생들은 교과목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10 북한의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명시된 교육 목표는 "백두산 절세위인(김일성과 김정일) 등의 사상이론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인간적인 매혹에 기초하여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이다.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당과 수령을 향한 충실성 등 정치사상 교양을 실시한다. 북한은 교과 교육을 통해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시절’, ‘혁명활동’, ‘혁명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실리주의 교육을 표방해 왔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도 이어져 기존에는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것에서 2008년 이후에는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영어는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모든 학생이 배우며, 교육 방법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교과로 편성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¹¹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인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은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정보화 시대’, ‘지식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다매체교육, 정보화교육, 원격교육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11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과외 교육 기관이다. 소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위해 건설된 일종의 학생회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을 ‘학생소년궁전’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2,000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해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의 소조실과 활동실 200여 개가 갖춰져 있다. 여기에 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 전시장 등이 있다. 특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함께 평양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특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도 증가하여, 어린이 교육지원 프로그램 「신비경」, 「해바라기들」, 소학교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속셈의 별」, 「반짝별」, 중학교 영어학습 지원프로그램 「영어의 별」에 이어, 증강현실 지원프로그램 「신비한 별」, 실시간 영상합성 프로그램 「자랑별」 등도 개발하여 보통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교수강습소 및 원격교육을 통해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전자화된 교수안을 제작·활용하면서, 교수 경연, 교수방법 토론회, 교육자료(교수안·교안자료·교편물 등) 전시회, 자격증 취득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교과 외 교육

북한의 교과 외 교육은 ‘과외활동’으로 불리며, 정규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실시된다. 소학교에서는 5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900시간의 과외학습, 432시간의 소년단 생활, 513시간의 과외체육이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3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540시간의 과외학습, 432시간의 소년단 생활, 306시간의 과외체육이 있다. 고급중학교에서는 3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465시간의 과외학습, 372시간의 청년동맹 생활, 243시간의 과외체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외학습

북한의 학생과 교원들은 학교에 온 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

동신문 사설이나 논설 등을 읽는 독보활동을 한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담임 교원들을 통해 ‘아침 학습’이나 ‘수업 전 학습’, ‘365 일 교양’ 등의 형태로 사상교양을 실시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총화’를 실시하고, 이후 과외 학습 시간이 이어진다.¹²

과외 학습시간에는 보통 자율학습을 하거나 담임교원을 통한 과외복습 또는 과외예습이 1~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일부 학교에서는 과외학습 시간에 담임교원이 아니라 전공 교원을 통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담임 교원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교양이나 ‘좋은 일하기 운동’ 등을 지도하기도 한다. 과외 학습시간에는 학과 공부 이외에도 ‘위대성 교양’이나 ‘회고록 학습’ 등 정치사상 교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야외 학습터’ 등에서도 실시된다.

소조활동

북한에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후대에 대한 교육 사업은 학교뿐 아니라 전 사회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학교 이외에도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도서관, 소년단야영소 등 ‘과외 교양기지’들을 거점으로 해서 ‘소조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과외활동을

¹² 김정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게 하려면 과외 학습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육신문』, 2013.11.14.

할 것을 강조한다.

소조활동은 일반적으로 매일 방과 후 2~3시간 동안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조를 만들어 분야별로 교원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소조의 종류는 교과, 음악, 미술, 체육 등 매우 다양한데, 학급의 교과 우등생이나 조직생활 모범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과목 소조’¹³ 또는 ‘교과목 학습 소조’, ‘문학 소조’, 노래나 합창 등 ‘성악 소조’, ‘취주악 소조’, ‘미술 소조’뿐 아니라,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정구 등의 구기종목과 태권도, 씨름, 수영, 체조 등 다양한 ‘체육소조’가 있다.

생산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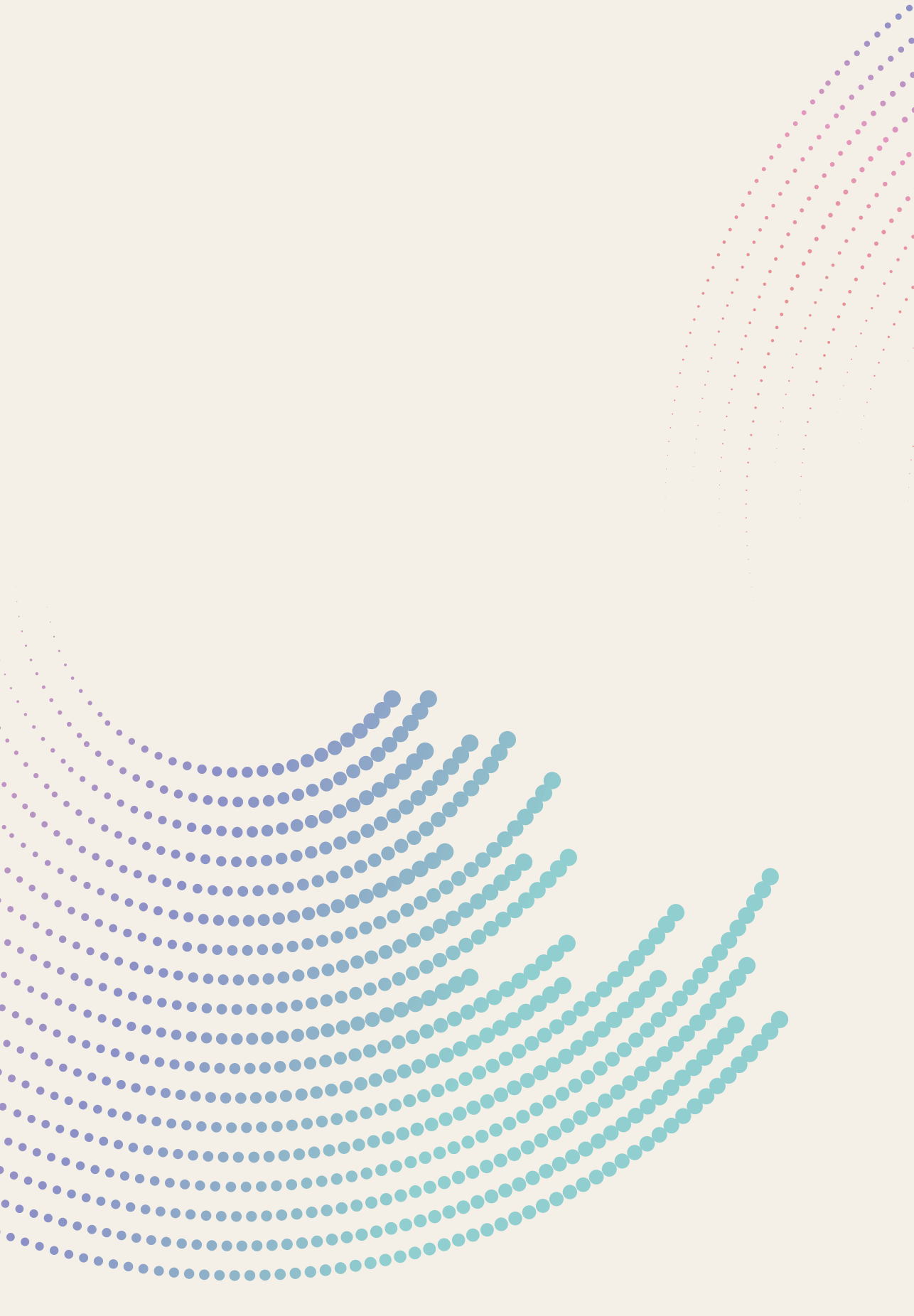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법」에서도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을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과외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보내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생산 노동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모내기, 김매기 등 다양한 생산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지고

¹³ “다과목 소조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 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 『교육신문』, 2013.7.11.

동원되는 부문도 다양해진다. 북한은 특히 ‘나무심기’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나무심기 활동을 교육강령 내에 명시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1주 가운데 봄에 4일간은 나무심기를 하고 가을에 3일간은 나무열매따기를 진행하며, 고급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나무심기 1주와 생산노동 3주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과외 활동은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대해 기여할 것을 중시한다. 또한 개인의 흥미나 관심, 자율성보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 활동, 사상·교양학습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찾아보기 및 참고문헌

찾아보기

ㄱ

감량배급 200
강성국가 32, 41, 99, 161, 193
개성공업지구 219, 222
개성공업지구법 219
경제개발구 222, 223
경제개발구법 222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58, 75
경제발전 5개년 전략 184, 194, 202
경제특구 218, 220, 221
계획경제 18, 180, 182, 209, 211,
214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18
고급중학교 321, 324, 332, 334,
336, 339, 343
고난의 행군 40, 188, 192, 195
고등교육성 318, 319
교도대 107, 114
교육법 317, 342
교육위원회 318, 319
구상무역 199

9.19 공동성명 121, 143, 166
국가체육지도위원회 297
국무위원회 48, 70, 71, 72, 103,
106
국무위원회연주단 292
국방성 69, 97, 105
국방위원회 31, 34, 48, 74
군정지도부 70, 104
금강산관광지구 219
금강산관광지구법 219
김일성-김정일주의 15, 35, 43, 44,
45, 50, 85, 318
김정일 애국주의 44, 45

ㄴ

나진·선봉 경제특구 219
내각사무국 80
내각정치국 80
노동적위군 107, 114,
노동당 49, 50, 51, 52, 57, 64, 66,
67, 68, 70, 71, 73, 81, 138, 139,
142, 146, 306, 308, 309
노동당 규약 42, 44, 49, 66, 67, 69
노동당 총비서 33, 48, 57, 64

ㄷ

당-국가체제 46, 70, 86, 103
 당대표자회 32, 54, 57, 58, 83, 84
 당대회 52, 54, 55
 당 정치국 47, 59, 61, 62
 당중앙검사위원회 86, 87
 당중앙군사위원회 32, 47, 57, 58,
 65, 66, 82, 86, 102, 123
 당중앙위원회 24, 31, 47, 52, 55,
 57, 58, 59, 63, 67, 69, 70, 84,
 86, 123, 124, 145, 183, 184,
 218, 282, 309, 318, 320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47, 58, 59,
 60, 61, 67, 84, 183
 대안의 사업체계 20, 30
 돈주 198, 210, 214, 215, 216,
 232

ㄹ

마르크스-레닌주의 15, 30, 31, 34,
 46, 51
 만경대학생소년궁전 339
 만경대혁명학원 325

ㅁ

반동사상문화배격법 76, 235, 267
 방사포 98, 126
 백두산 3대 장군 339
 베를린 합의 142
 버랑골 전술 143
 보통교육 322, 323
 보통교육법 317, 322
 보통교육국 318
 북극성-2형 98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165, 167
 북러 공동선언 166
 북러 모스크바 선언 166
 북러 정상회담 145, 168
 북미 정상회담 145, 146, 152, 158
 북중무역 208
 북일 정상회담 156
 북중 정상회담 145, 161, 163
 북한이탈주민 22, 198, 215, 239,
 242, 249, 250
 북한인권 252, 264
 북한인권결의 262
 북한 체제 11, 12, 13, 14, 15, 20,
 22, 23, 25, 28
 분조관리제 19, 217
 붉은청년근위대 107, 114

비동맹 외교 137, 138

비물질 문화유산 299

비서국 55, 57, 58, 64, 84



4.6 담화 43

4대 경제특구 219

4대 군사노선 64, 65, 93, 94, 97

사이버 전력 128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37, 51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24, 21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16

사회주의 대가정 20, 2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70, 235,

237, 304, 307

사회주의 우호무역 203

사회주의 소유제도 180, 181, 182

사회주의 체제 14, 20, 29

사회주의 헌법 30, 42 74, 75, 77,

180, 181, 300, 303, 317, 342

살림집리용허가증(입사증) 181, 241

생활총화 21, 238

선군사상 15, 35, 41, 42, 44, 91,

277

선군정치 32, 34, 39, 40, 41, 51,

69, 90, 91, 244, 280

선군혁명문학 268

선전선동부 31, 304

소년단 237, 238, 332, 340

소련파 29, 138

소조활동 341, 342

송가 276, 277

수령론 31, 34, 37, 51

수령형상 266, 268, 273, 280

스커드 미사일(SCUD) 96

시장화 현상 19, 181, 182, 209,

211, 213, 215, 216

신의주특별행정구 219

실리외교 133, 140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76

연안파 29, 138

5개년 계획 24, 56, 76, 123, 124,

184, 185, 197, 202, 302

5개년 전략 59, 184, 194, 202

왕재산경음악단 277, 295

우리국가제일주의 45, 270, 271,

292, 294, 296

우리식경제관리방법 19, 217

- 우리식 사회주의 23, 34, 37
 - 유럽연합 143, 144, 148, 170, 171, 172
 - 유엔 인권위원회 262
 - 유일사상체계 85, 266, 309
 - 유일영도체계 44
 - 유훈통치 32, 83, 141
 - 6.25전쟁 29, 91, 103, 136, 227, 284, 285, 327
 - 6자회담 96, 121, 150, 152, 161
 - 2.29 합의 150
 - 인민대중제일주의 25, 45, 51, 57, 87
 - 인민무력부 69
 - 인민위원회 28, 307, 319
 - 인민학교 320, 321
 - 1인 독재체제 30, 39
 - 입사증 241
- ㉨**
- 자력갱생 24, 45, 59, 185, 194, 203, 271
 - 자력부강 24
 - 자아비판 21, 303
 - 자주외교 139
 - 자주포 95
 - 장거리미사일 발사 120, 173, 207
 - 장마당 18, 199, 209, 261
 - 재판소 79, 81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317, 321, 323, 326, 338
 - 전방위 외교 141, 143
 - 전위대 51, 71
 - 전체주의 15, 21
 - 정면돌파 24, 146, 185, 194
 - 정무국 58, 63, 64
 - 정무원 77
 - 정상국가화 70
 - 정전협정 93, 137
 - 정치국 상무위원 60, 63
 - 정치국 상무위원회 58, 60, 61, 63
 - 정치범 수용소 257, 258
 - 정치사상교육 332
 - 제1중학교 321
 - 제네바 합의 142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71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71, 75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71, 238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71
 - 조선인민군 창건일 246
 - 조선중앙방송 269, 312, 313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312

조선중앙텔레비죤 312, 313
 조선직업총동맹 71, 135, 238
 조선천도교청우당 70
 조직지도부 31, 52, 69, 84, 86, 104
 종파사건 29
 종합시장 17, 19, 181, 211, 213,
 214, 231, 242
 주체농법 200
 주체문예이론 268
 주체사상 13, 15, 30, 31, 34, 35,
 36, 37, 38, 39, 41, 42, 43, 44,
 45, 50, 51, 277, 281, 283, 285,
 286, 287, 308, 310, 316, 320
 주탄종유 194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183
 중·소 국경 분쟁 138
 중앙검찰소 74, 79, 172
 중앙인민위원회 30, 32, 77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9
 중앙재판소 75, 79, 81
 지방 인민재판소 79
 직통생 329
 집단주의 20, 21, 22, 229, 230,
 234, 236, 237, 274, 282, 338,
 343
 집단주의 원칙 20, 21
 집단체조 278, 279



차판 장사 211
 천리마운동 30, 84, 281
 천안함 폭침 219
 철도신문 304
 청년교양보장법 76
 청년동맹 70, 237, 238, 334, 340
 청년전위 305, 306, 307, 308
 청산리방법 30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244, 245
 초급 당위원회 68
 초급중학교 321, 332, 333, 334,
 340, 343
 초모대상자 116
 총정치국 69, 70, 103, 104, 105,
 106
 총참모부 69, 70, 95, 102, 103,
 104, 105, 106, 109
 최고인민회의 28, 30, 31, 32, 4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3, 84, 85, 99, 100,
 116, 134, 135, 147, 154, 171,
 235, 307, 317, 3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73, 75,
 77, 134, 235, 307
 추모문학 288

7.1 조치 213, 269

ㄱ

카프(KAPF) 267

코로나19 24, 60, 61, 64, 76, 87,
159, 163, 164, 165, 167, 172,
175, 185, 208, 221, 249, 262

ㄴ

특별재판소 79, 81

특별작전군 113

ㄷ

8차 당대회 15, 17, 24, 32, 35, 44,
45, 48, 51, 55, 57, 59, 60, 61,
62, 63, 64, 67, 76, 86, 99, 113,
123, 154, 193, 318

평양방송 312, 313

평양신문 304

평화협정 133, 141, 149

폐연료봉 재처리 112, 121, 150

포전담당책임제 19, 203, 217

ㅎ

학생소년공전 341

한반도 종단철도(TKR) 166

혁명연극 275, 290

혁명적 수령관 34, 37, 286, 301

혁명적 수령론 31

협동적 소유 181, 228, 230

호위사령부 106, 107

화폐개혁 19, 214, 215

화학무기 126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220

희천발전소 196

참고문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23.
 ,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 『북한의 양면성』, 2013.
 ,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 『북한 주요기관별 인명록』, 2022.
 ,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2.
 , 『북한 지식 사전』, 2021.
 , 『통일백서』, 각 연도.
- 국방부, 『국방백서』, 격 연도
- 외교부, 『외교백서』, 각 연도
 , 보도자료, 각 연도
-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계간)』, 각 연도
-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연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각 연도.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 연도
 , 『주간 통일정세』, 각 연도
 , 『연례정세전망』, 각 연도
 , 『2009 북한개요』, 2009.
-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연도.
- 고재홍,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전망,” 『INSS 전략보고』 2018-21,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김보미·오일석, “김정은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INSS 전략보고』 No.14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김성경,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2022.
- 윤대규 외, 『동북아의 변화 동향 평가 및 전망』, KDI정책대학원, 2015.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패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 장용석 외, 『북한 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정은이,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 ,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현대북한연구』, 20권 제1호, 2017.
-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5.
-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통일연구원, 2016.
- 홍민, “공식시장의 규모와 분포 변화”, 『2022 북한 공식시장 조사 결과 : 규모와 분포, 장세 현황, 입지 변화』(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 2022.
- 홍제환·김석진·최지영·김수경,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통일연구원, 2020.
- 글로벌파이어파워, GFP 홈페이지(www.globalfirepower.com)

DPRK CBS : Population Projection(2014-2050),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6.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2021.

Eric Fish, "Chinese Youth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anging Behaviors and Values," 2015.

UNESC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and Literacy, 2018.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21, 2021.

U.S. Army Headquarters, "North Korean Tactics", July 2020, 2020.

WHO, WHO Immunization Data portal(<http://immunization.who.int>.)

『경제연구』(계간 혹은 격월간), 각 연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1983-84.

교육신문사, 『교육신문』(주간), 각 연도

『근로자』(월간), 각 연도.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일간), 각 연도. * 조선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일간), 각 연도. * 내각 기관지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2』, 1985.

『조선여성』(월간), 각 연도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50권(1979 이후)

『김정일선집』 15권(1992 이후)

『조선문학』(월간), 각 연도

백과사전출판사, 『광명 백과사전 7: 교육·언어·출판보도』, 2011.

2023 북한 이해

발행처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901-7178 FAX 02)901-7088

발행일 2023년 3월

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70-7728-7786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

* 사진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통일부, 조선DB, commons.wikimedia.org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557-000003-10

2023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